

201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2017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우)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8호



이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가 2017년 통계개발원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 소득·소비」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 소득·소비」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한국경제학회 구 정 모

연구책임자	박 정 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
공동연구자	강 신 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 기 석(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 무 상(서강대학교 혁신과경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변 준 석(통계개발원 사무관) 김 선 자(통계청 주무관)
연구보조원	이 우 석(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김 수 인(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신 동 한(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소득·소비·자산의 개념과 사회적 이슈	5
제1절 소득·소비·자산의 개념	5
1. 소득·소비·자산과 웰빙	5
2. 소득·소비·자산과 예산제약	9
3. 소득·소비·자산의 개념에 관한 쟁점	11
제2절 소득·소비·자산 관련 사회적 이슈와 취약인구집단	19
1. 사회적 이슈	19
2. 취약인구집단	27
제3장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31
제1절 국내외 통계프레임워크 사례	31
1. 해외 국가의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31
2. 해외 국가의 소득·소비·자산 작성 사례	61
3. 우리나라의 통계 작성 사례	83
제2절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89
1. 개요	89
2. 현재 및 미래 소비 영역	94
3.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98
4. 경제의 지속가능성	100
제4장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03

제1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103
1.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	103
2. 가계동향의 조사재개 여부와 관련한 고려사항	116
제2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실행계획	119
1.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19
2. 기타 이슈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23
제5장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131
제1절 주요지표 현황	131
1. 국가주요지표	131
2. 삶의 질 지표	136
제2절 평가 및 개선안	137
1. 국가주요지표 평가 및 개선안	137
2. 국가주요지표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140
3. 삶의 질 지표	143
참고문헌	145

표 목 차

[표 1]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2016년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연간 총금액)··	16
[표 2]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2016년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금액) ·	16
[표 3] OECD ICW(2013a) Framework의 소득 구성요소	39
[표 4] 목적별 개별 소비에 대한 분류	41
[표 5] 자산(assets) 및 부채의 구성요소	43
[표 6]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소득항목 정의	50
[표 7] 소득, 소비, 저축 : 국민계정체계의 주요 거래 및 관계	54
[표 8] 주요 국가들의 소득·소비·자산 통합조사 여부	59
[표 9] 주요 국가의 소득 통계 비교	67
[표 10] 주요 국가의 가구지출조사 조사설계 비교표	72
[표 11]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주요 개요	74
[표 12]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자료 수집 특성	77
[표 13]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구조	80
[표 14] 국가주요지표 중 소득·소비 영역 지표	83
[표 15] 우리나라 농가·어가·임가 가구 수 및 인구 수: 2015년 기준	84
[표 16] 가계동향의 주요 조사항목	84
[표 1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및 연도별 비교	86
[표 18] 현재 및 미래 소비	97
[표 19]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99
[표 20] 경제의 지속가능성	102
[표 21] 부문별 지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	126
[표 22] ‘성장과 안정’ 영역 지표체계	134
[표 23] ‘소득·소비·자산’ 영역 지표체계	135
[표 24] ‘소득·소비·자산’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142
[표 25] 삶의 질 지표 개선안 : 소득 · 소비 · 자산	144
[부록 표 1] 가구소득측정방법의 역사적 발전	147
[부록 표 2]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150
[부록 표 3] 가계동향조사 개요	151

[부록 표 4] 농가경제조사 개요	152
[부록 표 5] 임가경제조사 개요	153
[부록 표 6] 어가경제조사 개요	154
[부록 표 7] 재정패널조사 개요	155
[부록 표 8]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요	156
[부록 표 9] 한국복지패널조사 개요	157

그림 목 차

[그림 1]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절차도	4
[그림 2] OECD의 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체계	10
[그림 3]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저축률 추이	17
[그림 4] OECD ‘How’s Life?’ Initiative의 프레임워크	34
[그림 5]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OECD의 통계 프레임워크	39
[그림 6] OECD·Eurostat(2011) 연구의 가구분류표	56
[그림 7] 캐나다 소득 통계(CIS)의 조사 단위: 가구, 경제적 가족, 센서스 가족	66
[그림 8]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프레임워크	92
[그림 9]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자산 간 관계	94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과 소비는 자산과 더불어 한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임
 - 개인과 가구는 소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누림
 - 소득과 자산은 가구의 현재 및 미래의 소비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가용자원의 역할을 함
 - 따라서 한 가구가 지닌 경제적 후생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수준과 더불어 자산의 수준 및 그 가치의 변동을 모두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최근 가구의 경제적 후생 측정지표로서 소득의 불충분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형태의 취약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단위의 경제적 후생 측정지표로서 소득의 불충분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후생수준 및 그 변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문제, 1인가구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음
 - 하지만 기존 통계들만으로 현대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이슈의 심각성과 취약계층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본 연구는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에 대한 프레임워크(framework)을

- 작성하여 소득·소비·자산 관련 통계의 개선과 개발에 활용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생산되고 있는 통계 현황과 비교하며 미생산 필요통계를 발굴하고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나아가 미생산 필요통계와 기존 통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연구사례, 국제기구 권고사항, 학문적 성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프레임워크 구조화 작업을 수행함
 - OECD, EU, UN, ILO, World Bank, 영국 및 호주 통계청 등 각국의 정책 목표와 유럽 2020 사회통합목표(The Europe 2020 social inclusion target) 등을 종합하여 살펴봄
 - 소비지출을 위한 가용자원의 적절성, 지속가능한 경제적 후생을 위한 소득의 안정성, 소득분배 측면의 형평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사회적 쟁점을 확인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 설정 및 구분의 표준화를 하여 소득·소비·자산 영역과 웰빙(wellbeing)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자 함
 - 취약집단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및 장애가구, 소년소녀가장 등을 식별함
 - 중요 사회적 이슈로는 물질적 빈곤율, 소득불평등 및 소비불평등, 하우스푸어 등을 반영함
 -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를 선정시 자료수집 가능성과 자료의 원천, 주기 등을 검토함
 - 자료수집시 국제기준 존재여부 및 적용 가능성, 분류방법, 주기 등을

고려하고 자료원천으로는 행정통계와 조사통계로 자료 수집 가능성 여부를 고려함

-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함
 -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통계와 지표를 확인하고, 이들의 작성방법, 이들이 경제적 후생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함
 -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 파악하고 기존 통계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그리고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신규 생산 방안을 도출함
 -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실행계획(우선 추진 순서, 추진방법, 추진주체 등)을 제시함

제2장 소득·소비·자산의 개념과 사회적 이슈

제절 소득·소비·자산의 개념

- 소득, 소비, 자산은 모두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들로서 개인의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따라서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 구성 및 개인간 분배에 관한 통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득이란 특정 기간에 개인 혹은 가구가 수령한 모든 경제적 자원(금전적 혹은 비금전적(현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유량(flow) 변수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함
 -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퇴직금 등은 소득에 포함시키는 대신 자산 증가로 분류됨
 -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도 소득인 동시에 소비지출로 포함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소비는 인간의 필요와 결핍을 직접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함
 - 소비는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 통계의 단위로는 개인보다 가구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 가구 소비를 개인당 소비로 환산하기 위하여 균등화 (equivalisation) 과정을 거치기도 함
 - 소비도 원칙적으로는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종 조세, 이자, 연금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은 소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 아니므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함
 - 가계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며 여기서 다시 소비 지출을 차감한 것이 저축이고, 저축은 곧 순자산의 증가로 이어짐
- 자산은 특정 시점에 개인 혹은 가구가 보유한 모든 경제적 자원의 총량 (stock)으로서 보다 엄밀하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개념에 해당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순자산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모두 중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채와 자산의 크기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측정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음.
- OECD ICW(2013a)에 의하면 개인의 후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최선의 지표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소비, 자산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각 지표가 제공하는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소비 결정은 현재의 소득과 자산의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개인의 소비 수준이 바로 개인의 일생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금기의 소비 역시 질병, 자녀의 결혼, 이사 등 일시적 충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통계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소득, 소비, 자산 세 항목 모두 강한 연령별 패턴을 나타내므로 경제적 자원의 개인간 비교 혹은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소비, 자산의 연령별 패턴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인의 만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자원의 개인간 분배가 경제적 웰빙의 개인간 분배를 결정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의 경제적 웰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구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 및 개인간 분배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후생의 분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소득, 소비, 자산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소비, 자산의 결합분포 혹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s)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소득, 소비, 자산의 개념에 관한 쟁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상과 위험 및 불확실성, 교육비 지출에 대한 처리, 가구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처리 등이 있으며,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와의 일관성 유지가 제기됨

제2절 소득·소비·자산 관련 사회적 이슈와 취약인구집단

- 관련 사회적 이슈의 이론적 측면은 첫째 경제적 자원의 크기 혹은 수준(level)의 문제, 둘째 소득·소비·자산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사이의 비중의 적절성, 셋째, 소득·소비·자산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문제들은 정태적이기도 하지만 동태적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가 정태적 속성을 띠는지 동태적 속성을 띠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함
 -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적 쟁점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혹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지는 전적으로 각 사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기마다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달라지기도 함
 - 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으로는 빈곤, 불평등, 중간소득계층의 위축, 소득이동성, 소득분배상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들 수 있음
 -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으로는 집단 간 소비의 격차, 적자가구, 분야별 지출의 과부담이 제기됨
 - 자산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으로는 자산의 빈곤과 불평등, 가계 부채의 문제, 자산 구성을 들 수 있음
- 취약인구집단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소득 및 자산 분포상의 지위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노동시장에서 기회 상실이나 차별 등에 의한 취약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
 - 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한부모가구나 조손 가구, 1인가구 등의 취약집단이 있음
 - 소득 및 자산분포상의 지위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빈곤층이며, 또한 최근에는 근로빈곤층이나 기초보장수급가구 등이 있음

제3장 소득·소비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제1절 국내외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 해외의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사례들을 살펴보면, 시대적·정책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먼저 작성하고 사후적으로 관련 통계들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귀납적 방식을 취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오래된 통계 프레임워크로는 국민계정체계를 들 수 있으나, 총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프레임워크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음
 - 가계 소득, 소비 및 자산에 관한 미시적 수준의 통계를 작성·분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OECD의 ICW(2013a)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미시적 차원의 가구단위 자산통계에 대한 최초의 국제기준은 OECD ICW(2013a)의 동반보고서인 OECD Wealth(2013b)를 들 수 있음
 - 가구단위 소득통계의 작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공하는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은 가구단위 소득에 관한 대표적인 통계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음
- 한편, 거시경제지표와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구단위 지표와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와 유럽통계국(Eurostat)이 2011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가 존재함
 - 여기에서는 기존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구그룹 간의 격차에 대한 국민계정의 개념 및 총계와 일치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공동 노력에 착수하였음
- 해외 국가의 소득·소비·자산의 작성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는 비교대상 사례 통계를 선정한 뒤, 사례통계의 조사항목, 작성통계의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함
 - 비교대상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스라엘을 선정하였음
 - 사례통계의 조사항목은 소득·소비·자산 각각의 항목에 대해 비교함

- 우리나라의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대한 가구단위 통계의 작성사례를 검토함
-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가계동향조사, 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가 있음

제2절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소득·소비·자산 분야에 대한 통계프레임워크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함
 -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
 - 둘째,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 셋째, 가급적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우선함
- 소득·소비·자산 통계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다음 세 개의 영역을 제시함
 - 가구의 현재와 미래 소비
 -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개인 및 가구의 파산 위험
 - 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 측면의 지속가능성, 소득과 자산의 분배적 불균등
- 첫 번째 영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이며,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소비라고 볼 수 있음
 - 소득 발생의 원천과 소비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산(assets)과 부채의 변화를 살펴보아 미래 소비를 예측하고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함

[요약문 표 1] 현재 및 미래 소비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시장소득 ◦ 가구 가처분소득 ◦ 가계 처분가능총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득의 원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가구 소득의 증가율 ◦ 가계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 ◦ 조세부담률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 가계 처분가능소득 ◦ 1인당 GDP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비 ◦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의 구성 ◦ 비탄력적 소비의 비율 (의식주, 교육, 통신, 의료 등) ◦ 비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연금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구성 (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저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 보조지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별 상세표 제시

- 두 번째 영역은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구가 가구원들의 생애에 걸쳐 경제적 웰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 가구가 경제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순자산과 소득 흐름이 충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구의 재무적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 그리고 기타 이유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존재임

[요약문 표 2]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	------	------	--------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구성 (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저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위험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비율 ◦ 부실위험가구의 비율 ◦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수 ◦ 부실위험가구의 수 ◦ 후자가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비율

* 보조지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별 상세표 제시

- 세 번째 영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 전체에 대한 소득과 자산의 분배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경제전체 차원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임
- 소득, 소비, 자산의 규모에 따른 가구별 분포를 도출하여 경제내 가구 간 경제적 웰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소득불균등의 수준, 소득계층 고착화 등 사회내 잠재되어 있는 갈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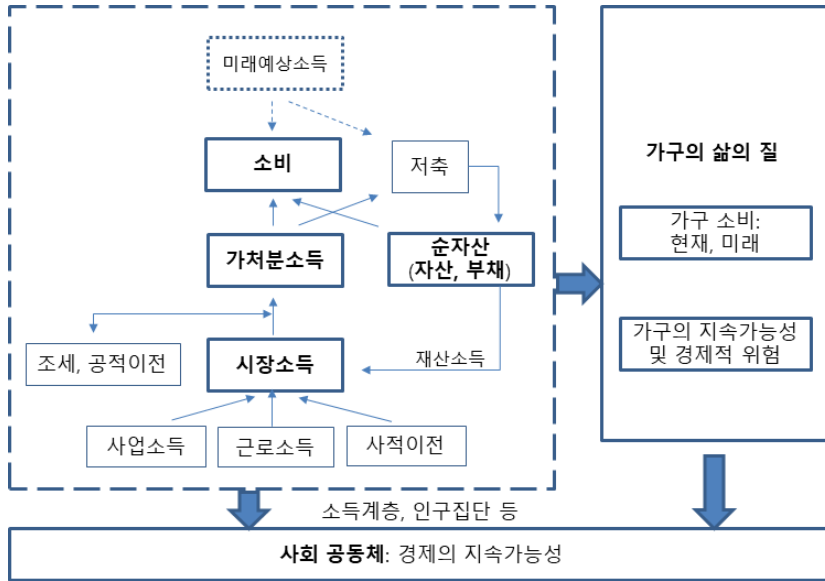
[요약문 표 3] 경제의 지속가능성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 5분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빈곤률 (단기, 장기) ◦ 고령가구 빈곤률 ◦ 중산층 비율 ◦ 자산 5분위배율 ◦ 자산의 소득계층별 점유율 ◦ 소득과 자산 결합분포 ◦ 소득재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 5분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이동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탈출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탈출률 ◦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으로 소득, 소비, 자산

을 구성하는 요소 간에 기본적으로 관계를 명시하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과의 관계를 제시함

[요약문 그림 1]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프레임워크



제4장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제1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로는 주로 통계 작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에 기인한 문제들이 있음
- 현재 및 미래 소비 측정과 관련된 이슈로는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의 결합, 소비자자료의 정확성, 조사품목수 과소문제, 내구재, 비탄력적 소비지출을 들 수 있음
-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과 관련된 이슈로는 자산 측정에 있어서 행정자료와의 결합, 연금의 처리가 있으며, 한편 경제적 위험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파악이 있음

-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로는 소득분배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지니계수의 문제와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이 제기됨
- 기타 이슈로는 조사단위의 문제(개인vs가구), 횡단면 대표성 확보 방안과 가중치 등이 있음

제2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실행계획

- 통계개선방안에 따른 실행계획은 우선 추진 순서, 추진방법, 추진주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우선 추진 순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異論)이 없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것들을 우선 추진함
 - 이후의 추진은 개선의 난이도가 용이한 것부터 그리고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것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방법은 통상적 통계개선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연구에 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 및 통계 이용자, 정책입안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주체는 주로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이 담당할 것이나 일부 통계의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임

제5장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제1절 주요지표 현황

- 우리나라 통계의 주요 지표로는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를 들 수 있음
 -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wellbeing)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통계임

- 삶의 질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통계임
- 국가주요지표 중 ‘소득과 소비’ 영역은 소득, 자산, 소비, 물가의 4개 하부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 삶의 질 지표는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소득과 관련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등 세 개의 지표, 소비와 관련하여 ‘가구소비’와 ‘소비생활 만족도’ 등 두 개의 지표, 자산과 관련하여 ‘가구평균 순자산’, 그리고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지니계수(불평등도)’와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 두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제2절 평가 및 개선안

-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구 미시자료의 활용, 거시자료와 미시자료의 일관성 증대, 미래에 대한 예상 및 위험/불확실성의 지표 추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득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분배관련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미시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시자료와 미시자료 간의 괴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기초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함
 - 가능한 한 미래의 예상 수입을 현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행정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소득·소비·자산 항목에 대한 각 지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소득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지표는 균등화 중위소득으로 계산되어 왔으나 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소비와 관련하여 ‘가구소비’지표 또한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직접적인 지표로 역할을 하며 적절하며 중요한 지표라 보여지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출자료의 정확성이며, 비동거 구성원에 대한 지출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산과 관련하여 ‘가구평균 순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구 소득대비부채 비율’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지니계수’와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3절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 국가주요지표의 ‘소득과 소비’ 영역에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구 소득의 경우 본원소득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가처분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비영역에 있어서 자가거주 가구의 귀속임대료를 추정하여 소득과 소비에 동일하게 포함시키며,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지출의 크기에 따라 5분위 집단들을 구분한 다음 각 분위별로 소득, 소비, 순자산의 평균 크기를 살펴봄
- 자산 하위영역에는 순자산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지표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자산(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가구 순자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계저축률은 국민계정 외에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부터도 계산될 수 있으므로, 두 저축률을 모두 제시할지 아니면 어느 한 저축률을 제시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추가영역으로 미시자료에 조사되어 있는 가구별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취약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소득 측면에서의 취약집단, 소득 위험 혹은 소득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소득분위별 유산 및 상속액의 크기는 세대간 소득이동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는 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적 고려에 의해서 파악될 필요가 있으므로, 순자산의 크기에 따라 5분위 집단들을 구분한 다음 각 분위별로 소득, 소비, 순자산의 평균 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득과 소비는 자산¹⁾과 더불어 한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들이다. 개인과 가구는 소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누린다. 가구의 현재 및 미래의 소비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가용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득과 자산이다. 한편 자산은 가구가 생애에 걸쳐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부분과 금융부문으로부터 빌리는 부채를 기초로 구성한다. 이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소득, 자산, 부채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한 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력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통계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통계프레임워크란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함께 이에 필요한 추상적인 지표, 상응하는 정량화된 지표, 그리고 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DB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문제, 1인가구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구의 지출구조 변화로 있었으며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빈곤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 상승, 통신비 비중의 상승, 하우스푸어의 등장 등 전통적인 취약집단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1) 본 연구에서는 ‘wealth’를 ‘자산(wealth)’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wealth’를 자산으로 번역하면 우리말의 ‘자산(assets)’과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 ‘assets’을 의미하는 경우는 ‘자산(assets)’이라 영문을 병기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밝히고 특별히 병기하지 않는 경우 자산은 ‘wealth’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 점에 대한 독자들의 혼동이 없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7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계부채는 끝없는 상승추이를 그리며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가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응하여 그동안 통계청과 기타 정부부처들은 정책입안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소득·소비·자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존 통계들만으로 현대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예전부터 정해진 통계의 구성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의 심각성과 취약계층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후생수준 및 그 변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구단위 소득·지출을 동시에 조사하는 다목적 통계로서 ‘가계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다목적 통계는 응답부담으로 저·고소득층 조사가 곤란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가구자산통계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으나 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나 소비에 비해 측정상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에 대한 통계프레임워크를 새로이 구축하여 소득·소비·자산관련 통계의 개선과 개발에 활용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신규로 필요로 하는 통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과 주목받고 있는 취약집단을 감안하고 최근 국제기구 권고사항들과 해외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대한 새로운 통계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실제 생산되고 있는 통계 현황과 비교하며 미생산 필요통계를 발굴하고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미생산 필요통계와 기존 통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2장에서 소득, 소비, 자산, 부채가 어떻게 정의되고 서로 연관되는지 살펴보고, 각 개념에 대한 쟁점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이 정책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취약 인구집단을 세분하여 제시한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사회적 쟁점을 확인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 설정 및 구분의 표준화를 하여 소득·소비·자산 영역과 웰빙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에 참고한다. 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및 장애가구 등 취약 인구집단을 식별하고 빈곤율, 소득불평등 및 소비불평등 등 중요한 사회문제를 반영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해외 연구사례, 국제기구 권고사항, 학문적 성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통계프레임워크 구조화 작업을 수행한다. OECD, EU, UN, ILO, World Bank, 영국 및 호주 통계청 등 각국의 정책 목표와 유럽 2020 사회통합목표(The Europe 2020 social inclusion target)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비지출을 위한 가용자원의 적절성, 지속가능한 경제적 후생을 위한 소득의 안정성, 소득분배 측면의 형평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OECD에서는 경제적 후생에 대한 화폐적 측정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규모, 소득분포 등의 대안지표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량지표를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를 선정시 자료수집 가능성과 자료의 원천, 주기 등을 검토한다. 자료수집시 국제기준 존재여부 및 적용 가능성, 분류방법, 주기 등을 고려하고 자료원천으로는 행정통계와 조사통계로 자료 수집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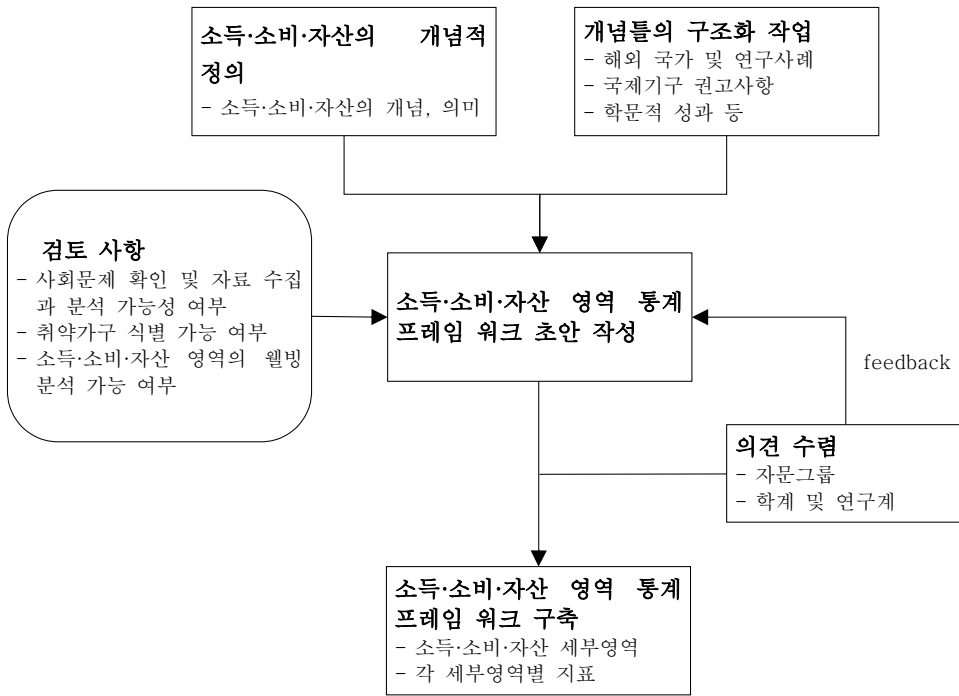
4장에서는 새로운 통계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지표 및 DB 개선방안과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한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통계와 지표를 확인하고, 이들의 작성방법, 이들이 경제적 후생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 파악하고 기존 통계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

4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선방안, 그리고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신규 생산 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실행계획(우선 추진 순서, 추진방법, 추진주체 등)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새로운 통계프레임워크를 감안하여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림 1]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절차도



제2장

소득·소비·자산의 개념과 사회적 이슈

제1절 소득·소비·자산의 개념

1. 소득·소비·자산과 웰빙

가. 소득·소비·자산의 측정

소득, 소비, 자산은 모두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들로서 개인의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 구성 및 개인간 분배에 관한 통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소득이란 특정 기간에 개인 혹은 가구가 수령한 모든 경제적 자원(금전적 혹은 비금전적(현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유량(flow) 변수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다. 단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퇴직금 등은 소득에 포함시키는 대신 자산 증가로 분류된다.²⁾ 한편 OECD(2013a)의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이하 OECD ICW(2013a))에 의하면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도 소득인 동시에 소비지출로 포함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구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주

2)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경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으나,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적인 수입 중에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상속, 증여,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본이전(capital transfer)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전과 비경상소득의 구분은 비정기적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목적별 개별소비지출 분류(COICOP) 체계를 반영하여 자본이전(증여, 상속)은 비경상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제외하고 자산의 증감에만 반영하고 있다.

거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주거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귀속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비롯한 미시자료에서는 귀속임대료의 계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다음으로 소비는 인간의 필요와 결핍을 직접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소비는 웰빙 혹은 후생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항목으로서, 소득이나 자산도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통하여 개인의 후생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주택(주거 서비스) 소비의 예에서 보듯이 소비는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 통계의 단위로는 개인보다 가구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 가구 소비를 개인당 소비로 환산하기 위하여 균등화(equivalisation)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도 원칙적으로는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계정의 경우 자가거주 가계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귀속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재산소득과 주거 서비스 지출에 동시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미시자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각종 조세, 이자, 연금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은 소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 아니므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한다. 가계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며 여기서 다시 소비 지출을 차감한 것이 저축이다. 저축은 곧 순자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자산은 특정 시점에 개인 혹은 가구가 보유한 모든 경제적 자원의 총량(stock)으로서 보다 엄밀하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순자산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모두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0인 경우와

3)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귀속임대료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OECD ICW(2013a)의 권고사항과 같이 이를 가구소득 및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귀속임대료의 총계결과에 대해서도 지표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가구단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조사되었고 현재는 폐지되었으며, 가구지출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조사’로 대체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의 108p이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산이 200이고 부채가 100인 경우의 순자산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위험의 크기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부채가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자산과 부채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미시자료에서 소득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계가 부채 조달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순자산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비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가계가 새로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귀속임대료가 가처분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자지급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시자료에서 귀속임대료가 소득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자산의 크기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와 자산의 크기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측정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나. 사회경제적 웰빙과 소득·소비·자산의 통합적 고려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의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와 OECD의 ICW에 의하면 개인의 후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최선의 지표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소비, 자산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각 지표가 제공하는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은 이번 기에 발생한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해당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활동 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자산은 과거의 여러 기간 동안 발생한 저축 및 자산이전이 축적된 결과로서, 현재보다 과거의 경제적 활동 능력을 주로 반영한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현된 경제적 자원으로서 개인 혹은 가구의 소비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및 자산의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소비도 반드시 같이 높거나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고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은 현재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이 낮더라도 차입을 통하여 미리 소비

수준을 높게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개인은 현재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이 높더라도 현재의 소비를 비례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소비 결정은 현재의 소득과 자산의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소비 수준이 바로 개인의 일생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도 있다.

단, 소비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예상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가 소득이나 자산보다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금기의 소득이 여러 가지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기의 소비 역시 질병, 자녀의 결혼, 이사 등 일시적 충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통계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소비, 자산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세 항목 모두 강한 연령별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애주기를 보면 소득, 소비, 자산은 모두 대체로 중장년기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역 U자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의 개인간 비교 혹은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득, 소비, 자산의 연령별 패턴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의 만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self-reported subjective well being) 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개인의 만족도는 자신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일정할 때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속한 다른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의 후생 혹은 만족도는 자신의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개인간 분배가 경제적 웰빙의 개인간 분배를 결정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의 경제적 웰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 및 개인간 분

배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후생의 분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소비·자산과 예산제약

소득, 소비, 자산 간의 회계적 관계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의 예산제약식(budget constraint)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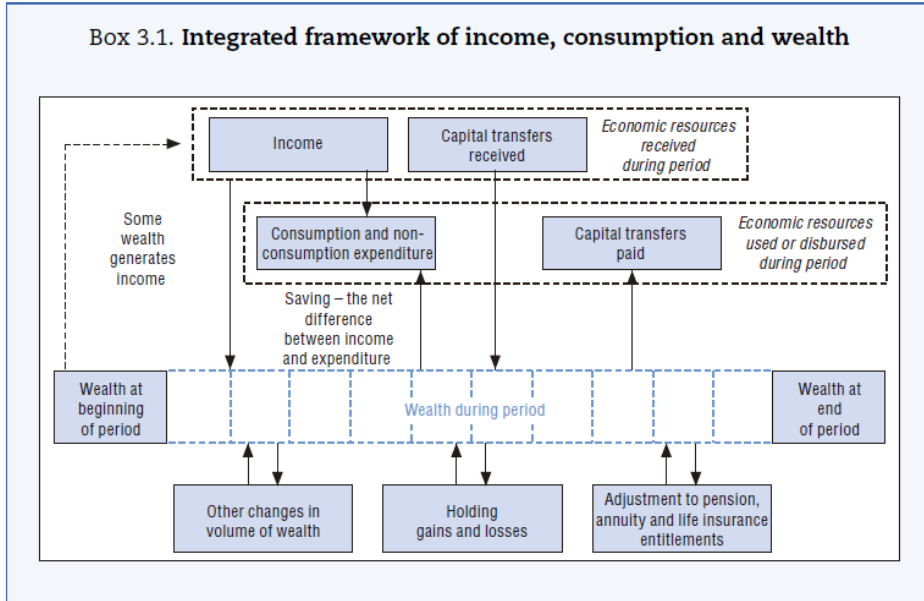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자산}_t &= \text{자산}_{t-1}(1+r_t) + \text{소득}_t - \text{소비}_t \\ &= \text{자산}_{t-1} + \text{자산}_{t-1}r_t + \text{소득}_t - \text{소비}_t \\ &= \text{자산}_{t-1} + \text{총소득}_t - \text{소비}_t \end{aligned} \quad (1)$$

위 식에서 자산_t는 t기말(혹은 t+1기초)의 순자산, 소득_t는 t기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소비_t는 t기의 소비지출을 나타내며, r_t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자본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추상적인 자산수익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나타내는 소득_t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자산_{t-1}r_t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서 자산_{t-1}r_t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개인의 총소득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단, 식 (1)에서 모든 소득은 세금과 이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나타내며, 이전소득은 음(-)의 이전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화를 위하여 증여나 상속과 같은 자본이전(capital transfer)은 식에서 생략되어 있다.

식 (1)의 총(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부분이 저축이다. 저축에는 통상적인 예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 등도 포함되며,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도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킴으로써 순자산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저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에 대한 납입금은 이전지출로 분류되어 가처분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은퇴 이후의 개인연금 수령액은 경상소득에 포함되며, 공적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⁴⁾

OECD의 ICW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득, 소비, 자산의 상호연관성도 기본적으로 식 (1)과 유사한 예산제약식에 기초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OECD의 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체계



출처: OECD ICW(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한편 위의 예산제약식에 의하면 소득, 소비, 자산은 서로 동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식 (1)을 풀면 다음과 같이 개인의 일생 동안의 모든 기간에 걸친 생애 예산제약식(life-time budget constraint)을 구할 수 있다.

4) 단, 공적연금 수령액 중에도 개인연금 수령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납부액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을 이처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자산}_{t-1} + \frac{\text{소득}_t}{1+r_t} + \frac{\text{소득}_{t+1}}{(1+r_t)(1+r_{t+1})} + \frac{\text{소득}_{t+2}}{(1+r_t)(1+r_{t+1})(1+r_{t+2})} + \dots \quad (2) \\ & = \frac{\text{소비}_t}{1+r_t} + \frac{\text{소비}_{t+1}}{(1+r_t)(1+r_{t+1})} + \frac{\text{소비}_{t+2}}{(1+r_t)(1+r_{t+1})(1+r_{t+2})} + \dots \end{aligned}$$

위 식은 개인의 남은 생애 동안의 모든 소비의 현재가치의 합이 자산과 모든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과 같아야 함을 보여준다.

소득, 소비, 자산 간의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소비, 자산의 결합분포 혹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많거나 혹은 자산이 낮더라도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빈곤층의 파악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자원이전이 필요한 집단의 파악과 재분배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소득과 소비의 결합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시자료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나 자산의 파악이 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소비나 자산에 대한 조사가 보다 보강될 필요가 있다.

3. 소득·소비·자산의 개념에 관한 쟁점

가. 미래에 대한 예상

경제적 자원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식 (2)의 생애 예산제약식에 보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는 현재의 자산과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도 포함하여야 한다.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현재가치화하여 더한 값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할 때, 식 (2)는 일생 동안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산(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크기임을 보여준다. 모든 경제적 자원

을 자본의 개념으로 표시하는 Harper and Price(2011)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외에 사회적자본과 자연자본까지 경제적 자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자본 즉 경제적 자원으로부터 사적 및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되고, 개인 혹은 가구는 이를 소비함으로써 후생을 누리게 된다.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 역시 이와 비슷하게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자본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적자본의 개념은 미래의 소득에 대한 예상 및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이자율에 대한 예상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각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실제로 실현되는 소득 및 이자율의 값은 예상치와 일반적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본은 아니지만 미래에 수령할 연금, 생명보험 등의 가치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상과 할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예상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금소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OECD pension model은 국가별, 소득그룹별로 연금산식, 기대여명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연금소득의 흐름을 현재가치화한 연금자산(pension wealth)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만일 미래의 예상되는 연금소득이 클수록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의 축적 필요성이 낮아진다면,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자산과 연금자산(pension wealth)의 추정치를 같이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 결정이 미래의 소득에 대한 예상까지 반영하여 결정된다면,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이 가장 유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자산과 소득이 “예산”이며 소비는 이 “예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개인들은 “예산”의 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 소비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소비 자체가 바로 “예산” 혹은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대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 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크기만이 아니라 개인 및 가구의

선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물질자본과 인적자본의 크기가 동일한 두 개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에 대한 상대적 선호의 차이에 따라 일생에 걸친 소비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수요충격 때문에 특정 기간의 소비가 경제적 자원의 크기와 무관하게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므로, 가급적 미래의 예상소득에 대한 별도의 추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위험 및 불확실성

미래의 소득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는 위험 및 불확실성의 고려도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미래 소득에 대한 예상은 소득의 기댓값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의 결정은 소득의 기대치만이 아니라 소득의 변동성 혹은 위험의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위험기피적(risk averse)이므로, 미래 소득의 기댓값이 동일하더라도 표준편차가 큰 경우나 극단적으로 낮은 값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후생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개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감소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앞에서 개인의 예산제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크기 모두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자산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자산과 부채가 모두 커질 경우에는 그만큼 채무불이행 및 파산의 위험도 커지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험기피적인 개인들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미래 소득의 기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위험 및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 소득 위험 및 불확실성의 지표는 일반적으로 패널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위험 및 불확실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이다. 이행행렬은 한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 혹은 가구들이 다음 기에 다른 소득계층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

으로 소득의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동일한 소득계층에 머문 개인들보다 다른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개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어떤 개인의 소득계층간 이동은 미리 예상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행행렬은 소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바로 위험 및 불확실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개인의 소득계층간 이동이 미리 예상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이동에 불과하다면 그다지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행행렬은 위험 및 불확실성 외에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의 지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계층 고착화의 가능성이 낮고 특히 한 개인이 저소득계층 혹은 빈곤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행렬은 주로 소득 위험보다는 소득이동성의 척도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행행렬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들의 횡단면적 분포에 기초한 지니계수나 빈곤률 등의 지표는 보통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지만, 각 개인이 미래에 저소득층에 속할 위험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위험 및 불확실성의 지표로서도 해석될 수 있다.

다. 교육비 지출

교육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비 항목 중의 하나로 분류되나,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지출이라는 면에서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저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의 장래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총생산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물적자본의 축적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지출도 저축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OECD는 교육비 지출을 포함하는 genuine saving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Genuine saving adjusts SNA saving by deducting the value of depletion of the underlying resource asset and pollution damages, and considers current educational spending as an increase in saving, since this spending may be considered to be a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rather than consumption, as in the traditional national accounts).”

교육비 지출이 소비보다 저축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후생 또한 현재의 통상적인 소비보다는 교육비 지출을 차감한 값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라. 가구 내 생산

원칙적으로 볼 때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는 소득과 소비지출에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의 경우 자가 거주자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준하여 귀속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재산소득과 주거 서비스 지출에 동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계 미시자료 중의 하나인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각 가구의 월세평가액에 대한 추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가구의 소비나 소득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OECD의 ICW는 주거서비스 외에 일반적인 내구재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귀속가치를 추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내구재만이 아니라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급 생산활동의 가치를 소득과 소비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통상적인 소득 및 소비 지표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훨씬 축소될 수 있다. 각국의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결과를 이용한 OECD의 2011년 추정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들에 있어서 무급 생산활동의 가치는 GDP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일관성: 저축률을 중심으로

거시자료는 모든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자원의 개인간 분배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반면 미시자료의 경우에는 개인간 분배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일부 표본

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되듯이 측정이 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저축률은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약 9.3%(순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8.1%)인 반면, <표 2>에 나타난 가계동향조사의 흑자율은 약 28.9%로서 훨씬 더 높게 추정된다. 또한 <그림 3>을 보면 두 저축률 지표는 평균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시간적 추이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2016년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연간 총금액)

	단위: 십억원	단위: %
순처분가능소득 (A)	875,365.9	100
사회적 현물 순이전 (B)	131,875.0	
순조정처분가능소득 (A+B)	1,007,240.9	(100)
최종소비지출 (C)	798,364.1	91.2
실제최종소비 (C+B)	893,960.3	(88.7)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D)	4,750.0	
순저축 (A-C+D)	81,751.9	9.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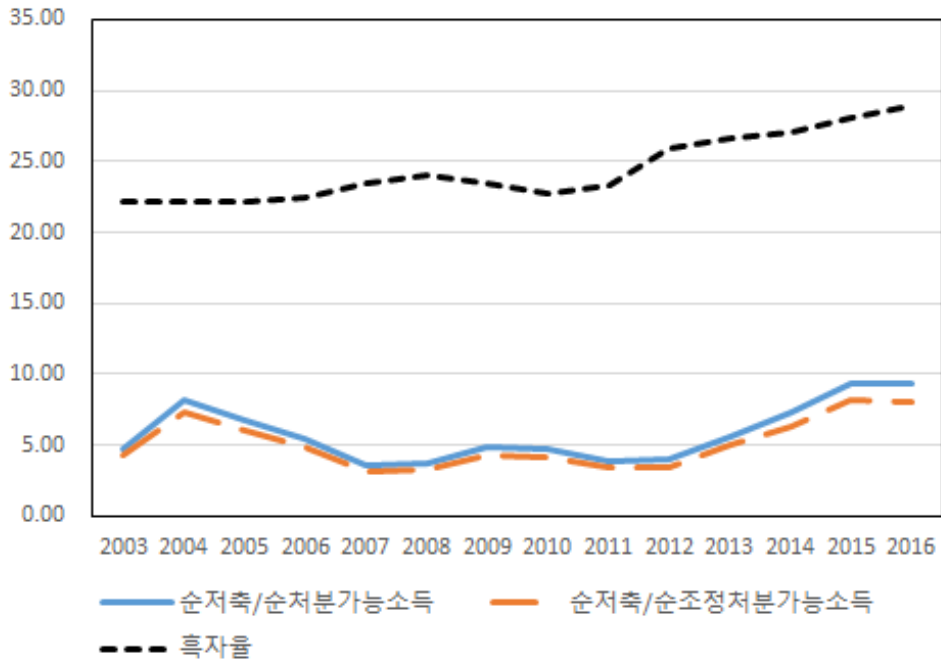
주: ()안은 순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임.

[표 2]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2016년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금액)

	단위: 원	단위: %
처분가능소득 (A)	3,587,526	100
소비지출 (B)	2,549,731	71.1
흑자액 (A-B)	1,037,794	28.9

주: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은 대체로 유사함.

[그림 3]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의 저축률 추이



거시자료와 미시자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국민계정의 부문별 소득계정은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합쳐서 다루지만 미시자료에서는 가계만을 따로 다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에는 미시자료와 달리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소득과 소비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표 1> 및 <표 2>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과 소비에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in-kind transfer)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시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과 소비에는 자가소유 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시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사회적 현물이전과 귀속 임대료 등의 항목들이 미시자료에 추가된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같은 크기 만큼 증가하게 되어 흑자율(=(가처분 소득-소비)/가처분 소득)이 하락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계정 저축률과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5)

국민계정과 미시자료 간의 불일치는 이러한 개념적 차이 외에 미시자료에 수반되는 측정의 어려움에도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미시자료에서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무응답·불성실응답 비율이 높는데, 전체 표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의 무응답·불성실응답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에 대한 응답부담이 더 높아서 소비가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가구의 조세부담 또한 과소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계정과 미시자료 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단, <표 1>, <표 2> 및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계정에서 사회적 현물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순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민계정의 저축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사회적 현물 이전이 국민계정과 미시자료의 저축률 차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서비스가 전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귀속 임대료를 반영하는 것은 가계 저축률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절 소득·소비·자산 관련 사회적 이슈와 취약인구집단

1. 사회적 이슈

가. 사회적 이슈의 이론적 측면

가구나 개인이 보유한 소득·소비·자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경제적 자원의 크기 혹은 수준(level)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 소비가 결핍되어 발생하는 문제 등은 모두 경제적 자원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둘째는 소득·소비·자산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사이의 비중이 적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특정 소득원천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의 측면을 보면 외적인 충격에 취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한 소득·소비·자산의 크기가 각기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소득·소비·자산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이다. 각 경제주체별 소득수준이 결핍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격차나 불평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득·소비·자산과 관련하여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위의 세 쟁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즉 소득과 관련된 문제를 수준, 구성, 분포와 관련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고, 역시 소비와 자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구분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시점이나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정태적)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시점에 걸쳐 혹은 세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동태적). 어떤 사회문제가 정태적 속성을 띠는지 동태적 속성을 띠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논리적 쟁점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혹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지는 전적으로 각 사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원의 결핍과 부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소득·소비·자산의 수준이 사회적 관심이 될 것이다. 반면 집단 내에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거나 하위 집단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회에서는 소득·소비·자산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큰 문제로 간주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소득보다는 자산의 격차가 주목을 받기도 한다.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기마다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사회적 쟁점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우선 국한하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 쟁점의 상대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후 언급될 문제들은 과거나 미래에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1) 빈곤

소득의 수준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가 빈곤(poverty)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빈곤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엄밀히 말해 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 물론 실제로 사람들의 씹씹이를 보여주는 경제적 변수는 소비라는 점에서 빈곤을 설명할 때 소득 대신 소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득이 경제주체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대리변수라는 점에서 빈곤을 소득의 부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때 ‘부족’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을 흔히 빈곤선(poverty line 또는 poverty threshold)라고 한다. 즉 조작적으로 정의된 빈곤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혹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빈곤선의 결정은 빈곤 자체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빈곤퇴치를 논의할 때에는 하루당 미화 1~2달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빈곤의 의미는 인간이 생존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된다. 한편 빈곤에 관한 선진국 간의 비교에서는 각 국가의 중위소득의 40~60%에 해당되는 값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빈곤은 각 사회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개념이 된다. 즉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일정한 수준 이하에 위치한다면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불평등

집단별로 소득이 고르지 못하고 차이가 심할 경우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 불평등이 심하면 집단 간 웰빙의 격차나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까지는 빠른 경제성장과 평등한 분배를 상대적으로 잘 조화시킨 국가로 인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니계수나 소득 10분위(5분위) 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 및 통계적 방법이 활용되면서 소득분포의 최상위층(최상위 1% 또는 5% 등)이 차지하는 소득분포의 비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3) 중간 소득계층의 위축

지니계수나 계층별 소득점유율에 주목하는 것은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소득의 균분 상태로부터 얼마나 이탈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소득을 $1/N$ 씩 나누어 가진 상태를 기준 상태로

보고 실제 소득분포가 그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소득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사회가 반드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규범적 가치 판단에 입각하여 소득 분포가 바람직한지를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간 소득층의 위축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중간 소득층(middle income class)은 한 사회를 소득수준에 따라 상, 중, 하층으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 계층을 의미한다. 흔히 ‘중산층’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사회는 상층과 하층의 극단적 분포를 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보아 ‘두터운 중산층’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중산층이 위축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이 선거에서 정책 구호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4) 소득 이동성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태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빈곤에 관한 동태적 문제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다. 빈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빈곤진입 또는 빈곤화)은 많지 않을수록 좋다. 반대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현상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빈곤에 대한 동태적 지위 변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규범적 해석이 분명하지만, 상대적인 소득지위의 변동, 즉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규범적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소득이동은 소득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변하게 되는 상향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하향 이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동을 모두 합하여 소득 이동이라고 하고, 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소득이동을 경험하는지를 소득이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한다.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란 계층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하위 소득계층이 노력 여하에 따라 중상위 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층이 중하위 소득

층으로, 중간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회가 실제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소득계층간 이동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이다. 최근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국가비교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위대한 갯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으로 정의하고 있다 (Krueger, 2012; Corak et. al. 2014). 부모-자식간 소득계층이 고착화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소득계층이 정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득계층 간 갈등을 초래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아야 한다.

5) 소득분배상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더 많이 필요해진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지출 등 다양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은 흔히 정부의 개입(이전 소득(급여) 지급, 조세 징수, 사회보험부담금 징수 등)이 있기 전후의 소득을 이용하여 분배지표를 구한 후 그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 한국의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다.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

1) 집단 간 소비의 격차

가구와 개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지출을 하고, 소득과 소비는 안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소비지출을 통하지 않고서

향유하는 재화도 있을 수 있고(사회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현물과 서비스 등),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소비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비의 수준, 분포, 구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은 소득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앞서 소득에서 살펴본 사회적 쟁점들 가운데 다수는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소비에서의 집단간 격차를 논할 때 소득계층별로 특정 소비지출의 격차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계층 간 공·사교육비 지출 격차이다. 고소득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가 저소득층에 비해 크다는 점은 소득 지위의 대물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적자 가구

소비에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적자가구의 문제이다. 적자 가구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보다 작은 가구를 의미한다. 가구의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가구원들이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지출 욕구가 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소득 이외의 여타 수입(자산(assets)의 매각,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력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적자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적자가구의 구체적인 정의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어느 범주까지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적자가구가 저소득층을 넘어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 분야별 지출의 과부담

소비의 총량이 소득에 비해 큰 것도 문제이지만, 특정 소비 항목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소득 대비 비율이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때의 특정 소비항목이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같이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작은 부문에 대해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분야의 욕구(need)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가구 소득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면, 그리고 그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불가능한 상태라면(예를 들어 가구원 가운데 난치병 환자가 있다면), 이 가구 구성원들의 다른 분야에 대한 소비욕구는 억제되거나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정 소비 지출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비 가운데 대부분을 사교육비가 차지한다면 이 가구의 경우가 특별히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직적인 지출항목 가운데에는 소비지출 이외에 지급이자나 부채상환액 등 비소비지출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주택구입이 늘어나면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출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소비 지출의 부담이 늘어나면 사회전체적인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이것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내수침체가 문제일 수 있으나 가구나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필수적 소비가 제약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 자산(부채)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1) 자산의 빈곤과 불평등

자산은 소득이 없는 경제주체가 긴급한 지출 필요성에 직면하였을 때 지출의 여력을 제공한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하여 얻은 수입은 필요한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자산은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의 척도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산은 그 자체가 소득을 낳거나 편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을 얻게 된다. 또한 주택자산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자산은 그 자체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산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일정한 수준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주체가 위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자산 보유액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산 빈곤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자산빈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소득빈곤과 마찬가지로 자산 분포에서 중위 값의 일정 비율(예,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산 보유 규모가 소득 빈곤선의 일정한 규모(예, 3~6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으로 빈곤선 정도의 기본적 생활을 3개월(혹은 6개월) 유지할 수 없다면 이를 자산빈곤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불평등 역시 소득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지니계수나 분위별 점유율 등을 통해 측정되고 표현된다. 통상적으로 자산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자산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지위에 비해 자산의 지위가 세대 간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가계 부채의 문제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한 부채가 소득 또는 자산에 비해 과중할 경우 부채 상환의 부담이 크거나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즉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갑작스런 부채 상환 압력에 직면하였을 경우 가계가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의 문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채규모는 자산규모나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이 일반적이다. 부채 상환능력이 높거나 담보 등으로 활용할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얻기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평균적인 비율과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자산 구성

앞서 자산이 갖는 경제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경제적 여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자산의 유형에 따라 그것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다르다. 금융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시간도 적게 들고 현금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의 손실도 작은 반면, 주택과 같은 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자산 구성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연령층의 자산 구성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지출 욕구에 대응할 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2. 취약인구집단

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취약집단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약 집단

소득·소비·자산의 영역에서 취약집단이란 우선 소득과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지칭한다. 소비 영역에서의 취약집단이란 일차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의 취득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소득 획득과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이 세 가지 경제적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취약집단을 살펴볼 때 소득 획득의 취약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소득을 얻는 데 취약한 집단은 먼저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근로능력의 부재나 부족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령에 따른 취약성이다. 연령이 일정 수준(예, 14세) 이하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로 간주된다. 연령에 따라 소득획득의 취약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몇 세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과 노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연령대로 간주되고, 따라서 소득 획득과 관련된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간주된다.

연령 이외에 근로 무능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장애와 건강상의 요인이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으나 일단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 획득에 근본적인 제약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쁜 건강상태 역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어 취업과 소득획득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제활동 상태 의한 취약 집단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근로소득을 얻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취약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이 미취업자이다. 미취업자는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자발적인 이유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로 구분된다. 특히 장기 실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취약성이 훨씬 심화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특정한 종사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아 빈곤화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기도 한다. 근로자 가운데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구분된 임시·일용직 근로

로자를 취약 집단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취업자 집단 전체에서 취약집단을 논할 때에는 (영세)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약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 노동시장에서 기회 상실이나 차별 등에 의한 취약집단

마지막으로 살펴볼 집단은 소득획득 능력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약성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기회의 불평등 등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집단들이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근로소득의 수준을 비교하여 본다면 여성 취업자들이 남성에게 비해, 저학력 취업자들이 고학력 취업자들에 비해 소득이 낮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의 취업자들이 도시 지역 취업자들에 비해 소득이 낮다. 최근 들어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 가구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취약집단

기본적으로 경제활동과 소득의 획득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득의 사용은 생활 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와 소득획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가구의 사정, 특히 다른 가구원의 사정에 의해 가구 단위의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가구원 가운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거나 혹은 그 비중이 과도한 경우이다. 한부모 가구나 조손 가구, 기타 장애인이나 고령자,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취약성을 띠기 쉽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소비 두 측면에서 다 가구원 가구에 비해 취약성을 띤다. 소득의 측면에서는 개인이 실직했을 때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실업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성에서 취약성을 띠는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는 주거나 내구성 소비재 소비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자 가구나 청년층 미취업 자 또는 불안정 취업자의 비중이 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다. 소득 및 자산 분포상의 지위로 구분되는 취약집단

앞서서 설명한 취약성은 주로 소득 획득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층이다. 또한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빈곤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빈곤 위험 계층(near poverty)로 보아 역시 취약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빈곤층 가운데에서도 빈곤의 지속기간이 긴 장기 빈곤층이나 빈곤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만성적 빈곤층은 특별히 그 취약성이 더 심한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소득 측면의 취약성을 반드시 빈곤 여부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 분포상의 위치(하위 소득 분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집단이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다. 이는 근로가 가능하고 취업하고 있다는 개인적 특성과 빈곤하다는 가구의 특성이 결합된 집단이다. 이 집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던 인구학적 취약성이나 실직 등 미취업 요인이 없는 데에도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빈곤 여부보다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시행되는 제도의 대상자인지 여부로 취약계층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가구, 즉 기초보장수급가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초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수준이 그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집단을 일컫는 차상위층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미가입자나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자 역시 필수적인 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3장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제1절 국내외 통계프레임워크 사례

1. 해외 국가의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가. 개요

소득·소비·자산에 관한 국내외의 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작성 사례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소득·소비·자산 보다 상위 영역인 사회통계에 대한 해외 통계프레임워크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재열(2016)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관된 기준에 의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한 이후 그에 따른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연역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시대적·정책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먼저 작성하고 사후적으로 관련 통계들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귀납적 방식을 취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통계 프레임워크 모델이 존재하며, 각 나라별로 작성되는 통계의 개념, 주요 특징 및 관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UN,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가 작성하는 통계 프레임워크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각 기구에 속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통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느슨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통계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통계가 먼저 작성되다가 사후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다른 영역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에 비해 국가별 소득·소비·자산 통계는 비교적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소득·소비·자산이 속하는 경제적 영역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역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6) 이재열(2016), 12p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기술을 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 대한 통계로서 가장 오래된 거시적 관점의 국민계정체계는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953년부터 국제적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관점의 총계자료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이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시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 프레임워크와는 다르다. 거시적 관점의 국민계정체계를 통해서만 경제 전체의 평균적 수준만을 알 수 있을 뿐, 개별 가구의 경제적 행태(behavior)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한 사회 내의 불평등(inequality) 또는 가구 간 격차(disparities)에 대한 분포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총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득·소비·자산 통계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국 및 국제기구들은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비단 가계부문에 대한 화폐적 측면의 통계 작성을 넘어 비화폐적 측면 즉, 사람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2011년에 시작된 OECD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itiative) 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가계 소득·소비 및 자산의 분포 통계에 대한 OECD 분석틀(OECD ICW(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과 더불어 이 보고서의 동반보고서인 ‘가계 자산에 대한 미시통계 작성을 위한 OECD(2013b) 가이드라인(이하 ‘OECD Wealth(2013b)’, OECD Guideline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를 들 수 있다.

또한 가구단위 소득에 대해서는 1996년 호주 통계청의 주도로 설립된 ‘가구소득 통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그룹(International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일명 ‘캔버라그룹’))에 의해 작성된 ‘2001 캔버라 그룹 핸드북(2001 Canberra Group Handbook)’과 2003년 국제노동통계총회(ICLS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채택된 가구소득 통계의 표준에 관한 결의, 그리고 ‘2011 가구소득 통계에 대한 캔버라 그룹 핸드북 2판(2011 The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Second Edition)’(이하에서는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⁷⁾을 들 수 있다. 2001 캔버라그룹 핸드북과 ICLS 상의 가구소득에 대한 개념 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 또한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은 ICLS에서 ‘향후 논의할 문제’로 남겨둔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현재까지 수립된 가장 최종적인 소득 항목에 대한 국제 수준의 통계 표준 또는 통계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외 통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례로서 OECD ICW(2013a)의 ‘가계 소득·소비 및 자산의 분포 통계에 대한 OECD 분석틀’과 OECD Wealth(2013b)의 ‘가구 자산에 대한 미시통계 작성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그리고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간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인 OECD·Eurostat(2011)의 ‘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해외 주요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소득, 소비 및 자산 통계의 작성사례들을 검토한다.

나. OECD ICW(2013a)

OECD ICW(2013a)는 가계 소득, 소비 및 자산에 관한 미시적 수준의 통계를 작성·분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웰빙(well-being), 그중에서도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구성하는 3가지 차원(소득, 소비, 자산)을 강조하였다.⁸⁾ 이러한 연구의 배경으로는 먼저 GDP와 같은 전통적인 거시 경제통계가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측정수단으로서의 적절한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음(Stiglitz et al., 2009)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되는 각국 통계의 비교가능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 소득·소비·자산, 나아가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수단 개선에

7) ‘2011 가구소득에 관한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정식 인용정보는 UNECE(2011)이나, 캔버라그룹 핸드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캔버라그룹 핸드북이라 칭한다.

8) OECD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웰빙’과 ‘경제적 웰빙’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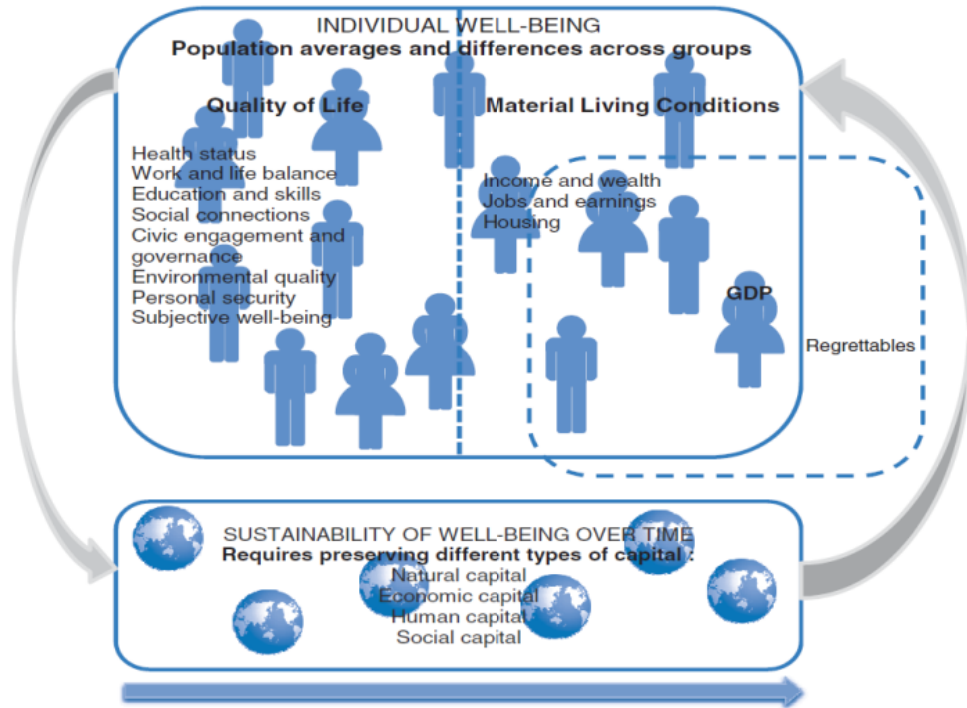
많은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 연구(OECD ICW(2013a))는 여러 국가들의 웰빙 수준에 대한 측정 및 국제비교를 위해 개발한 OECD(2011)의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프레임워크 하에서 수행된 것이다. OECD(2011)은 웰빙을 핵심 개념으로 두고, 개인의 웰빙(individual well-being)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 on time)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개인의 웰빙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또는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OECD ICW(2013a))는 그 중에서도 ‘경제적 웰빙’에 대한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OECD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웰빙’과 ‘경제적 웰빙’은 구분되는 개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4] OECD ‘How’s Life?’ Initiative의 프레임워크

Figure 1.2. The “How’s Life?” 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Source: OECD.

OECD ICW(2013a)에서 소득·소비·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비는 인간의 필요와 결핍을 직접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서비스이며, 소비지출은 소비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로 정의된다. 소득은 수령한 경제적 자원의 지속적인 흐름이다. 자산은 일정시점에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총량(stock)으로 정의된다.

OECD ICW(2013a)의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개념적 측면과 둘째 소득·소비·자산의 각 구성항목에 대한 측면이다.

1) OECD ICW(2013a)의 주요 개념

먼저, OECD ICW(2013a)는 소득·소비·자산에 대해서 발생주의(accrual) 회계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상의 유의점은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기술에서 설명한다. 주요 항목에 대한 OECD ICW(2013a)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가계 소득

가계소득에 대한 측정방법은 1966년 UN통계위원회 제 14총회에서 개발된 분배통계시스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 왔다. 특히 2001년 캔버라그룹의 권고는 가계소득통계의 국제표준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⁹⁾ 이후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은 큰 틀의 변화없이 일부의 수정·보완을 거쳐 가계소득에 관한 가장 최종적인 국제수준의 가계소득에 관한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OECD(2013a)은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OECD ICW(2013a)는 가계소득에 대해 그 형태를 불문하고 가구 또는 가구원이 수령한 일정 기간의 모든 수령액으로 정의한다. 다만 우발이득 또는 일시수령액은 제외된다. 가계소득의 특징은 현재소비에 사용가능

9) 가계소득 측정방법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은 부록에 제시한다.

한 자원이며, 현금·실물·기타 자산 등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나) 가계 소비

가계 소비는 시장에서 구매되어 소비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로 정의되며, 가구 내 생산되거나 수령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시장에서 구매된 재화 중에서 내구재의 경우 기간조정 필요하다. 즉 발생주의 회계접근법을 따르므로 내구소비재는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고 이후 발생주의 회계법에 따라 기간별로 소비지출로 처리한다. 내구소비재는 통상 편익기간이 1년 이상인 재화(주거·자동차·전자기기·가구·의류 등)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구소비재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항목별로 내구소비재를 구분하므로, 전자기기, 가구, 의류 등은 OECD ICW(2013a)에서는 내구소비재인 반면 우리나라의 가구소비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내구소비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 자산

OECD ICW(2013a)에서는 자산의 정의에 대해, ‘자산(assets)과 부채 형태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여 협의의 정의를 취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소유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자산(assets)과 부채의 차이는 순자산(net worth)으로 정의된다. 자산(assets)은 특정기간에 걸쳐 해당 자산(assets)을 보유·사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또는 편익가치의 저장소(store)이며, 부채는 채무자가 특정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때 확정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구소비재의 취급이 우리의 통계작성 기준과 다른데,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내구소비재를 자산(assets)으로 취급하며, 차량·주방 및 세탁기기·컴퓨터·오락장비·의류·기타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assets)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구소비(소비지출)로 취급되며,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감가상각·유지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취급법은 소득·소비·자산의 분포 모

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구의 저축을 높이며,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러한 내구소비재의 자산취급은 고가내구재 구입 위한 부채와도 일치(match)되므로 보다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내구소비재에 대한 자산화 처리

OECD ICW(2013a)에서 권고하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처리방식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구소비재의 구입은 소비재의 구입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된 경제적 자원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당기의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금액(저축)으로 조달하거나, 초기에 보유한 자산(여기서는 wealth를 의미한다)으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을 하건 관계없이 가구의 순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금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자산(현금)이 감소하는 대신 실물자산(가전제품)이 증가하지만 순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내구소비재는 수년의 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OECD ICW(2013a)에서는 내구소비재가 해당 기간에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의 크기만큼만 당기의 소비지출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통계에서는 구입당시 전액을 소비지출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작성방식과 OECD ICW(2013a)의 권고기준 간의 상이함은 이러한 처리방식보다는 내구소비재의 범위가 더욱 크다. OECD ICW(2013a)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 전자기기, 가구, 옷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구소비재에 대해 자산화 처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범위는 우리의 통계작성 현실에 비추어 OECD ICW(2013a)의 권고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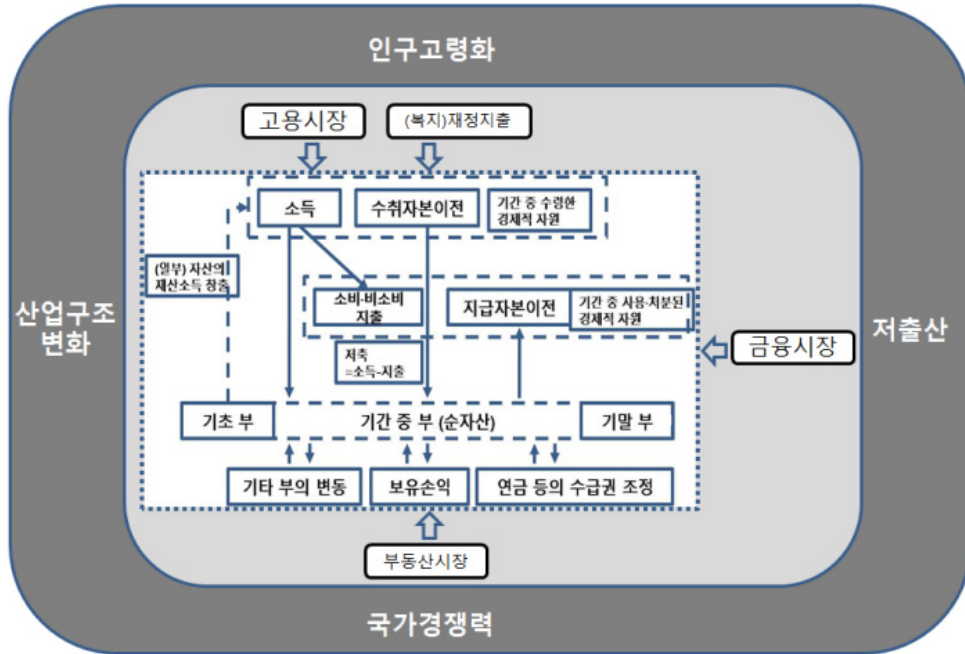
보인다.

2) OECD ICW(2013a)의 소득·소비·자산 프레임워크

OECD ICW(2013a)에서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정 기간 중 수렁한 경제 적 자원인 소득 및 수취자본이전은 현재의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지급자본이전, 그리고 순자본의 변동에 기여한다. 한편 보유 중인 자산의 일부는 재산소득을 창출하여 소득의 증대에 기여한다. 자산은 기초자산 과 기간 중 자산의 변동 그리고 기말자산을 통해 계산된다. 기간 중 자산 의 변동에는 자산의 보유손익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에 대한 조정을 포 함한다.

개인의 경제적 웰빙은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소득·소비·자산의 내부적 상호 연관성뿐만 아니라 통계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고용시장의 환경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은 수취자본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금융시장에 있어 서 이자율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는 저축 또는 부채의 조달 등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는 보유자산의 손익뿐만 아니라 자산 (assets)의 취득 또는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산업구조 및 국가경쟁력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그림 5> 참고).

[그림 5]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OECD의 통계 프레임워크



출처 : OECD(2013), 42p. 저자의 수정 및 보완

3) OECD ICW(2013a)의 구성항목

가) 소득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 중에서 우리나라의 통계작성 방식과 가장 다른 부분이 소득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무급가사서비스의 가치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처리방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 상의 소득항목에 대한 개념은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개념들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일부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을 뿐이다.

[표 3] OECD ICW(2013a) Framework의 소득 구성요소

코드	구성요소
II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코드	구성요소
II.1	직원 소득
II.1.1	현금 임금 및 급여
II.1.2	현금 수수료 및 작업량에 따른 지급액
II.1.3	현금 팁과 보수료
II.1.4	이사 성과급
II.1.5	직원 보수의 일부로서 제공된 주식
II.1.6	이윤배분 상여금 및 기타 형식의 이익과 관련된 지급액
II.1.7	기타 현금 상여금
II.1.8	고용주로부터 무료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재화 및 서비스
II.1.9	해직 및 해지 지급액
II.1.10	고용주의 사회보험 기여금
II.2	자영업으로부터의 소득
II.2.1	법인체가 아닌 자가 사업체로부터의 이익/손실
II.2.2	투입요소의 비용은 제외한, 물물교환을 위하여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II.2.3	투입요소의 비용은 제외한, 그 자산이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된 재화
I2	재산 소득
I2.1	경비를 제외한, 금융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I2.2	경비를 제외한,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료
I2.3	경비를 제외한, 사용료 및 비금융적 자산으로부터의 기타 소득
I3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의 소득
I3.1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 가치
I3.2	무급의 가사노동의 가치
I3.3	가구의 내구소비재로부터의 서비스의 순가치
I4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하고 수령한 경상적 이전
I4.1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기타 현금혜택
I4.2	연금 및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기타 혜택
I4.3	정부로부터의 현금의 사회적 지원금부
I4.4	다른 가구로부터 수령한 경상적 이전
I4.5	비영리가구로부터 수령한 경상적 현금이전
I4.6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하고 수령한 기타 경상적 이전
	생산으로부터의 소득(II+I3)
	주요 소득(II+I2+ I3)
IT	총 소득(sum of II to I4)
E2	지급한 경상적 이전
E2.1	(환급금을 제외한) 직접세
E2.2	강제적 수수료와 벌금
E2.3	직원 및 고용주의 사회적 보험 기여금
E2.4	기타 가구에 지급한 경상적 이전
E2.5	비영리가구에게 지급한 경상적 이전

코드	구성요소
E2.6	기타 지급한 정상적 이전
ID	가처분 소득(IT - E2)
I5	사회적 현물이전(STIK)
IAD	조정된 가처분 소득(ID + I5)

나) 소비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에서 소비항목은 우리나라 통계의 작성방식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소비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가 UN이 권고하는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법(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2대 대분류항목을 기준으로 소비지출을 구분하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표 4] 목적별 개별 소비에 대한 분류

코드	항목명	세부항목 코드	세부항목명
01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01.1	식품
		01.2	비알코올 음료
02	알코올 음료, 담배 및 마약	02.1	알코올 음료
		02.2	담배
		02.3	마약
03	의료 및 신발	03.1	의료
		03.2	신발
04	주택, 용수,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04.1	주택을 위한 실제 임대료
		04.2	주택을 위한 귀속 임대료
		04.3	거주지의 유지 및 수리
		04.4	용수 공급 및 거주지와 관련된 서비스
		04.5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05	각, 가구 장비 및 일상적인 가구유지	05.1	가구 및 비품, 카펫 및 기타 장판
		05.2	가구 직물
		05.3	가정용 전자기기
		05.4	유리제품, 식기 및 주방용품
		05.5	주택 및 정원을 위한 도구 및 장비
		05.6	일상적인 가구 유지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코드	항목명	세부항목 코드	세부항목명
06	건강	06.1	의료제품, 기기 및 장비
		06.2	외래환자 서비스
		06.3	병원 서비스
07	운송	07.1	차량의 구매
		07.2	개인적인 운송장비의 운행
		07.3	운동서비스
08	소통	08.1	우편서비스
		08.2	전화 및 팩스 장비
		08.3	전화 및 팩스 서비스
09	오락 및 문화	09.1	오디오, 비디오, 사진 및 정보 처리 장비
		09.2	오락 및 문화를 위한 기타 주요 내구재
		09.3	기타 오락을 위한 항목 및 장비, 정원 및 애완동물
		09.4	오락 및 문화적인 서비스
		09.5	뉴스, 책 및 문구류
		09.6	패키지 여행휴가
10	교육	10.1	유치원 및 초등학교
		10.2	중등학교
		10.3	중등과정 후 고등과정 전 교육
		10.4	고등교육
		10.5	수준별로 정의되지 않은 교육
11	식당 및 호텔	11.1	출장요리업
		11.2	숙박서비스
12	기타 재화 및 서비스	12.1	개인적인 돌봄
		12.2	매춘
		12.3	개인적영향(다른 곳에서는 분류되지 않음)
		12.4	사회적 보호
		12.5	보험
		12.6	금융 서비스(다른 곳에서는 분류되지 않음)
		12.7	기타 서비스(다른 곳에서는 분류되지 않음)
13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개별적인 소비지출	13.1	주택
		13.2	건강
		13.3	오락 및 문화
		13.4	교육
		13.5	사회적인 보호
		13.6	기타 서비스
14	일반적인 정부의 개발적인 소비지출	14.1	주택
		14.2	건강
		14.3	오락 및 문화
		14.4	교육
		14.5	사회적 보호

다 자산

자산에 대한 항목은 소득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구소비재에 대한 처리방식의 차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작성방식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한편, 연금수급권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¹⁰⁾

[표 5] 자산(assets) 및 부채의 구성요소

코드	항목명
W1	비금융자산
W1.1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W1.1.1	주요 주거지
W1.1.2	기타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W1.2	기타 부동산
W1.3	내구소비재
W1.3.1	차량
W1.3.2	기타 내구소비재
W1.4	가치 있는 물품
W1.5	지적재산권 및 기타 비금융자산
W2	금융자산
W2.1	화폐 및 예금
W2.2	사채 및 기타 부채증권
W2.3	법인체가 아닌 자가 기업의 자본
W2.4	주식 및 기타 자본
W2.4.1	법인의 주식
W2.4.2	기타 자본
W2.5	뮤추얼 펀드 및 기타 투자기금
W2.6	생명보험기금

10)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통계(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수령한 연금소득만을 조사할 뿐, 연금수급권에 대한 자산취급은 하지 않고 있다. OECD ICW(2013a) 및 OECD Wealth(2013b)에서는 연금수급권에 대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에서는 연금수급권의 가치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민간연금에 대한 연금수급권에 대해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순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동향조사이던 가계금융복지조사이던 연금수급권에 대한 자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OECD Wealth(2013b) 118~125p를 참고하기 바란다.

코드	항목명
W2.7	연금기금
W2.7.1	사회적 보험 연금기금
W2.7.2	사적 연금기금
W2.8	기타 금융자산
W3	부채
W3.1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거지 대출
W3.1.1	주요 주거지 대출
W3.1.2	기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대출
W3.2	기타 부동산 대출
W3.3.3	기타 투자 대출
W3.4	금융자산 대출
W3.4.1	귀중품 대출
W3.4.2	지적재산권 및 기타 비금융자산 대출
W3.5	소비자 신용 대출 및 기타 부채
W3.5.1	교육 대출
W3.5.2	기타 대출 및 부채
WT	총 자산(순자산)

4) 미시자료의 중요성

OECD ICW(2013a)에서는 경제적 웰빙의 측정에 있어서 미시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민계정체계(SNA)의 자료는 집합적 정보만 제공하므로, 분포 및 격차 등에 대한 고려가 불가하다. 특히 인구집단 간 성취도와 다른 웰빙 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소득·자산을 갖는 인구집단은 다른 영역의 결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빈곤선 또는 절대적 빈곤선을 작성할 수 있으며, 로렌츠곡선이나 지니계수와 같은 보조통계의 작성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분배에 관한 판단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철학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으로서, 분배의 개선이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나 분배의 개선은 인센티브에 의한 결과여야 하며, 투명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측정단위에 대해서는 가구 및 개인의 단위로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은 가구 내에서 공유되므로, 경제적 웰빙은 가구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구단위에서 측정되는 소득은 균등화 지수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전의 통계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OECD(2013a)의 특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시장적인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물질적 웰빙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체계(SNA)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에 대한 평가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보다 많은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웰빙은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다. 경제적 웰빙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적 웰빙은 다차원적이므로 소득·소비·자산을 동시에 관찰해야 한다. 가구의 경제적 웰빙, 즉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구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이며, 따라서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적 웰빙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비해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구의 생활수준을 더 잘 나타내는 대리변수이며,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나 소비를 중심으로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통계 작성상의 현실적 고려(practical consideration)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지출보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반면, 소득은 하향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달리, 지출통계는 가계부에 기반하므로 무응답·불성실응답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의 지출은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단, 모든 국가의 지출조사에서 현물이전(공적·사적)이 누락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은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의 생활수준의 유지, 즉 소비수준 유지에 있어서 소득의 불충분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산이다. 소

득은 유량(flow)으로서 유동적인 반면, 자산은 저장(stock)으로서 안정적이므로, 자산을 통해 소비의 평활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OECD Wealth(2013b)

가구단위 ‘자산(wealth)’에 대해서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의 ‘wealth’는 일반적으로 ‘부(富)’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산(asset)과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부(wealth)는 자산(asset)에서 부채(liabilities)를 차감한 순자산(net worth)을 일컫는 용어로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alth’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산(wealth)’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한편, ‘wealth’를 자산으로 번역하면 우리말의 ‘자산/assets’과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 assets을 의미하는 경우는 ‘자산/assets’이라 영문을 병기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밝히고 특별히 병기하지 않는 경우 자산은 ‘wealth’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에 따라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에 대해 ‘소득, 소비, 자산’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엄연히 자산(asset)과는 구분되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세부 유형별 ‘자산/assets’, 예를 들어 금융자산(assets)이나 실물자산(assets)은 모두 자산/assets)을 의미하며, ‘자산(wealth)’과는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별도로 영문을 병기하지 않는다.

미시적 차원의 가구단위 자산통계에 대한 최초의 국제기준은 OECD ICW(2013a)의 동반보고서인 OECD Wealth(2013b)의 OECD Guideline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이다. 이 기준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기준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간극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구단위 자산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은 자산통계를 생산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반적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경제적 웰빙을 나타내는 소득과 소비와 가구자산에 대한 미시통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OECD Wealth, 2013b; 1p)

가구자산에 대한 구성 및 분포는 부채의 횡단면 분포, 주택소유의 결정요인, 그리고 유동성제약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¹¹⁾ 국민계정체계(SNA)는 경제 전체 또는 부문별 경제적 성과를 측정함에 주 목적이 있는 반면, 가구단위 자산통계의 목적은 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구성 및 수준과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가구간의 횡단면적 분포를 파악함에 있다.

한편, 웰빙에 기여하는 자본(capital)으로는 비단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다른 형태의 자본도 고려될 수 있으나, OECD Wealth(2013b)에서는 경제적 웰빙을 구성하는 자본(economic capital)만으로 한정한다.¹²⁾

여기서 자산의 수준은 잔존부채를 제외한 자산(asset)의 가치만을 의미한다. 자산의 수준은 순가치(net values)이기 때문에, 종종 순자산(net worth)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자산(assets)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중요한 점은 금융자산에 연금수급권(entitlements in pension funds)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부채는 모든 형태의 부채를 포함하며,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의 가치는 모두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분석의 단위는 가구이며, 이는 주택 등과 같이 가구원 간에 공동으로 소비하는 가구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에서는 가구보다 더 작은 단위(예를 들어 가족)가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가구단위가 조사에 편리하다.

대부분의 분석자들은 가구변수와 관련 있는 반면, 미시자료 이용자들

11) 가구자산에 대한 미시통계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통합자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OECD는 2010년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의 노력의 결과로 OECD ICW(2013a)과 더불어 OECD Wealth(2013b)를 발간하였다.

12) 여기서 ‘자산(wealth)’과 ‘자산(asset)’이 아닌 ‘자본(capital)’이 언급되는 이유는, 개인 및 사회의 웰빙을 측정하는 다양한 모델 중 네덜란드의 스톡-플로우(stock-flow)모형의 관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경제·금융·인적·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이들 간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속가능성 강조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며 따라서 자산(wealth)의 일종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아 국제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된다.

은 종종 가구 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측면의 자산수준 및 분포를 분석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구자산에 대한 미시자료의 조사결과표들은 관심 있는 특성별 가구 수와 그러한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모두를 보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특히 후자는 때때로 가구원 가중 통계(persons weighted statistics)라 한다.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는 이러한 가구단위 자산에 대한 미시수준자료의 주된 원천이며, 가구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자산 등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정보는 대개 다른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단위 자산조사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응답 및 오류보고(misreporting)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무응답 및 오류보고는 민감한 주제이거나 개념적으로 복잡한 주제의 경우 특히 더 문제가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응답부담의 문제도 존재하며, 따라서 수집되는 자료의 양과 응답부담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이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행정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행정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때 응답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일부 자산(asset)은 추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격지수가 사용될 수 있다. 연금자산에 대한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관련 기관에 의해 추정될 필요 있다.

한편, 가구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웰빙을 누리는데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더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균등화(equalization)과정을 거치는데, 가구자산 추정치를 균등화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¹³⁾

13) 대표적인 균등화 방법으로는 해당 지표를 가구규모(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균등화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다.

$$\cdot \text{균등화 가구소득} = \frac{\text{명목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자산자료 분석에 있어 생애주기관점은 특히나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자산수준이 낮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축과 소득증가로 인해 자산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는 은퇴기에 이르러 생애자산의 최대치에 근접하리라 예상되며, 은퇴기에 접어들면,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하고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축을 인출하게 된다. 한편, 생애 중 특정시점에,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급작스런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에서는 가구단위 소득통계의 작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단위 소득통계는 가구의 경제적 행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소득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소득분배의 패턴을 이해하고 사회의 조직방법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이다. 둘째, 복지, 조세, 기타 금융정책, 주택, 교육, 노동시장, 보건 등의 영역에서 수립된 정책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구그룹 또는 일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다양한 소득분배 패턴이 가구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에서는 한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념으로 표현한다. 소비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주어진 시점에서 가능한 최대의 소비를 선택하는 대신 가용자원의 일부를 저축하는 가구도 존재하므로 불완전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 가구가 지닌 최대한의 경제적 후생을 모두 측정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수준, 그 자산이 지니는 가치의 변동, 소비 수준 모두를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OECD ICW(2013a)에서 지적하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 지출, 저축, 보유한 자산의 가치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완벽한 조사자

료에 입각하여 경제적 후생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통해 가구가 지닌 경제적 가용자산의 규모와 성격, 처분 방식 등을 관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차원에서 조사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은 기록이나 정보를 비교하고 가구가 지닌 여러 유형의 경제적 자원이 결합하여 어떤 분배 형태를 만들어 내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후술하는 각국의 통계작성 사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매칭(matching) 기법을 이용한 통계 작성의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6>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득의 각 구성항목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6]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소득항목 정의

	개념적 정의	정의
1	고용에 의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의미로 고용을 통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수입만으로 구성됨. 따라서 고용에 의한 소득은 현재 혹은 이전의 유급 직업이나 개인 사업의 결과로 개인 스스로나 부양가족을 위해 받는 현금이나 현물 수입을 의미함
a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재화나 서비스 등의 현물로 지급되며 다음 요소로 구성됨 -근무기간 중 또는 근로 후 받는 직접적 임금 및 봉급 -현금보너스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이사 보수 -수익분배금 및 기타 수익과 관련된 수입 -연차 또는 기타 유급휴가 등, 비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 -주식 -고용주로부터 보조받는 재화 및 서비스 ※ 개념적으로 근로소득에는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금, 해고 및 퇴직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별도로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해야함
	임금 및 봉급	
	현금 보너스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이사 보수(Directors' fees)	
	수익 분배금 및 기타	
	수익과 관련된 수입	
	직원 보수의 일부로	
	제공되는 주식	
	고용주로부터 보조받는 재화 및 서비스	
	해고 및 퇴직수당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금	
b	개인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에 대한 대가로 개인이 받는 소득으로 순 개인 사업소득에는 해당 기업의 사주, 동업자, 비법인기업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됨. 또한 교환용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의 추정치를 포함함
	비법인기업의 손익	

	개념적 정의	정의
	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투입비 차감후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투입비 차감후	
2	자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는 수입으로 자산소득에는 금융자산(이자, 배당금) 및 비금융자산(임대료)에서 발생하는 화폐 및 로열티(특허 및 저작권 사용 대가)가 있음
a	비용을 제외한 금융자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수입) 은행, 건축조합, 신용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 계정, 양도성 예금증서, 정부 국채 및 공채, 증권, 다른 가구원에 빌려준 사채 및 대부금 등에서 받은 수입을 의미 (배당금) 투자자가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을 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의미함
b	비용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과 같은 비생산자산(천연자원)과 주택과 같은 생산자산의 사용의 대가를 받는 수입을 의미함
c	로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혹은 창작물 등 특허 혹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함
3	자가소비용인가구에서 생산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아닌 해당 가구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구내에서 생산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가생산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및 내구소비재에서 나온 서비스 등도 포함됨. 이들의 가치는 생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개념임 ※ 그러나 무급가사서비스의 가치와 내구소비재의 서비스 가치는 소득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제외됨. 또한 자가 주택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아닌 최종적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원의 서비스 생산도 전통적으로 SNA의 생산에서 제외됨
a	자가주택서비스의 순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속임대료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 추정치를 의미함
b	무급가사서비스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 청소, 수리, 육아 등 자가생산된 가사서비스의 추정치가 포함됨. 무급노동의 기여분은 경제사회적 후생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
c	내구소비재에서 생산된 서비스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내구소비재(차, 세탁기, 냉장고 등)의 서비스에서 얻는 소득의 해당항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귀속가치를 의미함
4	경상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이전을 제외한 모든 이전으로 구성됨.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현금,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형태를 지닌 모든 경상이전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됨
a	사회보장 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보험(군인연금 및 해외연금),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 등, 정부

	개념적 정의	정의
		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무 및 법적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연금, 보험급여 및 보험수당이 해당됨
b	연금 및 기타 보험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로 충당되지 않고 고용주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민간출자 보험제도에서 나오는 연금 및 기타 보험급여가 이에 해당됨
c	사회부조급여(사회적 현물이전 제외, 10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부조급여 (보편적 급여 혹은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를 의미함
d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단체, 노조,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파업수당, 질병수당, 구호수당 등 정기적 선물 및 재정 지원의 형태로 받는 경상이전을 의미함
e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원금(이혼수당 및 양육비 등)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경상이전을 의미함 ※ 유산 혹은 신탁자금에서 나온 정기적 수입, 정기적 선물, 재정지원 혹은 재화나 서비스 형태의 현물이전(주택서비스, 양육서비스 등)도 이에 포함됨
5	생산소득(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 의한 소득 및 자가소비용으로 가구에서 생산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합해 정의함 ※ 고용에 의한 소득은 고용상태와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한 개념이고, 생산소득은 생산적 활동에서 비롯된 모든 소득을 반영하는 개념임
6	본원소득(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소득 = 생산소득 + 자산소득
7	총소득(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소득 = 본원소득 + 이전소득
8	경상이전지출	
a	직접세(환급분 제외)	
b	강제적 징수 요금 및 벌금	
c	가구간 경상이전지출	
d	직원 및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금	
e	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9	가처분소득(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처분 소득 = 총소득 + 경상이전지출 ※ 일정 기준의 기간 소비지출과 저축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임
10	사회적 현물이전(STIK)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개인에서 무료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됨
11	조정 가처분소득(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가처분 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가처분소득 ※ 조정 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보다 더욱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어 총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임

개념적 정의	정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손익: 일정 기준기간 금융적, 비금융적 자산과 채무의 가치 변화를 의미 ● 불로소득이익 및 기타 비정기적, 일회성 소득(복권, 도박, 유산, 등) ● 순자산의 감소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산의 매각, 융자금, 예금 인출 등이 포함됨

라.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간의 불일치 조정 사례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한계는 분포를 알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한계점이 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와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구단위 지표와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와 유럽통계국(Eurostat)이 2011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에서는 기존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구그룹 간의 격차에 대한 국민계정의 개념 및 총계와 일치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공동노력에 착수하였다. 16개의 국가¹⁴⁾가 참여하였으며,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일치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방법론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OECD·Eurostat(2011))에서는 가구계정에 집중하여, 가구소득, 소비 및 저축에 중점을 두었다. 항목은 크게 본원소득, 가처분소득, 최종 소비지출 및 저축으로 구분하였으며, 미시적 관점의 가구소득의 개념·범위와 국민계정의 개념·범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및 비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현물이전소득을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 및 소비를 측정하였으며, 조정가처분소득 및 실제최종소비를 추정하였다. 국민계정의 총계수치 및 성분은 거주인구에 대한 합계로 제공되는데, 가구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단위로서, ① 공동주거, ② 공동예산을 만족하는 가구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시설가구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14) 호주,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OECD·Eurostat(2011)의 목적은 국민계정체계의 정의 및 총계 수치를 최대한 고수하면서 불평등 척도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평가함에 있다.

[표 7] 소득, 소비, 저축 : 국민계정체계의 주요 거래 및 관계

Income resources - received by households		
B2	Operating surplus from actual and imputed rentals	
B3	Mixed income from owned unincorporated enterprises and from own account production	
D1	Compensation of employees, including social contributions	
D4	Property income , e.g. interest, dividends, rents on land	
Income uses - paid by households		
D4	Property income, e.g. interest, rents on land	
B5	Primary income	= B2+B3+D1+ D4 resources - D4 uses
Income resources - received by households		
D62	Social benefits in cash	
D7	Other current transfers	
Income uses - paid by households		
D5	Current taxes on income and wealth	
D61	Social contributions	
D7	Other current transfers	
B6	Disposable income	= B5+D62+D7 resources-D5-D61-D7uses
D63	Social Transfers in Kind	
B7	Adjusted disposable income	= B6+D63

가구의 경제적 상태 연구에 있어서, 가구 그룹간 불평등 지표를 개발할 때, 기준점으로서 국민계정의 정의 및 총계를 취하는 것은 3가지 주된 이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국민계정체계의 가구단위는 경제 전체의 단위와 일치하며, 둘째, 국민계정체계는 이미 소득, 소비, 자산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일치된다. 셋째, 국민계정의 총계는 보다 훌륭한 추정치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논거는 논쟁거리로서, 국민계정체계는 경제 전체에 대한 설명만 가능할 뿐, 개별 가구의 경제적 행태에 대한 설명은 곤란하며 가구단위 소득에 관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계정체계를 통해서는 불평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OECD·Eurostat(2011) 연구의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의 목적은 가구의 불평등을 연구하기 위한 국민계정체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계정체계의 개념 및 집계방식을 고수하면서 가구 그룹간 불평등 척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가구단위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려는 OECD(2013a)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OECD(2013a)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금융중개서비스(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이 포함된다.

OECD·Eurostat(2011)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준, 예를 들어 소득수준, 가구의 특성, 가구규모 등에 따라 전체 가구를 분류하여 세분된 그룹별 분포를 파악한다. 소득수준은 균등화가구가처분소득분위에 따라 나누고, 20개의 소득항목, 26개의 소비항목, 3개의 사회적 현물이전항목에 대한 추정치로 구분한다.(아래 <그림 6> 참고)

[그림 6] OECD·Eurostat(2011) 연구의 가구분류표

Table 2: Simplified template used by the members of the Expert Group

		Household groups: e.g.,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quintiles					All resident households
		Q1	Q2	Q3	Q4	Q5	
20 components	Income resources:						
	- compensation of employees						
	- self-employment income						
						
	Income uses:						
	- income taxes						
- social contributions							
.....							
26 components	Consumption expenditure:						
	- food						
	- housing						
	- health						
						
3 comp.	Social transfers in kind:						
	- health care from government						
	- education from government						
	- others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consumption units							

Sub-totals by component and by household group

NA totals by component

출처 : OECD·Eurostat(2011), 12p.

상기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자료(국민계정)와 미시자료가 이용된다. 먼저, 국민계정에 대한 미시수준의 자료로는 다양한 소득항목에 대한 국민계정의 총계자료를 이용한다. 세부적인 소득·소비 항목별 가구계정 자료의 이용가능성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터키, 이스라엘은 가구의 조정가처분소득 추정치 없다. 일부 국가는 세부 소득·소비 항목별 추정치가 없으며, 스위스는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덜 상세한 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인구의 범위에 있어서, 일부 국가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기구(Non 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와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독일, 스위스가 이에 해당하며, 소비항목에 대해서는 호주가 해당한다. 다만, 비영리기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비영리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최종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계정은 역내 비거주자의 소비 및 거주자의 해외지출을 포함한다. 국내소비를 추정하기 위한 조정은 총계수준에서만 이루어지며 세부항목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전체 16개 국가 중에서 세부 항목별 조정을 하는 국가는 3개국(호주, 스위스, 뉴질랜드)뿐이다.

다음으로 가구단위 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수준의 조정과정이 요구된다. 개별 가구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시자료 이용하며, 가장 최근의 또는 소득·소비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근자료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미시자료는 전적으로 조사자료에 의존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행정자료가 이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의 소득자료와 하나의 소비자료가 이용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 뉴질랜드는 하나의 자료에서 소득·소비자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유럽소득생활환경조사(EU-SILC)와 가구지출조사(HBS)를 결합하여 사용하며, 프랑스는 5개의 미시자료를 이용한다.

각국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미시자료의 조정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 인구의 범위, 누락항목 및 분류상의 문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이 거시자료(국민계정)에 대한 조정과 가구단위 자료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 각 항목별 분포정보를 국민계정총계에 적용함으로써 가구 그룹별 소득·소비·이전소득을 추정한다.

- 1단계 : 거시자료(국민계정)의 조정
- 2단계 : 미시자료의 조정
- 3단계 : 미시자료 상에서 항목 생성
- 4단계 : 소득·지출 항목별로 분포정보를 조정된 국민계정총계에 적용하여 추정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OECD·Eurostat(2011)는 가구의 평균적 소득 및 소비 수준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계정체계를 보완하여 분위별로 구분된 가구 그룹간의 불평등을 파악한다. OECD·Eurostat(2011)의 추정결과, 분위별로 구분된 가구 간에 높은 소득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자산소득자와 자영업자에서 높은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득불평등이 소비불평등보다 높은 경우, 이는 보다 높은 저축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

소비·소득·자산 항목의 일괄조사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없으나,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급적 하나의 통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EU에서는 2020년까지 국민의 생활수준, 건강, 복지 증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를 파악하는 척도로서 유럽소득생활환경조사(EU-SILC)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 2020 사회통합목표(The Europe 2020 social inclusion target)는 EU-소득생활환경조사(EU-SLIC)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물질적 빈곤에 대한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EU에서도 생활수준에 대한 측정지표로서 소득의 불충분성을 인지하고, 지출 및 소비가 소득 보다 생활수준에 대해 보다 적절한 지표인지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지출조사의 매칭기법에 대한 연구 및 매칭 결과가 가구의 생활수준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Eurostat(2013) 참고).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소득이 사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조사하기도 쉽고 생계비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계비의 재원으로서 소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산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 후생에 보다 관련성이 높은 지출정보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소득, 소비 및 자산에 대한 동시 조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6년마다 실시되는 가구지출조사(HES : Household Expenditure Survey)와 2년마다 실시되는 소득주택조사가 동시에 조사되는 해에는 소득·소비·자산이 동시에 조사되고 있다.¹⁵⁾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동향과 이스라엘의 가구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일본의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조사(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에서는 소득과 더불어 저축 및

15) 호주의 통계 작성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

부채를 조사하고 있다.

[표 8] 주요 국가들의 소득·소비·자산 통합조사 여부

국가	통계명	소득	소비	자산
호주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SIH)	○		○
캐나다	Canada Income Survey (CIS)	○		
프랑스	Enquete Revenus fiscaux et sociaux(ERFS) (Tax and Social Incomes Survey)	○		
독일	German Socio Economic Panel (SOEP)	○		
일본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		
한국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	○	
영국	Family Resources Survey (FRS)	○		
미국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ASEC) of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		
이스라엘	Households Expenditure survey	○	○	

* 출처 : 각국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주 : 소득과 소비를 통합하여 조사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외에도 멕시코와 슬로베니아가 있음

이러한 소득, 소비 및 자산에 대한 통합자료는 각 항목별로 조사단위 및 조사방식 등을 달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권고된다. 예를 들어, 일부 항목은 가구원 단위, 일부 항목은 가구 단위의 면접 조사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잘 조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료품, 개인별 구매품 및 가구의 생활용품과 같이 빈번하게 구매되는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는 가구원 가계부로 조사할 것이 권장한다.

그러나 소득, 소비 및 자산의 통합조사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표본 추출틀을 식별하기 위한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표본규모가 작은 경우,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추출단계, 최적층화 및 기타 표본에 대한 핵심 특성 뿐 아니라 표본선정을 위한 최적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조사는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는 대신 높은 응답부담으로 인하여 응답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고려할 때, 응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를 보충하거나 둘 이상의 가구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계적 데이터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출조사(CES :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경우, 분기면접조사 표본과 2주간의 가계부조사표본이 상이하며, 조사이후 통계적 매칭기법에 의해 통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단위 소득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는 소득, 지출 뿐 아니라 자산에 관한 항목까지도 동일한 통계에서 조사하는 ‘통합조사’로 개선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통합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조사의 실제에 있어서 조사빈도, 자료수집, 설문지 설계, 응답률 제고와 더불어 행정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통합조사는 매년 작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년도에 대해 작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사빈도를 가질 것이 권장된다.

바. 소결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는 보다 나은 방법은 소득이라는 단일 지표에서 벗어나 소비 및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 측면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적된 저축이나 자산은 소득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수준의 하락을 방지하여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평균 소득의 상승은 집단 간 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여 어떤 가구를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 개념은 분배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 지출 및 자산에 관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배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자료를 동시에 수집하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의 경제적 자원이 지닌 개별적 차원을 좀 더 광범위한 틀 내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에 관한 정보를 단일 가구조사를 통해 통합된 방

법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조사에서 획득한 마이크로자료의 대응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경제적 자원의 결합분배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타당성을 평가·검토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우수사례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연구 주제를 진전시킬 있을 것이다.

2. 해외 국가의 소득·소비·자산 작성 사례

가. 해외 사례 검토 방법

비교대상 사례 국가의 선정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가구단위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작성 사례를 검토한다. 주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스라엘의 8개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통계도 포함하여 9개국을 작성사례를 비교한다.

비교대상 사례 통계의 선정

한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소득·소비·자산 각각에 대해서 단 하나의 통계만 작성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구단위 소득통계는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부가조사인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CPS ASEC), American Community Survey(ACS), Small Area Income & Poverty Estimates(SAIP)와 같이, 여러 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¹⁶⁾.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하여 국가별로 하나의 대표적 통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통계는 OECD의 Income Distribution Database(OECD IDD)에서 선정된 통계들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소비 통계는 소비자물가

16) 각각의 통계는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CPS ASEC는 전국수준의 가구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ACS는 주(state) 또는 6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의 가구소득을, 그리고 SAIP는 20,0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소규모 지역의 가구소득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각 통계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통계의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통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구 소득에 대해 여러 개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것은 그 작성목적이 상이하므로, 중복작성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둔다.

지수 작성시 필요한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가구소비통계들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다만, 자산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득 통계나 소비 통계와 같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비교기준이 없으므로 가구 단위의 자산 통계에 대한 OECD Wealth(2013b)의 연구에서 검토된 통계들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사례통계의 조사항목

해외 국가의 작성사례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하나의 통계가 하나의 항목만에 대해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동향 통계와 이스라엘의 Household Expenditure Survey(HES) 통계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도 조사된다. 호주의 Survey of Income and Housing(SIH) 통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된다. 이처럼 다목적 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와 단일목적 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혼재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작성통계의 시계열적 변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각 나라의 통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계의 작성항목 등 주요 특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호주의 SIH는 2003~04년 이전 조사까지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만 조사되었으나 2003~04년도 조사부터는 가구지출에 관한 Household Expenditure Survey(HES)와 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조사되고 있다. 가구단위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HES는 6년마다, SIH는 HES가 조사되지 않는 해에 작성된다.¹⁷⁾ 이처럼 각 나라의 통계의 작성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통계의 작성년도까지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의 가구단위 통계는 소득·소비·자산 각 항목에 대해 복수의 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통계가 여러 항목에 대해 작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17) 호주의 가구단위통계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수의(2013)의 부록을 참고.

의 통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통계작성 사례에 대한 국제비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소득 통계 작성 사례

소득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 대해 각 국가별로 하나의 통계만을 선정하여 비교한다. 국가별 소득 통계의 선정은 OECD IDD에 선정된 통계들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다만, OECD IDD에 선정된 통계들이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작성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표 9>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9개국 소득 통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다른 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였다. 국가별로 비교하는 각 소득 통계는 연구 시점 현재 가장 최근에 작성·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작성주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득 통계는 호주의 SIH(격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3년을 주기로 대표본(large sample)을 이용한 소득 통계를 작성하며, 대표본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해에는 소표본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까지 공표된 연간 가계동향은 2016년 가계동향이며, 실제 조사는 월별로 조사되고 있다.

소득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역년(calender year)을 기준으로 1~12월 기간의 소득을 파악하나, 일부 국가(호주, 영국)는 회계연도(financial year)를 기준으로 1년간의 소득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통계에서 파악되는 소득은 연소득이지만, 일부 국가는 예외가 존재한다. 호주의 경우는 소득의 구성항목별로 다르다. 임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주간 또는 월간으로 파악되나 부정기적인 소득과 자산소득은 연간, 공적 부조와 같은 정부지출(government payments)에 의한 소득은 격주로 파악된다. 영국은 가장 특이한데, 응답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에 수령한 소득액과 그 소득의 기간을 보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응답자가 가장 최근에 수령한 소득이 2주분의 급여 100파운드라면, 이를 주급으로 변환하여 주당 50파운드로 작성한다. 이스라엘은 월소득으로 파악한다.

작성된 소득 통계의 자료유형은 대부분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순수한 패널(panel) 자료이며,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횡단면자료이되, 일부 하위그룹별로는 패널 자료의 형태를 띤다.

소득 통계 작성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나라는 비교대상 국가 중 캐나다와 프랑스 두 나라 뿐이다. 두 나라 모두 둘 이상의 행정자료와 결합하여 소득 통계를 작성한다. 행정자료로부터 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통계 작성에 적절한 행정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통계적 목적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자료(예를 들어, 과세대장)에서 얻은 소득자료가 설문조사자료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유럽의 ‘소득 및 생활여건에 대한 EU통계(EU-SILC)’에 참여한 전체국가중 약 1/3에 해당하는 국가가 행정자료에서 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전체인구를 포괄하기 때문에 세부적 통계생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종단면 분석을 위한 통계 개발에 유용하고, 셋째, 응답자의 부담이 적고 자료수집 및 수집된 자료의 대체나 통계처리에 필요한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득자료와 비교할 때 표본오차나 무응답오차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자료를 통한 소득통계의 작성은 다른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탈세 혹은 위법행위 등으로 자료가 결측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관의 업무관례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셋째, 비공식적 업무나 다른 가구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소득(즉, 사적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 또는 UNECE, 2011; 22~23p).

조사기간은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다. 조사기간이 1년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영국, 이스라엘이다. 캐나다는 약 4개월(1~5월), 프랑스는 1분기(4/4분기), 독일은 약5개월(2~7월), 일본은 1개월(7월), 미국은 2개월(2~4월)이다.¹⁸⁾

18)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은 2016년까지는 모든 표본가구에 대해 매월마다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였지만, 2017년도부터는 전체 표본가구를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매월 하나의

설문을 실시하는 조사단위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구(household)’를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개인 단위로도 조사한다. 조사단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로는 캐나다와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캐나다는 개인과 가구 이외에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과 ‘센서스 가족(census family)’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¹⁹⁾ 이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하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간략히 설명하면, 센서스 가족은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적 가족은 혈연 등의 관계는 있으나 부양의무가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연 등의 관계도 없이 함께 사는 경우 및 1인 가구의 경우까지도 포함하면 민간가구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소득항목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므로 조사단위는 소득항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되 세금이 부과되는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소득세의 공동납세의무를 부가하지만 동거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상 또는 규정에 따라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부양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의 주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여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세금부과 단위가 달라지며, 따라서 다른 가구로 취급될 수 있다.

설문의 응답자 유형은 3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토록 하는 유형, 둘째, 대표가구원 1인이 모든 가구원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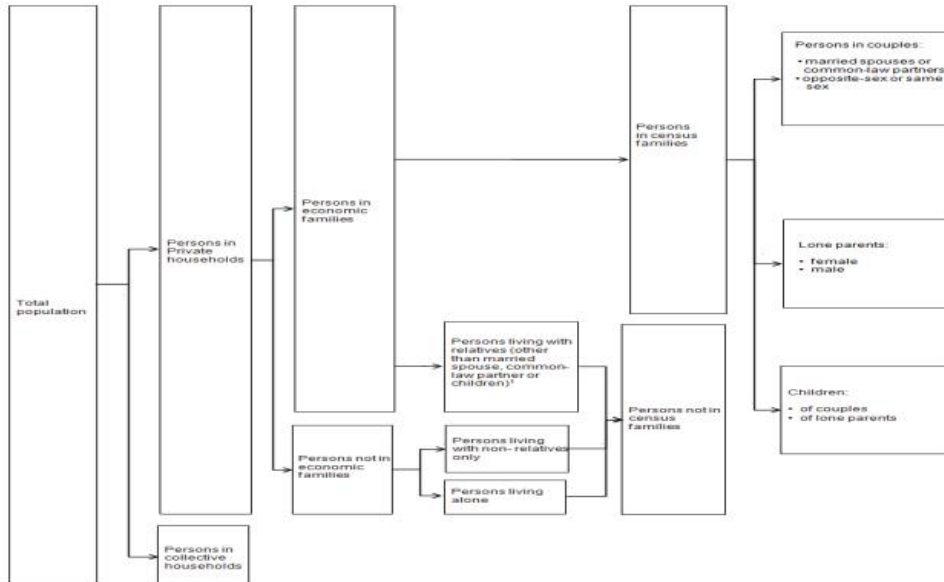
그룹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연간 자료인 2016년을 기준하여 비교하되, 2017년 가계동향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것을 권한다.

19) 경제적 가족 개념은 구성원이 혈연, 혼인, 관습법, 입양의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한다. 이와는 달리, 센서스 가족 개념은 구성원이 한 명의 배우자, 한 명의 사실혼 배우자, 한 명의 부모, 또는 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일 것을 요한다. 경제적 가족 개념은 센서스 가족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남편을 여윈 미망인은 센서스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들부부와 함께 경제적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센서스 가족이 함께 살며 하나의 경제적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기혼자녀부부와 함께 사는 부모, 부모와 떨어져 함께 사는 둘 이상의 성인 형제자매들 역시 센서스 가족은 아니나 경제적 가족을 구성한다. 결국 모든 센서스 가족의 구성원은 경제적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응답토록 하는 유형, 셋째, 양자의 혼합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응답토록 하되 일부 가구원에 대해서는 대리응답을 허용하는 유형이다. 호주와 미국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 일본은 첫 번째 유형만을 취하고 있다. 단, 일본은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응답자 1인만에 의해 응답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세 번째 유형만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하므로 별도의 응답자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 연령 이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토록 하고 있는데, 호주는 15세 이상, 캐나다는 16세 이상, 독일은 17세 이상, 영국은 16세 이상, 미국은 15세 이상인 모든 가구원이 응답토록 한다.

국가별 표본가구수(또는 가구원)는 각각 다르며, 응답률은 영국과 패널 조사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7] 캐나다 소득 통계(CIS)의 조사 단위: 가구, 경제적 가족, 센서스 가족



1. Foster children are included.

출처 :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 Census Dictionary Figure 18.

<http://www12.statcan.gc.ca/census-recensement/2011/ref/dict/figures/figure18-dict-eng.cfm>

[표 9] 주요 국가의 소득 통계 비교

항목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스라엘
		CIS	SLID	ERFS	FSIS			HIES+FHES	HIES			
자료명	SIH					SOEP	CSLC			FRS	CPS	
지니계수통계*												
공표시기(년/월)	2015/09	2016/07	2016/07	2015/09	2016/12	2016/12	2014/07	2015/05	2015/06	2015/06	2015	2015/10
다음 공표시기	2017/중순	2017/05	2017/05	2016/09	2017/12	2017/12	2015/07	2016 / 05	2016/06	2016/06	2016	2016/10
작성주기	- 연간	○	○	○	○	○	○	○	○	○	○	○
	- 기타	-	-	-	-	-	대표본: 3년 소표본: 그외	가계동향: 월	-	-	-	-
소득기간	2013-2014	2014	2014	2013	2014	2014	2012	2014	2013/2014 (financial year)	2014	2014	2014
소득 단위	1	1	1	1	1	1	10,000	1	1	1	1	1,000
사용된 통화	SAUD	Canadian Dollar		Currency	Euro		JPN (¥)	KRW	Pound sterling (£)		US Dollar	israel new shekel
	- 주간	-	-	-	-	-	-	-	△	-	-	-
	- 월간	-	-	-	-	-	-	-	△	-	-	○
	- 연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항목별 소득평가기간의 동일성	-	○	○	○	○	○	○	○	-	-	○	○
	항목별로 다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응답자마다 다름	년	년	월

항목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스라엘
	-정기: 주/월 -부정기: 년 -자산소득: 년 -공적부조: 격주						*가장 최근 소득에 및 기간을 보고 -주간으로 변환		
- 횡단면	○	○	○	-	○	○	○	-	○
- 패널	-	-	-	○	-	-	-	-	-
- 횡단면 *일부항목 그룹별 패널	-	-	-	-	-	-	-	○	-
- 행정기록 (단수)	-	-	-	-	-	-	-	-	-
- 행정기록 (복수)	-	○	○	-	-	-	-	-	-
- 일년 동안	○	-	-	-	-	○	○	-	○
- 특정 시기	-	2015-01-18 ~ 2015-05-04	4분기	2~7월 '15 (응답자80%)	매년 7월	* 가계동향은 매월	-	2월~4월	-
- 개인	○	○	-	○	-	○	○	-	○

항목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스라엘
- 가구	○	○	-	○	○	○	○	○	○
- 가족	-	○	-	-	-	-	○	-	-
- 세제단위 (fiscal unit)	-	-	-	-	-	-	-	-	-
- 기타	-	○	○	-	-	-	-	-	-
비고	-	가구, 경제직 가족, 센서스 가족	항목별로 다름 - 세금신고서로 평가됨 - 대부분 개인 또는 세금신고단위	-	-	-	-	동거하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수집	15세+
- 모든 성인	15세+	16세+	-	17세+	모든 有소득 가구원	-	16세+	15세+	-
- 대표응답자인	-	○	-	-	-	○	-	-	-
- 대리응답 허용	○	○	-	-	-	-	-	○	○
비고		통상 1명	소득조사 안함				-미혼자녀(16-19) 제외		

응답자

항목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스라엘
- 가구원 수	34,283	58,795	114,316	27,183		32,443	-자녀는 부모의 대리응답 46,000	68,000	
- 가구 수	14,162	24,617	50,080	15,841	26,387	12,377	20,000		8,465
응답률	78.0%	70.1%	74.6%	30-50%	72.5%	75% ~ 80%	60.0%	about 80%	71.4%

† 자료명 : 호주 SIH -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캐나다 CIS - Canada Income Survey, 프랑스 ERFIS - Enque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Tax and Social Incomes Survey), 독일 SOEP - German Socio Economic Panel, 일본 CSLC -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한국 HIES - 가계동향, 한국 FHES - 농가소득조사, 영국 FRS

- Family Resources Survey, 미국 ASEC of CPS -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of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이스라엘 HES - Households Expenditure survey

※ 지니계수 통계명 : 캐나다 SLID -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프랑스 FSIS - Fiscal and Social Income Survey

‡ 작성기관명 :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프랑스 - Unsttute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INSEE), 독일 - DIW Berlin, 일본 - Statistics and Inform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한국 - 통계청 복지통계과, 영국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미국

- US Census Bureau, 이스라엘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출처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Metadata, 각국 통계청 홈페이지

다. 소비 통계 작성 사례

가구단위의 소비통계에 대해서는 UN의 권고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UN이 권고하는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법(COICOP)’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통계에 대해서는 소득 통계나 자산 통계만큼 나라마다 개념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 대신, 소비통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다른 통계에 비해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크므로, 나라마다 실제 조사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비통계 작성의 난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은 저마다의 사정에 맞는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구단위 지출조사는 그 복잡성 및 고비용으로 인하여 여타의 사회경제적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에 따라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통계국(Eurostat)은 최소한 5년 이내의 조사빈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가구단위 지출조사는 조사주기는 이보다 짧거나 또는 연간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의 가구단위 지출조사는 구분된 하위그룹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조사하는 ‘Type-B’형태의 조사방식(Sub-samples in a series of cross-sectional design)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동일한 패널가구에 대해 매월마다 응답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응답토록 하는 연동표본제 하의 ‘Type-C’형 설계방식을 채택하다가, 2017년에 ‘Type-B’형태로 변경되었다.²⁰⁾

20) 조사설계의 Type-B형 또는 Type-C형에 관하여는 박정수의(2013)를 참고

[표 10] 주요 국가의 가구지출조사 조사설계 비교표

국가명	통계명	Type	조사기간 (년)	가계부 작성기간 (월)	조사주기	표본가구의 응답회수 (회)	표본가구의 응답기간 (년)
호주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Type-B	1.00	0.5	6년	1	-
캐나다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Type-B	1.00	0.5	1년	1	-
덴마크	Household Budget Survey	Type-B	1.00	0.5	3년	1	-
프랑스	Household Budget Survey	Type-B	1.00	0.5	5년	1	-
이스라엘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Type-B	1.00	0.5	1년	1	-
일본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ype-C (월/연동)	0.08	1.0	1월	6	0.5
	National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ype-A	0.08	1.0	5년	3	0.25
뉴질랜드	full Household Economic Survey	Type-B	1.00	0.5	3년	1	-
	Household Economic Survey (income)	Type-B	1.00	0.5	1년	1	-
대한민국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16년까지)	Type-C (월/연동)	0.08	1.0	1월	36	3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17년부터)	Type-B	1.00	1.0	1년	1	-
스페인	Household Budget Survey	Type-D	1.00	0.5	1년	2	2
영국	Living Cost and Food Survey	Type-B	1.00	0.5	1년	1	-
미국	Consumer Expenditure Survey	Type-C (분기/연동)	0.25	0.5	5분기	5	1.25

* 출처 : 박정수외(2013), 101p에서 인용 및 수정.

* 조사기간 : 모든 표본가구가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가계부 작성기간 : 표본가구가 1회 응답시 가계부를 작성하는 기간, 조사주기 : 1회 조사와 다음회 조사 사이의 기간, 표본가구의 응답회수 : 선정된 표본가구가 교체전까지 응달하는 총회수, 표본가구의 응답기간 : 선정된 표본가구가 응달하는 전체 기간

라. 자산 통계 작성 사례

1) 자산 통계의 주요 개요

이하에서는 가구단위 자산통계에 대한 작성사례를 검토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직접조사(survey)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지만, 일부 국가(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몰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정보에 대해 행정자료를 통해 생산한다. 대부분의 조사통계는 횡단면 조사이나, 일부 국가(벨기에,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는 패널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조사는 패널자료로만 조사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사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한국, 터키 및 미국이다. 한편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및 영국은 자산과 소득 정보만을 함께 조사한다. 유산과 물질적 감가 및 다른 주제들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함께 조사되고 있다.

[표 11]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주요 개요

국가/기구	통계명	작성주체	자료 출처	표본추출법	자료 수집	관측 수	기간 비교가능 데이터수	조사항목				패널자료 여부	행정자료 이용/ 매칭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주요 항목		
유럽 중앙은행	HFC ¹	유럽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계청	조사	국가마다 상이	대면조사, 웹기반 설문조사 (네덜란드만)	사용불가	0	○	○	고용, 연금수당, 상속, 선물	○	국가마다 상이	국가마다 상이
유로지역	HFC ²	시노베이트 (Synovate)	ECB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조사	층화추출법	대면조사	2,360	0	○	○	기타	○	예	아니오
호주	SIH ³	통계청	조사	층화추출법, 군집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19,212 개인, 9,961 가구	3 (2003)	○	○	물질적 박탈	○	아니오	아니오
캐나다	SFS ⁴	통계청	조사	층화추출법,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행정자료	12,821 개인, 5,188 가구, 5,282 가족 (총: 23,291)	2	○	○	지출	○	아니오	예/예
프랑스	EP ⁵	통계청	ECB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조사	층화추출법,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29,442 개인, 15,006 가구, 35,729 개인(총)	약 5	○	○	지출, 수입, 증여, 상속, 생애경로 및 직업경로, 고용, 위험회피, 유형적 및 무형적 자산		아니오	예/예
독일	EYS ⁶	연방통계청	조사	할당 표본	자가 설문지	56,274 가구 (자산과 부채)	7 (1978)	○	○	내구재 가정용 기기	○	아니오	아니오

국가/기구	통계명	작성주체	자료 출처	표본추출법	자료 수집	관측 수	기간 비교가능 데이터수	조사항목			패널자료 여부	행정자료 이용/ 매칭
								주요 항목 지출 소득	주택	기타		
일본	NSFIE ⁷	통계청	조사	층화추출법, 군집 다단계 추출	자가 설문지	56,800 가구	사용불가	○		물질적 감가	아니오	아니오
한국	SHF ⁸	통계청	조사	층화추출법, 군집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10,524 가구	1	○		지출, 소득	아니오	아니오
영국	WAS ⁹	통계청	조사	층화추출법,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53,298 개인, 30,595 가구	2		○	소득, 태도, 가계부채, 주관적 웰빙	예 (100%)	아니오
미국	SCF ¹⁰	연방준비제도이 사회	조사	층화추출법, 군집다단계 추출, 이중표본추 출	대면조사 및 전화조사	6,513	8	○		지출금융기관, 직업력, 결혼 기록, 연금수급권	횡단면 자료, 패널자료 (86-09)	아니오
이스라엘	HES ¹¹	통계청	조사	다단계 추출	대면조사, 자가 설문지	6,270 가구	13	○		물질적 감가	아니오	아니오

출처 : OECD(2013b), OECD Guideline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Annex D.

1: (HFC)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2: (HFC)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3: (SIH)Survey of Income and Housing, 4: (SFS)Survey of Financial Security, 5: (EP)Enquête Patrimoine, 6: (EVS)Sample Survey of Income and Expenditure, 7: (NSFIE)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8: (SHF)Survey of Household Finances, 9: (WAS)Wealth and Assets Survey, 10: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 11: (HES)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 자산 통계의 자료 수집 특성

조사대상가구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시설가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가구단위 조사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응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부분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조사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및 개인단위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주거 및 예산을 공유할 경우 가구로 인식한다. 그러나 가구 내 조사응답자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응답가구원을 선정하는데,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가구원이 대표로 응답한다. 다른 나라들은 가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응답하며, 프랑스와 영국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토록 한다.

고소득층의 높은 응답거부로 인하여, 일부 국가(호주,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몰타, 노르웨이 및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대표집(over-sampling)이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몰타, 뉴질랜드, 포르투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자산의 상한을 적용하기도 한다.

[표 12]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자료 수집 특성

국가/기관	진행 응답률	무응답 가구 처리	조사배제인구	특이치 제외	관측 단위 정의	인터뷰 대상자	데이터 수집 기간	가중치 이용성	비응답항목을 위한 대체/사용된방법론	과대표집 (over-sampling)	상한값	필수 조사
유럽중앙은행	50-60%	결측치	시설가구	미적용	개인 (인구통계, 연금, 소득) 가구	가계의 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국가마다 상이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부유한 가구의 과대표출은 상이함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통계청이 설문조사 수행
호주	> 80%	결측치	저밀도지역, 비거주지, 부주소득자 (2-3%)	노인	공동 주거인	*	연중 지속적으로	예	특정이 일치하는 완전 응답 가구의 기록	아니오	아니오	예
캐나다	60-70%	결측치	3개 영토 (Yukon, North West, Nunavut) 인디언보통구역 다른 나라 공식 대표 군대 캠프 또는 피난소 회원 (2%)	미적용	경제적 가족	참조인	4월 -6월	예	예 고소득 그룹은 총 가족소득 200,000USD 또는 투자 소득 50,000USD로 정의됨	예 고소득 그룹은 총 가족소득 200,000USD 또는 투자 소득 50,000USD로 정의됨	사용불가	사용불가
프랑스	60-70%	결측치	비개인용 주택 거주자 부주소득자(2.4%)	미적용	개인가구	주어진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	10월 - 2월	예	예 보유 범수만 관련 stratified hotdeck에 의한 균형 대체	예 Wealth and CSP crossed by age over sampling rate; sample size in defined ex ante. Neyman's alloca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size of each strata	아니오	예
독일	적용 불가 (할당)	결측치	해외 영토에 있는 사람들 영구 주소가 없는 사람들 공동 주택 및 기관에	미적용	공동 주거+공동예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1월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78 소득·소비·자산 통계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국가 기관	전체 응답률	무응답 가구 처리	조사배제인구	특이치 제외	관측 단위 정의	인터뷰 대상자	데이터 수집 기간	가중치 이용성	비용담항목을 위한 대체/ 사용된방법론	과대표집 (over-sampling)	상한값	필수 조사
	추출)		거주하는 사람들 웹간 순 수입이 18,000 유로 이상인 가정									
일본	> 80%	결측치	해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을 영구 주소가 없는 사람들	규칙 또는 소수 민족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9월-11월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한국	> 80%	결측치	영구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15세 미만으로 혼자 거주하는 학생	미적용	공동 주거+응용예산	가정 생활에 책임이 있는 사람	4월-5월 중 20일	예	아니오	예 132m2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을 과다추출	아니오	예
영국	50-60% and above for some waves	결측치	해외 영토에 있는 사람들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사람들 비 개인용 주택에 사는 영구 주소가 없는 사람들 (부부 집 (<1 %))	미적용	개인가구	주어진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	연중 지속적으로	예	예	추진된 고소득 가구 자세한 내용은 부록 시트를 참조	예	아니오
미국	69%	결측치	해외 영토에 사는 사람들 비 개인용 주택에 사는 사람들	미적용	경제적 가족	참조인	Families and individuals	예	누락된 데이터의 복수의 대체	부유한 사람들을 과다추출	아니오	사용불가
이스라엘	> 80%	결측치	해외 영토에 사는 사람들. 비 개인용 주택에 사는 사람들 / 5 %	미적용	공동 주거+응용예산	설문지에 담긴 첫 번째 성인	연중 지속적으로	예	예 응답자의 평균 사용 가격 목록 파일 사용	아니오	아니오	예

3) 자산 통계의 구조

자산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럽의 가구금융 소비조사(HFCS)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assets)과 더불어 각 자산별 부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산(assets)은 유형별로 조사하나 부채는 총액만을 조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한국 및 터키는 자산(asset)의 총액을 기록하나, 뉴질랜드와 미국은 순액만을 기록한다.

자산평가의 기준시점은 통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접당시이나 이탈리아, 핀란드, 한국,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는 특정 기준시점으로서 면접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통상 응답자가 응답한 금액으로 한다.

[표 13] 주요 국가의 자산 통계의 구조

국가 / 기관	총 또는 순 기초	화폐금액 기준시점	평가 방법	외부 지표와의 일관성	참조기록	기타 자산변수 및 거래 관련 데이터 수집 정보
유럽 중앙은행	수집된 가계 자산과 가계 자산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한 순 가치	국가마다 상이 (대부분의 시간: 면접 시점 시기) 통화 금액 및 범위	응답자에 의한 추정치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응답 기록(금융 자산과 부채만 해당)	ECB는 외부 출처와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 외부 출처와의 추가 점검도 수행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투자 태도, 위험 회피, 태도 절약 지난 12 개월 간 평균 소득 대비 비용 비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재정적 제약, 은퇴 계획 소득과 상속 기대, 구매 자산 판매, 자본
호주	함병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 총 손익 (순 부채)	면접 시점 통화금액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응답 기록	예 뮤추얼 펀드 및 투자 펀드, 기타 금융 자산, 수집품, 기타 비금융 자산 비즈니스 대출, 할부 부채, 비공식 부채를 제외한 국민 계정 대차대조표 데이터는 조정은 발생하지 않음	대출 명세서 신용 카드 내역서 청구 계좌 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당좌예금출납장 연금 증명서 주식 증명서	
캐나다	총	면접 시점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응답	아니오	은행 기록	자산의 구매 및 판매

국가 / 기관	총 또는 순 기초	화폐금액 기준시점	평가 방법	외부 자료와의 일관성	참조기록	기타 자산변수 및 거래 관련 데이터 수집 정보
		통화금액 면접 시점 통화 금액 응답자가 범위를 응답함	기록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응답 기록 응답자에 의한 추정치 (부동산만 해당)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예 국민 계정 시트 데이터의 조정으로 이어짐	부채 모든 채무 제표 할부 상환 테이블, 은행, 보험 진출서, 피청구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타 기록	자본 손익 위험 회피 저축 태도
프랑스	총	조사 연도 통화 금액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독일	총	면접 시점 통화금액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차량의 경우: 허용 되고 인기 있는 자동차 가격표로부터 대체됨)	예 세금 기록이 있는 생명 보험 및 연금 자산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조정되지 않음	아니오	자신의 구매 및 판매
이스라엘	총	면접 시점 금융 자산 및 부채의 통화 금액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모델화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일본	총	면접 시점 금융 자산 및 부채의 통화 금액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모델화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국가 / 기관	총 또는 순 기초	화폐금액 기준시점	평가 방법	외부 자료와의 일관성	참조기록	기타 자산변수 및 거래 관련 데이터 수집 정보
		비 금융 자산의 정의된 범위				
한국	총	전년 말에 통화 금액	응답자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평가	아니오 거래 값 데이터가 있는 주거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간혹 수정 됨	은행 통장 보험 계약 가계부 등	자본 손익
영국	총	면접 시점	응답자에 의한 추정치	아니오	응답한 자산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한 모든 사람	가치 변동에 대한 패널데이터의 자산과 부채의 변화
미국	순, 각각 수집된 부채	면접 시점 통화 금액 또는 범위	응답자에 의한 추정치 응답자로부터의 직접 평가	예 그러나 조정이 수반되지 않음	세금 환급 계정 명세서 사업 기록 등	자본손익 미실현 손익

3. 우리나라의 통계 작성 사례²¹⁾

우리나라의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대한 가구단위 통계로는 가계동향 조사와 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리고 재정패널조사가 있다. 농가·어가·임가 가구는 가계와 영업활동을 겸하는 가구로서 일반적인 가구와는 소득·지출 흐름이 상이하어 별도로 조사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되며, 그 외의 나머지 통계들은 모두 연도별로 조사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읍면동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5년부터 매년 4천가구의 표본가구가 교체되어 5년에 걸쳐서 전체 2만가구의 표본이 교체되는 연동패널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재정패널조사 역시 전국을 대표하는 약 5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최초 작성당시인 2008년에 추출된 표본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하는 고정패널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4] 국가주요지표 중 소득·소비 영역 지표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주기	조사대상
1. 가계동향조사 ^{주1)}	통계청	분기	비농림어가
2.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연간	농가
3.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연간	어가
4. 임가경제조사	산림청	연간	임가
5.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청	연간	가구
6.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간	가구

1) 주1)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폐지되어 가계지출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작성주기도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농가·어가·임가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 중 6.5%에 불과하므로, 비농림어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동향조사로도 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21)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폐지되어 ‘가계지출조사’로 대체되었고, 작성주기도 연간조사로 변경되어 연구시점 현재, ‘가계지출조사’의 세부적인 조사항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6년까지 작성되었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표 15] 우리나라 농가·어가·임가 가구 수 및 인구 수: 2015년 기준

	가구 수(개, %)		인구수(개, %)	
	수(개)	%	수(개)	%
농가	1,088,518	5.7%	2,569,387	5.0%
어가	54,793	0.3%	128,352	0.3%
임가	90,510	0.5%	217,197	0.4%
전체	19,012,895	6.5%	51,014,947	5.7%

가계동향조사는 다목적 통계로서, 가계의 소득 및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감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소득의 유형별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조사되고 있으며, 자산(assets) 및 부채 변동으로 인한 수입도 조사된다. 즉 자산의 수준(level)은 조사되지 않으나 자산의 변화(change)로 인한 수입은 조사되고 있다. 지출은 COICOP 12대 분류에 따라 세세항목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조세 및 이전지출과 이자비용도 조사되고 있으며, 역시 자산의 변화로 인한 지출도 조사되고 있다.

한편, 가계동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중단되거나 통합·변경되는 등의 변천을 겪어왔으나, 2008년에 신분류체계를 적용하여 1990~2016년 기간의 모든 년도에 대해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신분류체계의 자료는 1990~2016년 기간에 대해 조사항목이 모두 동일하다.²²⁾

[표 16] 가계동향의 주요 조사항목

category	LEVEL	내 용
소득	대	소득
	중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
	중	사업소득
	중	재산소득
	중	이전소득

22) 1990~2016년 기간에 대해 조사항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로 동일한 조사항목으로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거쳐 동일한 정보를 제공토록 수정하였음을 의미한다.

category	LEVEL	내 용
	중	비경상소득
	대	기타수입
	중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중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중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주택	-	월세평가액
	-	전세보증금
	-	월세(사글세)
	-	사용면적
	-	주택소유구분 ('90~'97년자료없음·공란)
지출	대	가계지출
	대	소비지출
COICOP	대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대	02. 주류 및 담배
	대	03. 의류 및 신발
	대	04. 주거 및 수도광열
	대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대	06. 보건
	대	07. 교통
	대	08. 통신
	대	09. 오락·문화
	대	10. 교육
	대	11. 음식·숙박
	대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대	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
	중	비경상조세
	중	연금
	중	사회보장
	중	이자비용
	중	가구간 이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지출	대	기타지출
	중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중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중	자산이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과거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금융감독원의 가계 신용조사, 한국은행의 가구패널조사의 3개 통계를 통합하여, 2010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통계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작성목적은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 자산(assets),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2011년에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금융조사였으며, 2012년부터는 표본가구를 2만 가구로 확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가구표본 1만 가구, 복지가구표본 1만 가구로 구성되며, 조사항목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액은 2014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지출의 유량(flow)변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자산·부채 및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저장(stock)변수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표 1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및 연도별 비교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	가구번호	○	○	○	○	○
가구주	가구주 성별	○	○	○	○	○
가구	가구원수	○	○	○	○	○
	가구유형	○	○	○	○	○
	주택의 종류	○	○	○	○	○
	전용면적	○	○	○	○	○
	입주형태	○	○	○	○	○
자산	자산총액	○	○	○	○	○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적립식 저축	○	○	○	○	○
	예치식 저축	○	○	○	○	○
	기타 저축	○	○	○	○	○
	임차보증금	○	○	○	○	○
	실물자산	○	○	○	○	○
	부동산	○	○	○	○	○
	거주주택	○	○	○	○	○
	기타_거주주택	○	○	○	○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	○	○	○	○
	기타실물자산	○	○	○	○	○
자동차	○	○	○	○	○	
자동차이외	○	○	○	○	○	
부채	부채총액	○	○	○	○	○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융부채	○	○	○	○	○	
	담보대출	○	○	○	○	○	
	부동산 담보대출	○	○	○	○	○	
	거주주택 담보대출	○	○	○	○	○	
	신용대출	○	○	○	○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	○	○	○	
	외상및할부미상환액	○	○	○	○	○	
	갯잔후 불입금액	○	○	○	○	○	
	입대보증금	○	○	○	○	○	
순자산	순자산액	○	○	○	○	○	
	경상소득	○	○	○	○	○	
소득	근로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재산소득	○	○	○	○	○	
	이전소득	○	○	○	○	○	
	공적이전소득	○	○	○	○	○	
	사적이전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균등화 가처분소득_분배		○	○	○	○	
	지출	복지 지출	○	○	○	○	○
		복지 소비지출	○	○	○	○	○
복지 전체생활비		○	○	○	○	○	
복지 식료품(외식비포함)		○	○	○	○	○	
복지 주거비		○	○	○	○	○	
복지 교육비(보육비포함)		○	○	○	○	○	
복지 의료비		○	○	○	○	○	
복지 교통비		○	○	○	○	○	
복지 통신비		○	○	○	○	○	
복지 경조비 및 기타지출		○	○	○	○	○	
복지 경조비		○	○	○	○	○	
복지 기타지출		○	○	○	○	○	
비소비지출		○	○	○	○	○	
세금 및 과징금		○	○	○	○	○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료		○	○	○	○	○	
가구간 이전		○	○	○	○	○	
비영리단체 이전		○	○	○	○	○	
연간 지급이자		○	○	○	○	○	
연간 상환액				○	○	○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	○	○	
부채							
	담보대출용도별(담보_대출잔액)	○	○	○	○	○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주주택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전(월)세 보증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증권투자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부채상환(담보_대출잔액)	○	○	○	○	○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결혼자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의료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교육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생활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기타 용도(담보_대출잔액)	○	○	○	○	○
	담보형태(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 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예금,적금,보험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기타 담보형태(담보_대출잔액)	○	○	○	○	○
	신용대출용도(신용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전(월)세 보증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증권투자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부채상환(신용_대출잔액)	○	○	○	○	○
	사업자금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결혼자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의료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교육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생활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기타 용도(신용_대출잔액)	○	○	○	○	○
	부채보유여부	○	○	○	○	○
가구주	가구주 종사상지위	○		○	○	○
조사	가중치	○	○	○	○	○

제2절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1. 개요

본 절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계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국가들의 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하고 우리 사회에 특수한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감안하여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소득·소비·자산 분야에 대한 통계프레임워크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요 개념들과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정량지표를 도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을 적시하여 프레임워크 구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가급적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우선한다. 정량지표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기초로 삶의 질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현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성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정책입안을 위한 탄탄한 토대로서 역할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지향한다.

앞선 논의에서 가구는 최적화의 결과로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고 이와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비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assets) 그리고 부채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결정하는 개별적 요소이자 기본적으로 서로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변수들로 파악된다.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중심으로 소득, 소비, 자산(assets), 부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소비·자산 통계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다음 세 개의 영역을 제

시한다.

- 가구의 현재와 미래 소비
-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개인 및 가구의 파산 위험
- 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 측면의 지속가능성, 소득과 자산의 분배적 불균등

첫 번째 영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의 현재와 미래 소비’ 수준이다.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소비라고 볼 수 있다. 가구의 소비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진행되며 현재와 미래의 소득, 그리고 자산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본 영역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산물인 소득 그리고 미래 소비의 기초가 되는 자산(assets)과 부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득 발생의 원천과 소비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산(assets)과 부채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에 가능한 소비를 예측하고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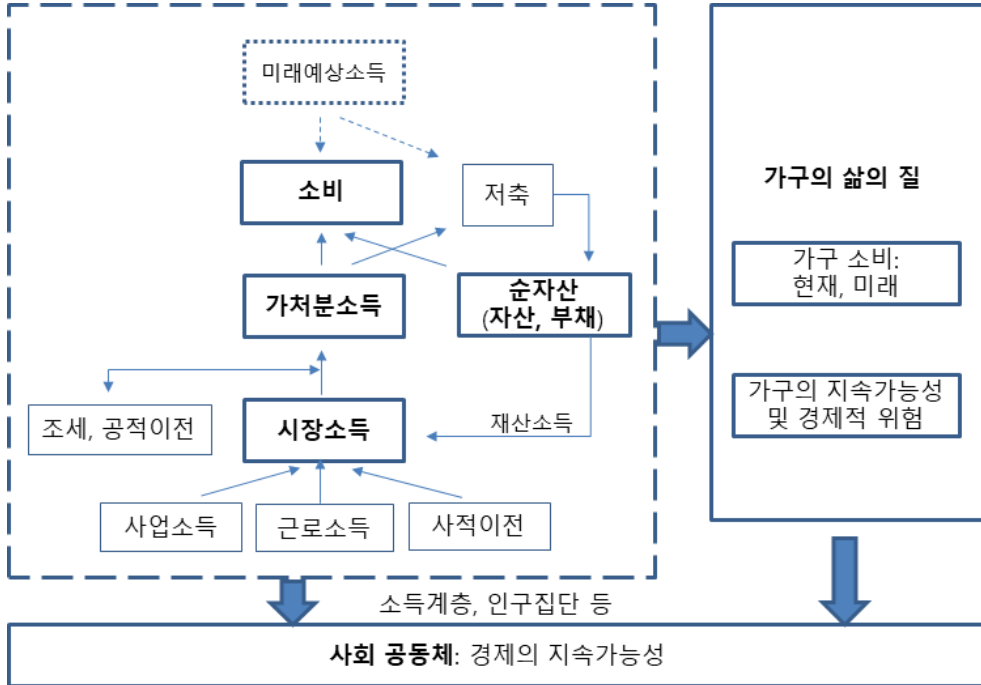
두 번째 영역은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가구원들이 생애에 걸쳐 경제적 웰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구가 경제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순자산과 소득 흐름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위험은 가구의 재무적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금융시스템이 발달하였고 가구는 미래를 위한 저축, 원활한 사업운영비 마련, 주택구입, 소비생활 등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 자금수요와 자금여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생애에 걸친 경제적 웰빙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며 부채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 가구가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무적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재무적 파산은 가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며 정상적인 경제적 웰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의 유의한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채와 관련하여 한계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경제적 위험은 고용불안에 관한 것인데 소득의 기반이 되는 고용이 중단되어 실업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부문의 실업 관련 영역과 중첩이 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검토를 생략한다.

세 번째 영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구 전체에 대한 소득과 자산의 분배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경제전체 차원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기술발전, 글로벌화 및 개방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또 우리경제에서 소득분배 및 자산분배의 악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가구의 평균적 소득, 소비, 자산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을 넘어서서 각 지표들에 대한 가구별 분포를 도출하여 가구간 경제적 웰빙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고 사회내 잠재되어 있는 갈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하고 개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이나 감내할 수준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내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사회공동체 내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반응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이 전개되어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그림 8>은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으로 소득, 소비,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간에 기본적인 관계를 명시하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8] 소득·소비·자산 통계의 프레임워크



좌측 상단의 박스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결정짓는 소득, 소비, 자산 간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소득을 더하여 일차적으로 시장소득을 획득한다. 여기에 정부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을 통해 시장소득은 조정 받아 가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도출된다. 가구는 가처분소득, 예상되는 미래소득 및 현재의 순자산 수준을 감안하여 소비와 저축을 결정할 것이며 이 때 소비되지 않은 저축은 전기 자산에 더해진다. 이처럼 소득, 소비 및 자산은 여러 통로로 서로 영향을 주며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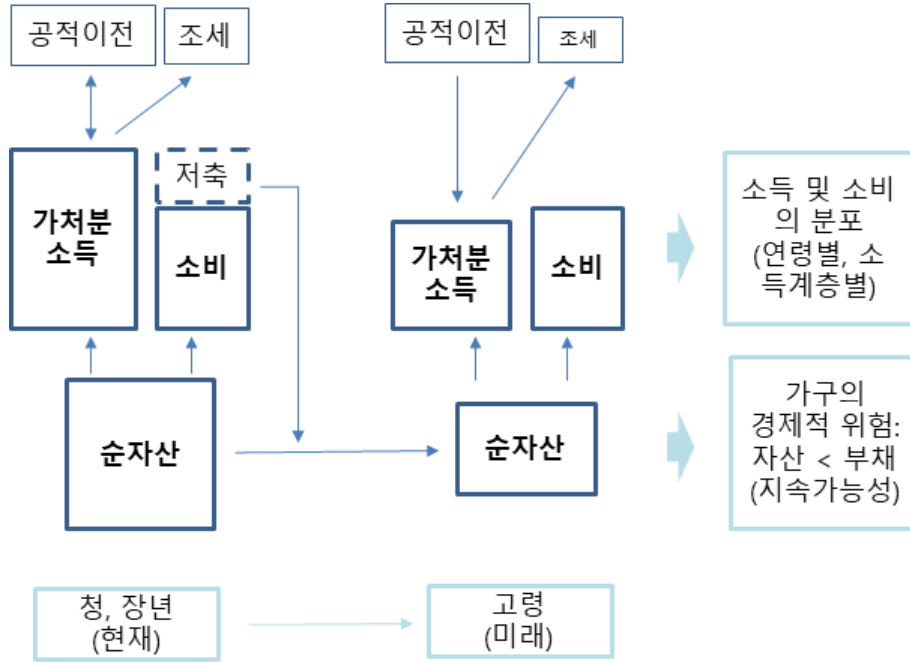
경제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감안하면서 우선 본 프레임워크는 평균적인 가구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및 미래의 소비’영역과 ‘가구의 지속가능성’ 영역 등 두 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소비, 자산의 제 요소들에 대한 소득

계층별, 인구특성집단별 분포를 기초로 사회공동체 측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경제의 지속가능성’ 영역을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9>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자산 간 관계를 도식화 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애를 소득이 발행하는 청장년기와 은퇴 후 고령기로 구분하였고 각 시기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등의 변수들이 다음 시기의 각 변수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유의할 부분은 우선 청장년기의 저축이 고령기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자산이 되므로 청장년기의 소비와 저축 결정이 고령기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은퇴 후 고령기에는 가처분소득이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므로 청장년기에 저축으로 순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고령기에 필요한 소비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노령빈곤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기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이전이라는 사회안전망 존재 자체가 청장년기의 저축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공적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생애주기에 따라서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의 구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의 평균적인 경제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9]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자산 간 관계



다음은 각 영역을 적절히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지표와 세부보조지표들을 구성해 보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제시한다. 각 지표에 대한 측정상의 이슈는 3절에서 논의한다.

2. 현재 및 미래 소비 영역

‘현재 및 미래 소비’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가구의 ‘현재 소비’는 정량적으로 직접 매기 관측되는 부분이고 ‘미래 소비’는 관측되지 않으나 가구의 현재 소득, 미래 예상소득, 그리고 자산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미래예상소득은 관측할 수 없으므로 ‘현재 및 미래 소비’의 범위를 규정짓는 측정 가능한 정보는 현재 관찰된 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소비, 자산을 각 세 개의 세부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량들의 평균, 변화, 구성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세부 영역은 ‘소득’으로서 가구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여력을 결정짓는 가구의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소득’ 세부영역에 관련해서는 가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가구의 시장소득’과 여기에 조세 및 공적이전 등을 조정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주요 지표로 구성한다. ‘시장소득’이란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의 보상과 사적 이전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노동에 기초한 소득, 이자 및 배당 등 재산에 기초한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을 합하고 여기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조정된 소득으로서 가구가 최종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연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공적 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구한다.

가계소득과 관련하여 국민계정에는 거시지표로서 가계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총량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있어 이를 주요지표에 포함시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시자료에 기초한 가구소득은 가구단위의 평균 및 중위소득을 측정하는데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가구표본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얻은 자료라서 설문조사가 갖는 측정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사 기피로 인한 고소득층의 과소 반영, 재산소득의 과소보고 등 측정상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점들을 국민계정 상의 총량지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소득 중에서 법인소득과 이자, 임료 등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하고 여기에 조세 및 이전소득을 조정한 소득이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중에서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이다. 총량지표이므로 가구단위의 소득으로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구로 나누었을 때 개인기준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행정자료의 이용이 검토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가계소득 측정의 엄밀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조지표로는 우선 가구소득의 증가율,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등 주요지표의 실질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지표의 변화율

은 현재 경제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정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예상 소득에 대한 정보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가구 시장소득의 원천을 파악하여 각 소득계층별, 연령별 가구가 어떤 종류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각 계층 및 연령별 가구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저소득층이 집중된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소득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가 가계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공적이전에 대한 지표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정상 및 비정상조세가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을 살펴보고 각 소득계층별 연령별 가구가 부담하는 세 부담의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하여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가 어느 정도 배려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세부담과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세부영역은 ‘소비’로서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으로 가구의 현재 웰빙을 측정하는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주요지표로 삼아 가구의 소비성향을 파악한다. 보조지표로는 가구가 어느 항목에 소비지출을 하는지 소비지출의 구성을 살펴보고 소비지출 중에서 의식주의 비율,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 통신, 의료 등을 포함하는 비탄력적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정도를 파악하여 가구가 부담으로 느끼는 소비지출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 지출 중에서 소비에 쓰이지 않는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타가구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을 파악하여 비소비 지출 비중을 측정한다.

세 번째 세부영역은 ‘자산’으로서 가구의 미래소비와 동시에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지표로는 가구당 자산, 가구당 부채, 그리고 가구당 순자산이 포함된다. 가구의 자산 및 순자산은 미래소비의 기초가 되는 한편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해 준다. 자산은 가구의 소득을 기반으로 저축을 통해 축적된 부분과 부채를 통해 조달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산은 가구가 생애에 걸쳐 현재 및 미래소비 등 경제적 웰빙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한편 ‘자산’ 세부영역은 ‘가계의 지속 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영역에도 교차하여 포함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실질적인 잔여재산을 의미하는 한편 부채상환의 여력을 의미하여 가구가 재무적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규모도 가계의 경제적 위험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보조지표로는 우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비중 등 자산의 구성을 살펴 보아 미래소비나 부채상환을 위해 유동성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득에 비하여 자산의 축적정도를 반영하는 소득 대비 자산과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그리고 부채가 소득 흐름으로 감당할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포함한다.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가계저축률을 파악하여 향후 미래자산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

각 주요 및 보조지표에 대한 상세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별 지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다른 사회통계 부문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제시한 논의된 사회적 이슈들을 바탕으로 1인가구, 고령가구, 취약집단 등의 상세표를 제시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표 18] 현재 및 미래 소비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시장소득 ◦ 가구 가처분소득 ◦ 가계 처분가능총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득의 원천구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가구 소득의 증가율 ◦ 가계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 ◦ 조세부담률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 가계 처분가능소득 ◦ 1인당 GDP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비 ◦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의 구성 ◦ 비탄력적 소비의 비율 (의식주, 교육, 통신, 의료 등) ◦ 비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연간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비 ◦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구성 (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저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 보조지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별 상세표 제시

3.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가구의 경제적 웰빙은 현재 및 미래 소비 뿐 아니라 가구가 경제적으로 효용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가구에 절실한 소비활동에 급격한 제한을 받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영역에서는 이처럼 ‘가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위험’을 측정하고 관찰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세부영역은 ‘자산’으로서 그 주요 및 보조지표 등 구성요소 및 세부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절에서 기술한 바 있다.

두 번째 세부영역은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험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부채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가구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 위험 가구를 부채상환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유량(flow)측면과 저장(stock)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유량측면은 소득흐름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

산이 원리금 상환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저량측면은 가구부채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주요지표로는 전체 가구 중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의 비율을 들 수 있는데 정의를 살펴보면 유량측면에서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40%)를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가구를 식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저량측면에서는 한계가구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부실위험가구는 주택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 총자산과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³⁾ 보조지표로는 한계가구의 수와 부실위험가구의 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를 충분히 지지해 주는지 여부에 따른 흑자가계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위험가구에 대한 파악은 복지 및 금융정책입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앞서 2장에서 논의한 소득과 자산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의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장기 실업자, 한부모 가구나 조손 가구, 고령자 및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들은 위험가구로 분류될 수 있고 이들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주요지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19]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 가구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구성 (금융, 실물 자산) ◦ 소득 대비 자산 ◦ 소득 대비 부채 ◦ 소득 대비 순자산 ◦ 가계저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자산 ◦ 가구당 부채

23) 유경원(2016)의 정의를 인용하였고 유경원(2016)에 의하면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위험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비율 ◦ 부실위험가구의 비율 ◦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수 ◦ 부실위험가구의 수 ◦ 후자가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구의 비율

* 보조지표는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별 상세표 제시

4. 경제의 지속가능성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전체 가구의 평균적 수치만으로는 경제 내 전체 가구들이 누리는 경제적 웰빙을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경제적 자원이 가구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지를 살피는 가구간 ‘소득분배’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부영역이 된다.

주요지표로는 전체 분포를 기준으로 소득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과 최저소득층 대비 최고소득층 간 소득 5분위 배율을 고려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균등한 분포를 0으로 삼고 가장 불균등한 분포를 1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구 전반에 대한 소득분포를 파악해야 하는데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각 국가들은 표본조사에 기초한 측정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별로 표본조사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수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별 비교를 할 때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니계수 산출은 표본조사에 기초하므로 각 표본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다섯 개 분위로 나눈 후 최고소득 계층인 5분위의 평균소득이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평균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소득 중간계층에 대한 정보는 전달해 주지 못하지만 최고와 최저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를 보여준다. 지니계수보다는 단순한 개념이어서 포괄성은 떨어지지만 일반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개념이다. 가구의 경제적 삶의 질 기준에서 보면 두 지표 모두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보조지표는 빈곤 계층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빈곤층의 비율을 측정하는 상대빈곤률을 고려한다. 빈곤률도 단기빈곤률과 장기빈곤률을 측정하여 단기는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빈곤과 근로 빈곤층이 최근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어 고령가구의 빈곤률과 근로 빈곤층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보장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중산층 비중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주위의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한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이 소득측면 뿐 아니라 자산측면의 분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의 5분위배율과 자산의 소득 계층별 점유율을 고려한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파악하여 소득분배와 자산분배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재분배율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분배지수간의 차이를 비율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기회가 열려있어 소득계층 상승이동이 순조로운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세부영역은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으로 정하고 주요지표로서는 특정 소득계층 가구가 전기에 비하여 다음 기에 다른 소득계층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에 따라 계층간 이동을 소득이동성으로 정의하면 한편으로 상향이동성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향이동성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정하고 시간에 따라 상향이동하는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는 빈곤탈출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조지표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을 측정하여 소득계층의 세대간 고착화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의 둔화 추이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학계 및 정책당국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와 빈곤의 대물림 정도를 보여주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

리고 구성원간 근본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기적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장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활용할 만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20] 경제의 지속가능성

세부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 5분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빈곤률 (단기, 장기) ◦ 고령가구 빈곤률 ◦ 근로 빈곤층의 비율 ◦ 중산층 비율 ◦ 자산 5분위배율 ◦ 자산의 소득계층별 점유율 ◦ 소득과 자산 결합분포 ◦ 소득재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 5분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이동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탈출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탈출률 ◦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제4장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제1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개선방안

1.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

소득·소비·자산 영역 지표는 대표성이 있는 정량지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당면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는 OECD ICW(2013a)의 프레임워크와 ‘2001 캔버라그룹 핸드북’과 같은 국제기구 권고기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들은 주로 통계 작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표측정을 둘러싼 이슈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현재 및 미래 소비

1) 소득 :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의 결합, 지역업자의 가구소득 측정

미시적 측면에 있어서 자료의 정확성은 전수조사를 통한 소득과악이 이상적이거나,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소득의 과악은 표본조사에 의존하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득 측정에 있어 대표성은 특히 고소득층의 무응답이 문제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구단위 조사통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예를 들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행정자료(우리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소득의 파악은 조사통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때와는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첫째,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불일치문제를 들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구소득과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된 가구소득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값을 해당 가구의 소득으로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일치 발생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큰 값을 참값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응답자의 과소보고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나, 가구구성의 변화, 소득산정 기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향편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표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층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에 대한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가구소득의 파악은 시장소득 외에도 조세부담률 및 가처분소득의 파악을 위해서도 시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표본조사에 기초한 미시자료와 국민계정상의 가계처분가능총소득 거시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는데 국민계정에서 파악되는 거시자료 상의 가구소득(민간소득)은 비영리기관의 소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괴리가 발생한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시자료에서 고소득층의 무응답으로 인한 누락이 역시 또 다른 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국민계정상의 가계처분가능총소득의 경우 가구 단위의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미시자료에서는 가구의 조세부담 규모가 과소보고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행정자료 및 국민계정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중치 조정을 통해 소득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²⁴⁾ 또한 행정자료와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우리나라

24) Bricker et al.(2014),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10 to 2013: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September 2014, Vol. 100, No. 4.

25) Bricker et al.(2016), "Measuring Income and Wealth at the Top Us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6 (1): 261-331.

라보다 먼저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자료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소득을 파악할 뿐이므로 결혼·분가·동거 등과 같은 가구형성(household formation)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가구단위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구형성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이 가구소득 측정을 위한 행정자료 결합의 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하더라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소득항목들이 존재한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적이전소득 측정 문제는 가구조사단위가 학업 또는 직장으로 인한 외지 거주 가구를 포함하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공적 연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는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이전소득은 현실적으로 가구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사적 이전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²⁶⁾

가구 단위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우선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에 측정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로 전입된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측정문제는 소비단위로서의 가구와 생산단위로서의 사업체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매출과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하던 ‘가구전입소득’은 일종의 ‘자가배당’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순수익(당기순이익)

26) 이 외에도 가구의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 주관적 웰빙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다루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에서 기업 내에 유보한 유보이익을 제외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주주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전입소득의 크기, 즉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가 자영업자 가구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게 되므로 통계적 신뢰성 확보에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현황, 즉 사업체의 총수입과 비용, 그리고 자산의 변동을 파악함으로써 일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적자가 발생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 가구로 전입된다. 가계동향조사의 방식인 응답자의 가구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소득을 측정하면 과소보고의 우려가 있다. 소득의 규모가 작을수록 조세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방식을 이용하면 음(-)의 소득이 보고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일정 부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비 : 자료의 정확성, 조사품목수 과소문제, 내구재, 비탄력적 지출

소비 측면에서도 조사된 소비·비소비 지출액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의 경우 한 해 동안의 소비 및 비소비 지출을 설문조사 대상자의 회고에 의존하여 조사하므로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금복에서는 소비지출에 대한 세부 조사항목이 8개에 불과하여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측면에서 조사품목수가 너무 적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금복의 경우 회고식 조사로 인해 조사품목수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며, 연1회밖에 조사하지 않는 현실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한 소비지출액의 신뢰성 확보도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또한 연1회 조사는 시의성도 낮다는 문제가 있다.

COICOP 12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지출목적별 지출항목을 두고 가계부작성을 통한 상세한 가구지출정보를 제공하던 가계동향조사가 2016

년말 폐지되고 2017년부터 가구지출조사로 전환되었다. 매달 약9천 가구씩 3년간의 연동표본으로 조사되던 가계동향조사와는 달리, 가구지출조사는 매달 1천 가구씩 표본을 바꿔서 조사한다. 예컨대, 소득항목과 자동차와 같이 지출빈도가 낮은 항목 등은 과거 1년치에 대하여 방문 설문조사하고, 세세한 식료품들은 1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처럼 대분류 이하의 세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가계지출조사에서만 조사되고 있는데 각 월별로 다른 가구표본으로 조사된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가금복의 조사품목수 과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품목의 추가 등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고적 방법에 의존하는 현 가금복의 소비지출 측정을 가계부에 근거한 방식으로 변경해 볼 수 있다. 다만 가계부를 통한 소비지출규모 파악에 있어서 높은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금복의 표본(2만 가구)과 가계동향의 표본(약 9천가구)을 일치시킴으로써 응답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복수의 지니계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에 근거하여 자료의 정확성이 매우 높은 과거의 ‘가계동향조사’를 재개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조사통계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소비지출 측면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내구재’에 대한 처리라 할 수 있다.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그 성격상 지출빈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구입에 대한 지출은 소비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산의 구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내구재의 구입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구재의 효용제공기간 동안 소비에 기여하고 이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향상시킨다. 이 때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소비와 지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소비와 지출을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효용제공기간동안 소비되는 것으로 처리할

27)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경제의 지속가능성에서 상술한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OECD ICW(2013a)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내구재는 자산의 구입으로 처리하고 효용제공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소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OECD ICW(2013a)에서는 1년 이상의 효용제공기간을 갖는 모든 재화에 대해 내구재로 간주하고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통계작성의 실무상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는 대부분 1년 이상의 효용기간을 갖는데 이를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출항목, 지출금액, 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구재 방식의 통계 작성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²⁸⁾

주거·의료·통신·교육 등과 같이 비탄력적인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가금복이나 가구지출조사 모두에서 대분류 수준에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 지출의 부담 여부 혹은 가구의 비율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수요에 따라 지표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1) 자산 : 행정자료와의 결합, 연금의 처리

가구의 경제적 웰빙과 직접 연관되는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결합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계동향에서는 유량변수인 소득·지출은 파악이 되지만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변동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산·부채의 규모를 알 수 없다. 한편 가금복에서는 자산·부채의 규모 파악이 가능한 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득 및 지출자료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처럼 가계동향 또는 가금복 모두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28) 과거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고려가 없이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가구의 ‘소비’를 측정하기 보다는 ‘지출’을 측정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가 폐지되고 가구지출조사로 대체된 현재에도 소비항목 중 내구재에 대한 처리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행정자료와 가금복과의 결합을 통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에 관한 행정자료와는 달리 자산에 대한 행정자료와의 결합만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자산의 경우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실물자산은 국세청의 재산세 납부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부채는 사금융을 제외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대부분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 등에 보관된 개인의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로 정보접근에 한계가 존재한다. 금융자산은 거의 대부분 민간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예탁되어 있어 거의 파악이 불가하다. 자산에 대한 행정자료와의 결합 역시 우리보다 먼저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가계동향 또는 가금복 모두에서 연금은 유량(flow)만이 파악되고 있을 뿐 저량(stock) 측면에서는 조사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연금기여총액 또는 누적납입액은 파악되지 않는다. OECD ICW(2013a)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기준도 연금은 자산으로 파악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에 관한 정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미래에 수취할 금액의 현재가치로 파악하거나, 미래에 받을 돈과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받을 돈의 현재가치로 파악하는 경우는 현재가치할인과정에 사용된 할인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위험 :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위험을 파악함에 있어 특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식별은 개인별 특성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

개인별 항목에서 근로능력 상실의 원인 중 ‘질병 또는 상해’ 여부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가계지출조사)나 가금복 모두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상태 불안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종사상지위’에 대한 세부구분 중에서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세부구분항목 자체가 없으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분항목은 있으나 영세자영업에 대해서는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 기회의 상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여부 항목은 조사는 되나 공표되고 있지는 않다. 도시/비도시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여부 변수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구별 항목으로서, ‘가구 구성’ 형태에 관한 변수에서 ‘돌봄대상가구원’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 가구별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변화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⁹⁾

다. 경제의 지속가능성

1) 소득분배 : 다수의 지니계수 문제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소득분배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 측정에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소득 측정의 정확성 이슈뿐만 아니라, 소득을 조사하는 여러 통계자료들 간 표본의 차이로 인해서 지니계수 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소득통계는 가계동향과 가금복 등 두 개의 조사에서 각각 지니계수를 얻을 수 있는데 대상표본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³⁰⁾ 여기서 다수의 지니계수 문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여러 개의 가구단위 소득통계 중 ‘지니계수용 소득통계’를 통계청이 지정함으로써

29) 과거에 주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또는 사각지대의 사례로는, 최근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문제를 들 수 있다.

30) 예를 들어 2012년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계동향의 지니계수는 0.307인 반면, 가금복의 지니계수는 0.352로 조사되었다. 지니계수의 연간 변화분의 크기가 통상 0.01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차이인 0.45는 상당한 차이로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가계동향과 가금복 통계의 표본적 특성과 측정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권위를 부여하고 혼동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식소득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CPS ASEC : Annual Social and Economics Supplements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이며, 이외에도 여러 개의 가구단위 소득통계가 존재한다.³¹⁾ 이들 통계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작성·활용되고 있으며, 다만 지니계수의 작성은 CPS ASEC에 의해 산출된 지니계수만을 활용한다. 이처럼 통계당국이 조사목적에 따라 다수의 소득통계를 조사하고 공식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중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계를 이용자가 선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통계청이 지정하면 혼동이 예방될 것이다.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은 가구단위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조사하는 다목적 통계였으며, 가구지출을 가계부 방식에 의한 36개월 연속조사하는 방식 때문에 소득의 원천, 소득과 소비의 계절성 등을 정확히 포착하여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에 필요한 적절하고 유용한 소득정보를 제공해왔다. 다만, 응답부담이 높아 고소득층의 응답거절비율이 매우 높은 통계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가금복은 연1회 회고식으로 조사되는 통계로서 응답부담이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우월하나 회고식 방식에 따른 측정의 부정확성이나 소득원천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불평등 지수 산출에는 가금복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세부정보는 가계동향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두 통계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

소득계층의 이동성은 취업·빈곤탈출 등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러

31) 미국 가구단위 소득통계로는 공식소득통계인 CPS ASEC(Annual Social and Economics Supplements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외에도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Census 2000 long form 및 SAIPE(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s program)의 4종이 더 존재한다.

한 소득이동성 파악을 위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한 패널자료(現 가금복)가 필수적이다. 현재 가금복의 패널표본추출방식은 2015년부터 기존의 고정패널표본에서 5년 단위의 연동표본패널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노동패널과 같은 다른 고정패널표본통계에 비해 비교적 단기인 패널조사라 할 수 있으며, 장기 소득이동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에 따른 조정시차가 존재하므로 5년 동안의 소득이동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정규직(또는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이동성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장기의 소득이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일정기간의 휴지기(休止期)를 두고 재표본화 함으로써 장기 소득이동성을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표본가구에 대해 5년간 조사하고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휴지기(5년~10년)를 둔 다음, 이후 다시 조사표본가구로 재표본화하는 것이다.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파악을 위한 별도의 표본조사 설계는 상당한 비용적 부담과 측정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고 차선의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세대간 소득계층이동성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국세청의 개인별 장기시계열 소득자료와 과거 통계청 표본조사상의 가구구성에 대한 개인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부모-자식 간의 패널 소득정보를 구성하는 시도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이슈

1) 조사단위의 문제 : 개인 vs 가구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개인단위로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단위로 측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의 행정자료는 개인단위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가구단위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 가구형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통계인 가계동향과 가금복의 경우 조사단위가 다르다. 학업 또는 직장을 이유로 외지에서 생활하는 비동거가구원에 대해 가계동향은 별개의 가구로 취급하지만, 가금복은 가족이 생활하는 가구와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정의에 대해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가구 외에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과 ‘센서스 가족(census family)’라는 개념이 존재한다.³²⁾ 이러한 다양한 개념의 조사단위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가구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와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다양한 개념의 조사단위별로 지표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조사방식에 있어 응답자의 선정방식에 의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통계는 가구원 중 1인이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비동거가구원의 소득·지출 및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과소보고의 원인이 된다.

어떠한 개념의 조사단위를 적용하든 관계없이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가구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만 있다면 다양한 개념의 조사단위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패널조사인 가금복에서도 추적조사 방식으로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소득·지출 정보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표 가구원이 아닌 모든 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가계동향에서는 학업 또는 직장으로 인하여 외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이와는 달리, 가금복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 때, 외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독립’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에 외지 거주 가구원이고 어떠한 경우에 독립적인 별도 가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통계 영역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연구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³³⁾에서는 사회통계에서의

32) 센서스가족은 ‘혈연관계+부양의무’가 있는 가구원 간의 동거가구를 말하며, 경제적 가족은 ‘혈연관계’에 있으나 부양의무가 없는 가구원 간의 동거가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이 ‘동거+공동예산’의 조건만으로 족하다.

33) 김혜영외(2015),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조사단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즉,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서 표본의 선정(sampling) 등은 종래와 같이 표본의 대표성을 갖도록 확률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하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가구 특성항목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가구(household)란 하나의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단위로서 관찰단위의 성격을 단순하게 정의하였다. 반면, 가족은 그 구조, 기능, 그리고 발달 및 변화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가족의 구조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며, 둘째, 가족의 기능은 공동거주, 성적 규제, 출산과 사회화(양육), 경제적 협력과 상호부양,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에 있다고 한다. 특히, 시대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여 생산단위보다는 소비단위로 변화되었으며, 성적 통제기능보다는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가족의 발달 및 변화는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으며, 예를 들어 혼인, 출산, 자녀의 결혼, 배우자 사망, 보인 사망 등 생애사건에 의해 단계화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가구 및 가족에 대한 정의로부터, 통계적 표준집단을 설정하고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을 통계적 취약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취약집단에 대한 통계적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⁴⁾

2) 횡단면 대표성 확보 방안과 가중치

현재 가구단위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부터 연동표본패널(rotation panel survey) 방식으로 표본추출방식이 변경되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고정표본패널(fixed panel survey) 방식과는 달리 패널교체를 통해 모집단의 새로운 개체 반영이 가능하고, 고정패널조사에 비해 패널손실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매년 새로이 추가되는 표본의 추출방식에 따라 횡단면 대

34)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구를 참고할 것을 권하며, 다만 이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의 취약집단에 관한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손창균, 2015).

조사통계에서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과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이 있는데, 전자는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응답자가 조사에는 참여하였으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패널조사의 경우, 단위 무응답은 무응답의 양이 방대하고 가중치분석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므로 무응답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각 조사시점(wave)별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항목 무응답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imputation)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송주원, 2015).

현재 가금복은 원표본가구 추출 당시인 2011년 가구 구성비에 따라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가구구성의 횡단면적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패널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의 가중치는 패널표본추출방식(고정패널표본/연동패널표본) 및 응답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고정표본패널인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원패널가중치는 종단면가중치, 횡단면 가구가중치, 횡단면 가구원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패널마모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표본이 추가된 2009년부터는 통합표본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표본에 대한 종단면가구원가중치, 횡단면가구가중치, 횡단면가구원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금복과 같이 연동표본패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패널조사로는 미국의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와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를 들 수 있다. SIPP는 1차 횡단가중치, 2차 이후의 횡단가중치와 더불어 전체표본에 대한 종단가중치, 해당년도에 대한 종단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SLID는 원표본가구에 대한 횡단면가중치인 ‘초기가중치’와 가구그룹별로 해당기간 전체에 대해 응답한 가구(balanced panel)들만을 대상으로 (또는 무응답대체를 수행하여) 켈리브레이션을 통해 조정한 종단면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동패널표본이므로 통합종단가중치, 통합횡단가구가중치, 통합개인횡단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연동패널표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패널조사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표본추가를 통해 횡단면 대표성을 확보한다. 다만 단위무응답에

대해서는 대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중치 보정을 통해 조정한다. 횡단면 가중치는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구분하여 각각 제공한다. 또한 종단면가중치도 별도로 제공하는데 표본연동에 따라 통합표본에 대한 중단 및 횡단가중치를 제공한다.

가금복의 경우는 단 1개의 가중치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중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산식을 통해 추정컨대 제공되는 가중치는 횡단면가중치로 판단된다. 패널조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종단면가중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굳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패널조사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면 가중치 외에 종단면 가중치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있어서 주관적 지표는 다른 영역에서 포함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시·거시 불일치의 문제는 앞서 기술한 가구소득에 대한 각 통계 작성방법 상의 차이 외에도 총계편의(aggregation bias) 등 통계 또는 지표마다 불일치의 원인이 다르므로, 불일치 사례를 파악한 후 각 사례별로 불일치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2~4인 가구)와는 다른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점 외에도 가구형성원인(학업·직장·이혼 등)에 따라 지표를 달리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계동향의 조사재개 여부와 관련한 고려사항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에 대한 조사자료로서 현재 중단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갖고 있지 않는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가계동향조사’가 가졌던 이러한 장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다른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가계동향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소득 및

소비를 이용한 분석에 작지 않은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를 재개하거나 혹은 동일한 취지로 새로운 가구단위 소득·소비 조사가 신설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소득원천과 함께 소비지출항목이 조사, 제공되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하여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소득의 구성항목과 가구 소비의 구성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소득 9개, 소비 11개(그것도 소비는 복지데이터셋에서만 제공) 항목이 제공되고 있으나 ‘가계동향’은 소득 30개, 소비 1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제공되는 정보가 풍부하다. 국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할 때 소득 및 소비 구성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계층별 소비실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득 항목과 소비항목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 소득항목과 소비항목의 교차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다수의 소득항목과 한두 개의 소비항목이 제공되는 방식이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연간 단위의 회고식 조사로는 불가능하며 가계부 기장 방식의 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확대될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가 일 년 단위로 회고에 의해 답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응답의 신뢰성 또한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 항목이 증가할 경우 가계부 기장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한 조사는 다음에 논의할 분기별 자료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셋째, 분기단위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분기 단위의 자료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구의 소득 변화와 소비지출 변화에 계절성(seasonalit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기타 부정기 취업자의 비중이 높다. 또한 일부 소비지출의 경우(예를 들어, 광열비, 교육비)에도 계절성이 높다. 이러한 계절성은 현금이나 현물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가 재개되거나 그에 상응할만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요인들이 충족된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조사의 방법, 표본의 규모 및 구성, 조사 항목 등이 동일할 경우 제한적으로라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과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기자료를 생산한다면 가구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연간 자료를 생산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t 년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미시자료는 $t+2$ 년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분기별 조사자료는 시의성(timeliness)이 높으며, 조사시점부터 발표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아 가구 생활 실태의 최근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제2절 소득·소비·자산 영역 통계 실행계획

1.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가. 현재 및 미래 소비

1) 단기

현재 및 미래 소비 부문의 개선방안 중 단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소득의 정확성 제고,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 소득통계의 미시·거시 불일치에 대응과 함께 소비에 있어서 비탄력적 지출에 대한 신규지표 작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소득의 경우, 소득의 정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소득은 가구단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결합은 가구특성 및 가구형성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소득의 구성항목 중 사적이전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통계가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사적이전소득은 조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공자 및 제공목적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함께 조사되어야 유의미한 통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통계로만 파악이 가능하므로 표본가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소득통계의 미시·거시 자료 간의 괴리가 발행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무응답으로 누락된 고소득층의 소득에 있다. 현재는 가금복의 표본에 행정자료를 결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소득자료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응답으로 누락된 고소득층이 제외되어 있어 미시 와 거시자료간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정자료가 전수조사에 가깝다고 볼 때 이를 근거로 미시자료 표본을 조정하여 거시자료 간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간 소득통계에 대한 정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

료를 추가하여 오용을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비탄력적 지출에 대한 신규지표의 작성은 정책수립에 있어 해당 지표를 필요로 하는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

현재 및 미래 소비 부문의 개선방안 중 장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비지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통계 확보와 일부 내구재에 대한 자산화 처리를 들 수 있다.

현재 소비의 경우, 소비지출 조사품목수를 확대하고 조사된 소비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소득항목과 소비항목이 동시에 조사되어 교차분석이 가능하고, ② 다양한 소득 및 소비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바, 회고식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계부 기장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③ 소득 및 소비지출의 계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단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조사품목수, 신뢰성, 시의성이 확보되는 가구단위 소비통계는 통계청의 실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과 방식을 고려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계부를 이용하는 조사방식은 통계의 품질이 높은 반면 조사부담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단위 소비통계에 대한 주요 수요처들을 중심으로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사항목을 선별하고 실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조사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가계동향조사’가 높은 조사부담으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자산화하여 처리하는 OECD ICW(2013a)의 권고안은 우리의 현실과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서 자산화 처리할 내구재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항목별 자산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계 공표시에 비자산화 소비지출과 자산화 소비지출을 함께 공표하여 통계기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1) 단기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부문의 개선방안 중 단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연금에 대한 자산화 처리, 다양한 계층별(취약 계층 또는 정책적 관심집단) 지표의 작성, 가계수지에 대한 세부지표 작성을 들 수 있다.

연금자산의 경우 공적연금자산부터 우선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납입총액과 수급자격 취득시까지의 잔여납입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민간연금자산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추정을 통해 보완하거나 입법을 통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위험은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계층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본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연구 중 하나인 가족·가구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구분된 주요 가구특성과 같이 주요 관심계층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적 관심집단에 대해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계층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위험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볼 지표로는 특히 가계수지 적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표(예를 들어, 가계수지 적자규모, 적자 누적기간 및 누적금액)가 필요할 것이며, 이 역시 관련 소관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장기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부문의 개선방안 중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신뢰성 제고, 상속·증여 등과 같은 소득이동성 및 ‘부의 대물림’ 파악, 미래에 대한 가계의 예상 반영을 들 수 있다.

자산항목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은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작업의 수행은 소득자료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가구형성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정보를 입수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고, 가구보유 금융자산 규모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추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속 및 증여는 소득이동성 및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나 파악이 매우 어렵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역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추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현재의 가구단위 통계는 가구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연금소득 및 소득이행행렬의 작성과 같은 방안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경제의 지속가능성

1) 단기

경제의 지속가능성 부문의 개선방안 중 단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통계자료로부터 도출된 지니계수의 차이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불균등을 파악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는 먼저 가구별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한편, 다양한 소득 통계별로 서로 다른 지니계수가 도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통

35) 가구소득에 대한 행정자료의 결합은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결과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항목에 대한 행정자료의 결합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합을 통한 조사결과의 안정성은 향후 몇 년 더 실시해봐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의 해석상의 문제이므로, 각 통계별 차이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강조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

경제의 지속가능성 부문의 개선방안 중 장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 파악을 들 수 있다.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폐지된 ‘가계동향조사’는 3년, 연동패널표본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을 응답기간으로 한다. 3~5년이라는 기간은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을 파악하기에 다소 짧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보다 장기간의 소득이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3~5년간 응답 후 이탈한 표본가구를 재표본화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응답한 후 5년간 휴지기를 갖고 다시 5년간 응답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된다면 동일한 가구에 대해 비교적 장기간의 소득을 추적조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동성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의 대표성 및 실무상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 파악을 위한 별도의 표본조사 설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세청의 개인별 장기시계열 소득자료와 과거 통계청 표본조사상의 가구구성에 대한 개인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부모-자식 간의 패널 소득정보를 구성하는 시도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이슈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가. 단기

1) 비동거가구원 및 대표가구원의 응답문제

현재 가구단위 조사통계에서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족’단위 조사의 경우에도 ‘비동거가구원’은 직접조사, 그리고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표본가구의 대표가구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조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사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1인 가구 관련 지표의 개발

1인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와는 이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와는 다른 가구형성원인(예를 들어, 학업 또는 직장 외지 거주)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2인 이상가구와는 다른 소비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인 가구에 대한 지표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역시 관련 부처들을 통한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어떠한 지표를 조사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장기

1) 자영업자의 문제

비근로자(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가구의 현금흐름과 사업체의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가구로의 전입소득 외에도 사업체 전체의 현금흐름을 함께 조사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가중치

현행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동 표본패널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가중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표본패널방식을 사용하는 통계는 없으므로 미국 또는 캐나다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단면·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가구원가중치와 가구가중치를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결과 발표 이후의 수정사항 반영

통계조사 결과 공표시 확정치 발표를 서두르지 말고 여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잠정치로 발표한 후 향후 시간을 두고 수정치를 발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통계조사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오류의 발견, 추가 조사표 입수 등의 사유 발생시 통계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1] 부문별 지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현재 및 미래 소비	현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정확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를 통한 소득파악이 이상적이거나, 조사상 매우 어려움 - 표본조사에 의존하므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됨 (고소득층의 무응답) ○ 사적이전소득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파악은 국제자료와의 결함을 통해 조사(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자료의 담당기관은 가구단위로 파악 요함 ○ 현재 사적이전소득은 파악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분화된 사적이전소득 파악을 고려할 필요 ex: 제공자, 제공목적 등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국세청)는 개인단위이므로 가구형성정보를 통해 가구단위 소득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거시 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처분소득 및 조세부담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처분소득(미시)과 가계처분가능소득(거시) 간의 불일치 문제 - 조세부담률의 불일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자료 표본 보완 및 정의상 차이파악을 통해 불일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자료의 고소득층 소득 누락문제 해소 - 비영리기관 민간지출규모 파악할 필요 - 국제청 자료와의 결함을 통해 조세부담률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경상소득세, 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관련세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 거시 불일치는 미시자료의 표본 대표성의 문제와 정의상 차이의 문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지출 조사품목수 적음 - 가금부에서는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항목이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지출 조사품목 수 확대 및 신뢰성 확보 - 회고식 조사에서는 조사품목수 확대에 함께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품목수, 시의성, 신뢰성 제고방안으로서 가계동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협	미래 소비 및 지속가능성 (자산)	<p>에 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동향은 2017년부터 연간자료로 전환되어 시의성 낮음 ○ 소비지출에 대한 신뢰성 낮음 - 가금부는 회고(retrospect)에 의존하여 조사되므로 과소보고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밖에 조사하지 않는 현실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한 소비지출액의 신뢰성 확보도 한계 - 또한 연1회 조사는 여전히 시의성 낮음 - 장기적으로 과거의 가계동향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됨 	<p>향조사가 가졌던 특징을 포함하는 조사를 마련할 필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탄력적(필수) 지출 지표 - 현재 통계는 생산되고 있으나 지표로서 발표하지 않음 <p>○ 경제적 후생 파악을 위해서는 지출보다는 소비를 파악해야 하나, 현재는 지출을 파악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탄력적 지출에 대한 신규지표 작성 - 의료·교육·주거·통신 등과 같이 가구의 비탄력적 지출항목에 대한 신규지표를 개발(ex: 영겔지수) ○ 일부 내구재에 대해 자산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p>주요지표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ck·flow의 결합분포 파악 - 가계동향+국세청 ≡ 자산파악불가 - 가금부+국세청 ≡ 소득지출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와의 결합 확대 - 실물자산 : 국세청 자료와 결합 - 금융자산 : 은행·증권에탁원 등 행정자료의 결합 - 부채 : 신용정보원 자료와 결합 	<p>행정자료(국세청)는 개인 단위로 가구행정정보를 통해 가구단위 자산을 파악하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p>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의 저장(stock)파악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금부·가계동향 모두 연금에 대해 유량(flow)만을 파악하고 있음 ○ 상속/증여 등은 소득이동성 및 자산의 대물림의 중요 이슈이나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미래에 대한 예상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및 민간연금 자료의 결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에 대한 저장(stock)정보 결합 필요 * 납입총액, 수급자격 취득시까지의 잔여납입기간, ○ 행정자료의 결합 ○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단기	공적연금자료를 우선적으로 결합하며, 향후 민간연금에 대한 자료 결합도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약집단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계층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탄력적인 지표 산출 ○ 주요 패널자료와의 일치 점검 필요 - 가금부·복지패널 등 다른 패널자료와 일치성 비교 	단기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의 주요 기구특성을 반영
	경제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의 누적적자 등 개인의 파산위험을 측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의 가계 소득지출흐름의 적자 및 누적기간, 누계금액 등을 파악 	단기	가계수지 적자에 대한 세부 조사 필요
	경제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포 측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별 지니계수의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 자료와 결합하여 지니계수 작성 	단기	단기적으로는 자료별 해석 추가 장기적으로는 행정자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동향과 가금부의 지니계수가 다른 이유는 sampling 차이 보다는 측정오차에 의한 영향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별 지니계수의 차이에 대한 해석 추가 ○ 통계별 차이에 대한 해석 추가 	단기	료와의 결합 측정
	소득계층의 이동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동성 파악을 위한 패널자료 - 현행 가금부는 패널이기는 하나 5년만 조사되어 장기적인 소득이동성 파악 불가 ○ 세대간 소득계층이동성 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표본가구의 재조사 - 가금부에 대해 5개년을 응답한 가구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의 휴지기 이후 재조사토록 하여 소득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관리 ○ 세대간 소득계층이동성 통계 추정 - 기존표본과 행정자료의 결합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 연구 필요 	장기	재표본화와 횡단면 대표성에 관한 추가 연구 수행 필요 세대간 소득계층이동성 추정 연구수행 필요
기타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vs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거가구원에 대해 추적조사 - 장기적으로는 대표가구원이 아닌 모든 가구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stock에 관한 항목의 경우 필수 ○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정의 필요 - 통계조사시에 Flow chart 방식으로 조사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 	단기	비독립, 비동거 가구원(직장, 학업)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 경제적 비독립에 대한 정의 필요
	통계작성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주체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자영업자의 소득, 	장기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체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p>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면 대표성 - 연동패널조사의 횡단면 대표성 확보 및 활용 증진 방안 ○ 종단면 가중치 - 패널조사의 목적상 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는 않는 점은 문제임 	<p>소비, 자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추가표본의 적절한 추출 - 연동패널표본이므로 매년 추가되는 표본을 통해 횡단면 대표성 확보 	장기	<p>현행에 대한 조사 필요</p> <p>추가표본추출시 횡단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성이 강한 1인가구 관련 지표 부족 - 1인가구는 2~4인 가구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통상적인 지표와 함께 분석할 경우 왜곡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면 가중치 제공 필요 - 횡단면 가중치(가구 및 가구원)와 더불어 종단면 가중치 제공필요 - 통합횡단면가중치와 종단면가중치도 제공해야 할 것임 	장기	<p>가중치 제공을 위한 연구를 통해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결과발표 이후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유지표 작성 필요 - 1인 가구의 형성 원인 및 소득·소비·자산 등에 대한 1인 가구만의 지표를 별도로 작성·공표할 필요 있음 ○ 확정지 발표를 서두르지 말고, 잠정치로 수정 발표함으로써 결과 발표일 이후 임수되는 응답을 반영토록 수정 	단기	<p>1인가구를 위한 지표 개발 후 작성</p>
				단기	-

제5장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개선방안

제절 주요지표 현황³⁶⁾

우리나라 통계의 주요 지표로는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를 들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wellbeing)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집약된 통계이며,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통계이다. 이하에서는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 중에서 경제적 웰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득·소비·자산에 관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국가주요지표

가. 국가주요지표의 개요

‘국가주요지표’는 2013년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2014년 최초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와 국민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체계 개편 연구를 통하여 2017년부터 개편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부문은 ‘성장과 안정’,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그리고 ‘교육’ 등 네 개의 영역을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경제적 웰빙과 관련된 영역으로는 ‘성장과 안정’영역과 ‘소득과 소비’영역이다.

나. ‘성장과 안정’ 영역

1) 영역의 구성

36)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의 현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index.go.kr) 및 이재열(2016)의 연구에 해당부분을 발췌·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이재열(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존 2014년도 체계에는 ‘국민계정’과 ‘산업과 금융’이 경제 부문 내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의 명칭과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 웰빙,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2016년 개편에서는 ‘국민계정’ 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을 통합하여 새로이 ‘성장과 안정’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웰빙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더 근접한 명칭과 구성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기존 2014년도 체계의 ‘국민계정’ 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에서 거시경제적 측면의 성장과 안정을 반영하는 주요지표들을 선별해 내고 여기에 새로운 주요지표들을 추가한 후 적절히 재배치하여 ‘성장과 안정’ 영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기존 주요지표 중 신설 영역과의 관련성이 낮은 지표들은 제외되었다. ‘성장과 안정’ 영역은 ‘성장’, ‘생산성’, ‘성장가능성’, ‘글로벌화’ 등 성장 측면의 4개 하위영역과 ‘건전성’, ‘소득불평등’ 등 안정 측면의 2개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하위영역별 주요·보조지표

첫 번째 하위영역으로는 ‘국내총생산’ 하위영역을 대체하는 ‘성장’ 하위영역이 신설되었다. 주요지표로는 기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삭제되고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었으며, ‘국내총생산’은 ‘경제성장률’의 보조지표로 변경되었다. 한편, 웰빙은 실질 개념과 더 관련성이 높으므로 주요지표 중 명목지표는 모두 제외하고 실질지표만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생산성’은 기존 ‘산업과 금융’ 영역의 하위영역으로서 ‘성장’ 영역에 이어서 현재 국민들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영역의 주요지표는 노동 투입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생산물이 창출되는가를 나타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보조지표는 기존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기업영업이익률’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하위영역으로는 ‘성장가능성’을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미래 성장과 발전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소들이

배치되었다. 이 영역은 기존 ‘국민계정’ 영역의 ‘투자’ 하위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의 ‘기술혁신’ 하위영역을 통합된 것이다. 주요지표로는 기존의 ‘총고정투자자율’과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유지함과 아울러 경제의 동태적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창업률’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에는 기존 주요지표였던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가 보조지표로 포함되었고, ‘창업률’의 보조지표로는 ‘벤처기업수’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하위영역으로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글로벌화’가 독립적인 하위영역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 기존 ‘국민계정’ 영역의 ‘GDP 대비 수출입비율’과 ‘산업과 금융’ 영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주요지표로 구성되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국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건전성’이라는 하위영역이 추가되었다. 이 영역의 주요지표로는 정부 및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존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있으며,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도 포함되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는 ‘국민부담률’,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정부지출구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하위영역은 소득계층 간 차이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영역은 원래 ‘소득과 소비’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개편에서 ‘성장과 안정’ 영역으로 이동되었다. ‘소득불평등’은 ‘건전성’과 더불어 경제의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하위영역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지표는 ‘지니계수’, 보조지표는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빈곤율’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4년 지표체계에서 국민웰빙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 내지 향상의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은 2016년 체계에서 삭제되었다.

[표 22] '성장'과 '안정' 영역 지표체계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삶의 질 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실질 국내총생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 (시간당)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성장가능성	• 총고정투자율	• 총고정투자증가율	• OECD 주요국의 총고정투자율	
	• 창업률	• 벤처기업수	• OECD 주요국의 창업률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글로벌화	• GNI 대비 수출입비율	• 상대국별 수출비율 • 상대국별 수입비율	• 주요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	•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건전성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 국민부담률 •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 정부지출구성	• 주요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	•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 경상수지와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 • GDP 대비 외환보유액비율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 주요국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빈곤율	•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 지니계수 • 상대적빈곤율

* 출처: 국가주요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에서 인용.

주: '삶의 질' 지표는 각 지표에 해당하는 국가주요지표 항목에 본 연구에서 병기하였음

다. '소득과 소비' 영역

'소득과 소비' 영역은 2014년 체계에서는 '소득', '자산', '소득불평등', '소비', '물가', '저축'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가 2016년 체계에서는 '소득', '자산', '소비', '물가'의 4개 하위영역 구성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은 거시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성장과 안정’ 영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저축’ 하위영역은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소득’ 하위영역에서 개인소득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새로이 편입되었다.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거래와 관련된 구매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요지표인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보조지표로 구성되었다. ‘자산’ 하위영역에서는 ‘가구순자산’ 주요지표의 보조지표로 기존의 ‘가구자산’, ‘가구부채’, ‘가구부채변화인식’은 모두 삭제되고 그 대신 자산 축적과 관련성이 높은 ‘가계저축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소비’ 하위영역에서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의 보조지표인 ‘소비지출구성’은 지표의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평가되어 삭제되었다. ‘물가’ 하위영역에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농산물 가격이나 유류제품 가격 등과 같이 단기적 급락이 큰 재화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측면의 물가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이 보조지표로 추가되었다.

[표 23] ‘소득·소비·자산’ 영역 지표체계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삶의 질 지표
소득	• 국민총소득 (1인당)	•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 소득만족도	• OECD 주요국의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 OECD 주요국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	• 1인당 GNI • 균등화 중위소득 • 소득만족도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OECD 주요국의 연평균 가구소득증가율	
자산	• 가구순자산	• 가계저축률	• OECD 주요국의 가구순자산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 가구평균 순자산
소비	• 민간소비지출액 (1인당)	•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비율 • 소비생활만족도	• OECD 주요국의 1인당 소비지출수준	• 균등화 중위소비 • 소비생활만족도
물가	• 소비자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근원인플레이션	• OECD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	

* 출처: 국가주요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에서 인용.

주: ‘삶의 질’ 지표는 각 지표에 해당하는 국가주요지표 항목에 본 연구에서 병기하였음

2. 삶의 질 지표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측정하여 제시하며,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삶의 질’ 지표는 2011년 지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경제적 웰빙과 관련이 있는 지표들은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포함된 8개 세부지표이다. 8개의 지표는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소득만족도’, 소비 항목에 해당하는 ‘균등화 중위소비’, ‘소비생활만족도’, 자산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평균 순자산’, 그리고 소득불평등 항목에 해당하는 ‘지니계수’와 ‘상대적빈곤율’이다.

제2절 평가 및 개선안

1. 국가주요지표 평가 및 개선안

2016년에 개편된 국가주요지표 체계에서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소비’ 영역은 다시 소득, 자산, 소비, 물가의 4개 하부영역으로 나뉘어져 1인당 소득 및 가구평균소득, 순자산, 1인당 소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주요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체계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 소비, 자산의 통계 프레임워크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들 간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물가와 같이 개별 가구들 간에 특별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과 가구간 분배에 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경우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평균적인 수준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이라는 하부영역에서 분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소득, 소비, 자산의 통계 프레임워크 방안을 활용하여 기존의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가구 미시자료의 활용

국가주요지표의 ‘소득과 소비’ 영역에 포함된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들은 대부분 1인당 혹은 가구당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국민계정을 이용한 평균치이며, 가구소득은 미시자료(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평균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가구 미시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단순한 평균치 외에 미시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배적 측면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이라는 하부영역에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적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소득에만 근거하고 있으므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소득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개별 가구의 소득은 일시적 충격에 의해 기간마다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소득이 일정하다면 이러한 일시적 변동은 개별 가구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은퇴한 고령층이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서서히 매각함으로써 소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비수준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분배관련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 5분위나 자산기준 5분위와 같이 특정한 하나의 변수에 의존한 구분은 개인들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득, 소비, 자산의 결합분포 혹은 교차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실현된 소득, 소비, 자산의 값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것 외에, 본 보고서의 앞에서 논의된 연령, 건강, 성별, 취업유무, 결혼가정, 부실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집단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소득, 소비, 자산을 조사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취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현행 국가주요지표 체계에서 소득, 소비, 자산의 평균적인 수준에 관한 논의는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분배에 관한 논의는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소비, 자산의 수준과 분배에 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영역을 재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 거시자료와 미시자료의 일관성 증대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미시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시자료와 미시자료 간의 괴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기초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시자료의 경우 소비지출에 대한 측정 부담 및 측정오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지출 관련 조사항목의 증가 및 표본의 확대, 가구 구성원 전체(비동거 가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을 통하여 미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미시자료에는 자가 거주자의 귀속 임대료를 조사하여 소득과 소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주요지표의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가구의 순자산은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계 저축률은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가계의 저축은 곧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과 저축의 지표가 서로 전혀 다른 자료들로부터 얻어진다면 자료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잔차항으로 주어지므로 소득과 소비에 존재하는 측정오차가 더욱 가중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특정 항목에 대하여 국민계정자료와 미시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자료를 국가주요지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미래에 대한 예상 및 위험/불확실성의 지표 추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의 가치도 포함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미래의 예상 수입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주요지표에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 소비, 자산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미래의 예상 수입을 배제할 경우 개인의 빈곤 정도나 은퇴 이후에 대한 대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미래의 예상 수입을 현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각 개인별 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예상 수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다. 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은 국민계정에 나타난 1인당 GDP 혹은 GNI의 시계열적 변동성보다 훨씬 크다. 개인의 소득에는 거시적 충격과 개별적(idiosyncratic) 충격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미시자료로부터 얻어진 가구소득의 이행행렬과 같은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미래 소득의 변동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미래 소득의 변동성은 소득의 위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지표이지만 소득계층간 이동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소득 위험에 관한 지표가 포함될 경우 지표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가주요지표 하위영역별 필요지표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현행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경우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가 ‘소득과 소비’ 영역과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 하부영역을 없애고 지니계수 등의 지표들을 ‘소득과 소비’ 영역으로 통합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 영역의 각 하부 영역별로 분배 관련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본 보고서의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소득과 소비’ 영역에 새로이 포함될 변수들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24> 참조).

가. 소득 영역

현행 국가주요지표의 ‘소득과 소비’ 영역에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구 소득의 경우 본원소득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가처분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자가거주 가구의 귀속임대료를 추정하여 소득과 소비에 동일하게 포함시키기로 한다.

또한 기존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소득 5분위별 평균 소득과 지니계수도 가져와서 포함시킨다.

나. 자산 영역

국가주요지표체계의 자산 하위영역에는 가구 순자산만 포함되어 있고 부채관련 지표가 빠져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순자산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부채가 커지면 가구의 채무부담과 부실위험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순자산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지표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자산(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가구 순자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저축률은 국민계정 외에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부터도 계산될 수 있으므로, 두 저축률을 모두 제시할지 아니면 어느 한 저축률을 제시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는 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적 고려에 의해서 파악될 필요가 있으므로, 순자산의 크기에 따라 5분위 집단들을 구분한 다음 각 분위별로 소득, 소비, 순자산의 평균 크기를 살펴본다.

다. 소비 영역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가거주 가구의 귀속임대료를 추정하여 소득과 소비에 동일하게 포함시킨다. 또한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지출의 크기에 따라 5분위 집단들을 구분한 다음 각 분위별로 소득, 소비, 순자산의 평균 크기를 살펴본다.

라. 추가 영역

미시자료에 조사되어 있는 가구별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취약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체계에는 소득 측면에서의 취약 집단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 빈곤율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소득과 연령 양측면에서의 취약집단을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 혹은 부채부담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계가

구 비율 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위험 혹은 소득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소득과 소비’ 영역에 새로이 포함될 수 있다. 빈곤 탈출률이나 소득 이행행렬은 미시패널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지표들로서, 단순히 횡단면적 분배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이행행렬은 소득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소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므로,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분위별 유산 및 상속액의 크기는 세대간 소득이동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포함될 수 있다. 고소득층에서 유산 및 상속이 크게 이루어질수록 자산의 세습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4] ‘소득·소비·자산’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	• 국민총소득 (1인당)	• 개인처분가능소득 (1인당) • 소득만족도	• 국민총소득 (1인당) • 개인처분가능소득 (1인당)
	• 가구소득 (귀속임대료 포함**)	• 가구소득원천구성 • 실질 및 명목 가처분 소득*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및 5분위 소득*	• 가구소득증가율 • 지니계수*
자산	• 가구순자산 (연금자산 포함**)	• 가계저축률(국민계정 및 가계동향조사*) • 자산 및 부채의 수준과 구성* • 순자산 기준 5분위 소득, 소비, 순자산 *	• 가구순자산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 가계저축률
소비	• 민간소비지출액 (1인당) • 가구소비 (귀속임대료 포함**)	• 민간소비지출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 기준 5분위 소득, 소비, 순자산*	• 소비지출수준 (1인당)
취약집단	• 상대적 빈곤율*	• 노인 빈곤율* • 한계가구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소득위험 / 소득이동성	• 빈곤 탈출률**	• 소득 5분위 이행행렬** • 소득 5분위별 유산 및 상속액**	
물가	• 소비자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근원인플레이션	•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한국 대비)

* 기존 체계에서 단순 위치변경 등의 수정

** 신규편입지표

3. 삶의 질 지표

여기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설정한 통계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삶의 질에 대한 주요지표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삶의 질 지표체계에서는 소수의 지표만으로 가구의 소득·소비·자산 측면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비교적 적은 수의 지표만을 수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삶의 질 지표는 앞서 제시된 통계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지표들 중 대표지표라고 평가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 큰 개선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삶의 질 지표는 다음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등 세 개의 지표, 소비와 관련하여 ‘가구소비’와 ‘소비생활 만족도’ 등 두 개의 지표, 자산과 관련하여 ‘가구평균 순자산’, 그리고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지니계수(불평등도)’와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 두 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질 지표체계를 보면 경제적 생활수준을 소수의 대표성 있는 지표로 적절히 측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관적 지표인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소득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지표는 가계동향 자료를 기초로 가처분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으로 계산되어 왔으며 삶의 질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가계동향조사 중단과 함께 소득 자료를 가금복에서 추출하게 되어 새로운 중위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차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법인과 정부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구측면의 삶의 질을 보다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통계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1인당 가계처분가능총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와 관련하여 ‘가구소비’지표는 균등화 중위소비로 계산되고 있으며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직접적인 지표 역할을 하는 적절하고 중요

한 지표라고 본다. 다만, 현재 소득통계로 자리 잡은 가금복의 경우 소비 지출비율이 과거 가계동향에서 파악된 소비지출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파악되고 있다. 이는 가금복의 소비지출이 회고에 의존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동거 구성원에 대한 지출이 정확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자산과 관련하여 ‘가구평균 순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가구 소득대비부채 비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지니계수’와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이 수록되고 있고 이 또한 대표지표로서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다.

[표 25] 삶의 질 지표 개선안 : 소득·소비·자산

영역	세부영역	삶의 질 지표(기준안)	삶의 질 지표(개선안)
현재 및 미래 소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가계처분가능총소득* •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 소득만족도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비 (균등화 중위소비) • 소비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비 (균등화 중위소비) • 소비생활만족도
가구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위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평균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평균 순자산 • 가구소득 대비 부채비율**
경제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 빈곤가구비율(상대적 빈곤율)

주: *개선, **신규

참고문헌

- 김혜영·진미정·김은지·이희길·심수진(2015),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 박정수·조무상·김선옥(2013), 분기 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 평가, (사)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손창균(2015), 여성가족패널의 패널유지방안 연구, 제1차 여성가족패널 포럼.
- 송주원(2015),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처리 방법 보완,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원(2016),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개발원.
- 이재열(2016), 2016년 국가주요지표 개편 연구 : 연구 방법과 내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Bricker, J., Dettling, L. J., Henriques, A., Hsu, J. W., Moore, K. B., Sabelhaus, J., Thompson, J., and Richard A.(2014),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10 to 2013: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September 2014, Vol. 100, No. 4.
- Bricker, J., Henriques, A. M., Krimmel, J. A., Sabelhaus, J. E.(2016), "Measuring Income and Wealth at the Top Us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6 (1): 261 - 331.
- Corak, Miles, Matthew J. Lindquist, and Bhashkar Mazumder(2014), "A Comparison of Upward and Downward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Canada,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Labour Economics 30: 185 - 200. doi:http://dx.doi.org/10.1016/j.labeco.2014.03.013.
- Eurostat(2013), Statistical matching of EU-SILC and the Household Budget Survey to compare poverty estimates using income, expenditures and material deprivation,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 Harper, G. and R. Price(2011),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impacts of policy and their effects on wellbeing - A paper by the Social Impact taskforce", Defra Evidence and Analysis Series, Paper 3, London.

ILO(1988),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Krueger, Alan B. 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12/04/remarks-president-economic-mobility>.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OECD·Eurostat(2011), 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Working Paper No. 53.

OECD(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Stiglitz, J. E., Sen, A. and J. P.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Canberra Group(2001),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The Canberra Group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UNECE(2011), The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Second Edition, ECE/CES/11, Geneva.

<부록 표>

[부록 표 1] 가구소득측정방법의 역사적 발전

연도	내용
1966	UN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 14차 총회 이 총회 이후로 UN 통계사무소(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에서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의 축적을 모두 포괄하는 분배통계시스템이 점차 개발되었다. 이는 국민계정체계(SNA)와 지금은 사장된 국민경제균형체계(Systems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 모두와 관련을 맺었다.
1972	UN통계위원회 - 17차 총회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의 축적을 모두 포괄하는 완벽한 최종 분배통계체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총회의 논의에 입각하여 수정과 단순화된 체계 수립을 요청하였다.
1974	UN통계위원회 - 18차 총회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의 축적을 모두 포괄하면서 단순화한 분배통계체계 초안이 몇 개의 유보 조항을 포함하여 채택되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보다 더 단순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77	UN통계위원회는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분배의 통계를 위한 잠정 가이드라인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s, United Nations, 1977)을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각국이 소득분배 통계를 수집 보급하고, 국제적 보고와 비교가능한 자료를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미시적 수준의 소득분배 통계와 거시적 수준의 국민계정표준을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은 1968년 SNA(eg. Norrlof, 1985)와 함께 동시에 개정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UN유럽경제이사회(UNECE)는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 수정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가구소득 통계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1968년 SNA가 가구부문 특히 소득 개념에 대한 개념적 사고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SNA 개정의 관련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1989년 UN) 그러나, 자원의 부족으로 1977년 잠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빨리 진전되지 못하였다.
1981	UN 통계사무소(UN, 1981년 및 1985년)는 소득분배 통계의 국내적 활용에 관한 조사 (Surveys of national practices of income distribution statistics)를 출간하였다.
1983	국가간 가구소득자료의 비교성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3년 국가간 수

연도	내용
	<p>준에서 룩셈부르크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LIS)가 발족되었다. 룩셈부르크의 인구, 빈곤, 사회경제적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 Poverty and Socio-Economic Policy Studies in Luxembourg)에 소재한 LIS는 여러 국가로부터 단위 레코드 자료 (unit record data)를 수집하여 이들을 공통 개념과 정의 체계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다.</p> <p>세계은행,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모두 1990년대에 국가간 비교자료를 출간했는데, 같은 국가라도 사용된 개념이나 자료소스에 따라 상대적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1994	<p>유럽통계청(Eurostat)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OECD와 합의하여 1977년 잠정가이드라인의 수정에 착수했다.</p> <p>그 주요 목표는 가구소득 통계와 관련하여 1977년 이후의 발전사항(비공식적 활동까지 포함)과 수정 SNA와 유럽회계체계(ESA)의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경제사회적 정책의 분석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들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수정 가이드라인의 지리적 범위는 1차적으로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까지 포괄되었다.</p> <p>Eurostat는 유럽공동체 가구패널조사(ECHP)를 발족시켰는데 이 조사의 목적은 중단적 체계내에서 소득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기타 변수에 관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었다.</p> <p>ECHP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조화로운 사회조사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국가적 조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공통된 ‘계획’ 설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공통된 설문을 사용함으로써 조사에서 공통된 개념과 내용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된 작동화도 가능하게 된다.</p> <p>또한 1993년 10월 개최된 15차 국제노동통계총회(ICLS)의 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국은 근로소득 측정법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e.g. Dupré, 1997)</p>
1996	<p>1996년 8월 개최된 제24차 국제소득 및 자산 협회(IARIW) 총회에서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에 대한 국제표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Smeeding, 1996). 이 토론회는 1977년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분배의 통계를 위한 잠정 가이드라인(UN 1977) 개정에 역점을 두었다.</p> <p>다시 한번, 이 토론에서의 주요 결론은 거시에서 미시로의 하향식 접근법은</p>

연도	내용
	<p>마이크로자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며, 거시에서 미시적 관점과 미시에서 거시적 관점이 모두 중시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p> <p>따라서 1996년 IARIW 총회에서는 명확한 도전과제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응용의 통합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UN 잠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이 두 가지 목표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NSO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내외 기관을 포함, 더욱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고민의 결과 1996년 캔버라그룹이 탄생하였다. 캔버라그룹은 가구소득분배 통계의 영역에서 국내외 통계 기관이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개념적 정의 문제, 실용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캔버라그룹은 이러한 통계 영역에서 수립된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돕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p> <p>캔버라그룹은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이 외에도 수많은 국제기관과 NSO,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가구소득 통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p>
1998	제16차 ICLS는 근로관련 소득의 측정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했다.(ILO, 1998)
2001	캔버라그룹이 발간하는 최종 보고서 및 권고는 가구소득분배 통계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개념적 실용적 문제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캔버라그룹의 권고는 미시적 수준의 가구소득 통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3	제16차 국제노동통계총회(ICLS)가 채택한 가구소득 통계를 위한 수정된 국제표준은 상당부분 캔버라그룹이 제기한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2001 캔버라그룹 권고 및 국제표준의 비교를 위해서는 부속서 1 참조) ECHP를 대체하여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통계(EU-SILC)가 도입되었다.

* 출처 : 캔버라그룹(CG) 핸드북 2판

[부록 표 2]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가계금융복지조사 (930001)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분류	지정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2010)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조사구와 총조사이후 산출된 아파트 조사구내 가구 (2012년) ○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
표본수	○ 전국 약 20,000가구(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문 1만가구) ○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CV를 설정하여 표본규모 확정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 4.5~5.5%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경북, 제주 : 5.5~7.0% -그 외 지역 : 8.0~9.5%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작성사항	[조사/보고항목] ○ 금융부문 :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61개 항목 ○ 복지부문 :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경제활동, 건강 등 142여개 항목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가계금융 · 복지조사보고서

주 : 통계분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공표범위 : 전국/시도

[부록 표 3] 가계동향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가계동향조사 (101006)
작성기관	통계청 복지통계과
통계분류	지정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p>○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p>*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소득통계와 지출통계가 분리되어 지출통계는 연간 주기로 작성 및 공표, 소득통계는 분기로 작성</p>
작성주기	분기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p>○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가구</p> <p>○ 조사모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부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신축아파트 조사구 내 일반가구(농어가제외) - 지출부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내 일반가구
표본수	<p>- 소득부문: 월간 약 4,300가구, 연간 약 4,300가구</p> <p>- 지출부문: 월1,000가구, 연간12,000가구 목표</p>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작성체계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 통계사무소(품목코드부여, 온라인입력) → 통계청
작성사항	<p>[조사/보고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을 재산소득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 가구실태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거처구분, 자동차 보유, 주거에 관한 사항, 사용면적, 주택소유여부 등 ○ 가계수지 : 가구주소득, 배우자 또는 기타 가구원 소득, 주거비/방송/교통/통신, 적금/보험/신용카드, 육아 및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 미발간

주 : 통계분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공표범위 : 전국

[부록 표 4] 농가경제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농가경제조사(101042)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분류	지정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 모집단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파악된 농가
표본수	리스트추출법에 의해 2,600농가 표본추출(1인농가 100농가 포함)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작성사항	작물재배현황, 수입·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농가 자산 및 부채 등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농가경제통계(익년 5월)

주 : 통계분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공표범위 : 전국

[부록 표 5] 임가경제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임가경제조사(136023)
작성기관	산림청
통계분류	일반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임가의 경제상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수립 및 임업경영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① 모집단 : 2010년 임업총조사에서 조사된 전국 임업 가구 ② 표본추출틀 -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재배(산림소유) 면적, 생산량, 재배본수 등에서 결측인 경우를 제외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한가구가 여러 가지 업종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총 96,108가구가 아닌 총 122,973가구를 조사모집단을 정의
표본수	전국 표본임가 1,100가구 - 3ha이상 산림을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가구 - 연간 임업종사일수 90일 이상 가구 ※ 조사대상 세부업종 10.육림업 30.벌목업 41.송이채취 42.수액채취 49.기타채취(버섯, 열매, 산나물, 약용) 51.밤나무 52.호두나무 53.대추나무 54.잣나무 55.뽕은감 59.기타 유실수 61.원목표고(시설) 62.원목표고(노지) 63.톱밥표고 70.산채재배 80.약용식물재배 91.조경수재배 92.분재재배 93.야생화재배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표본임가 → 조사대행기관(용역) → 임업진흥원(위탁) → 산림청
작성사항	- 일계부 :임가경제조사 참여가구 정보(성명, 연령, 연락처, 주소 등), 업종, 규모, 전 겸업여부, 임산물 재배현황, 자동이체내역(수입, 지출), 수입·지출내역, 임업노 동투입내역, 동력사용시간, 임업 및 농업 생산물 자가소비량, 임산물 현황 등 - 임가원부 :가구원현황, 임가자산, 임가 부채 등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임가경제통계(익년 5월)

주 : 통계분류 : 일반통계-조사통계

공표범위 : 전국

[부록 표 6] 어가경제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어가경제조사 (101044)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분류	지정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목표모집단 : 어가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내 전체 어가 조사모집단 (1차 추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파악된 어가 (2차 추출) 2011년 어업조사에서 파악된 어가
표본수	1,000어가
자료수집 방법	기타
작성체계	표본어가→조사담당자→지방청 및 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농어업동향과)
작성사항	○ 조사표 : 가구원 현황, 가구특성, 어선현황, 어장현황, 어로·양식 수입, 어업잡수입, 농업수입, 농어업외수입, 어업지출, 농업지출, 농어업외지출, 가계지출 등 ○ 어가원부 : 어가자산, 어가부채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어가경제통계(익년 5월) - E-book

주 : 통계분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조사범위 : 전국

[부록 표 7] 재정패널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재정패널조사 (341001)
작성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분류	일반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조세와 재정의 분배 및 재분배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 원시 자료의 구축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및 가구
표본수	전국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가구, 5014(패널조사)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가구, 가구원→민간조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작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 기본 현황 - 주택, 자동차 보유 현황 - 가계 지출 현황 -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 복지현황 - 자산 및 부채현황 -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환급금, 유가보조금 등 - 출산에 따른 비용 지출 ○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조사 시점 5월 1일 기준) - 소득 및 연금, 보험 관련 지출 현황 -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인식 -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 납세 관련 태도, 조세 및 세무 행정 평가 - 위험회피 - 건강 및 은퇴
통계 간행물명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기초분석 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주 : 통계분류 :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범위 : 전국

[부록 표 8]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한국노동패널조사 (336001)
작성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분류	일반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파악하여 노동시장분석, 고용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 98표본: 우리나라의 도시거주 가구와 해당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 제주도 및 시설거주가구는 제외 - 15세이상 가구원 중 의무병역 수행자는 제외 ○ 추가표본 -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토(제주도포함) 내의 이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표본수	98표본과 추가표본에서 추출된 6,500가구 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조사대상→전문조사기관→한국노동연구원
작성사항	○ 개인용 조사항목 중 동일문항인 행복관련 설문문항 추가 * 별첨자료인 (신)조사표 참조 - 취업자설문(3개 문항) - 미취업자설문(3개문항) - 신규조사자설문(3개문항)
통계 간행물명	간행물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주 : 통계분류 :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범위 : 전국

[부록 표 9] 한국복지패널조사 개요

통계명 (승인번호)	한국복지패널조사 (331009)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분류	일반통계 - 조사통계
작성목적	전 국민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를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파악하여 종단적 자료를 통한 계층별 소득변화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작성주기	1년
조사범위	전국
모집단 (조사대상)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추출된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30,000가구 (추가패널: 2010년 복지욕구실태조사의 일반 10,745가구, 저소득4,298가구)
표본수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 각각 3,500가구씩 총7,000여 가구 (패널마모에 따라 7차조사시 추가 패널 구축: 일반 및 저소득가구 각 900가구씩 총1,800가구)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작성체계	조사대상→조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사항	- 가구조사표 :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등 - 만15세이상 가구원용 조사표 :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생활실태 및 만족 및 의식, 사회적 자본, 생활습관 등 - 만9세이상 아동용 조사표 : 나의 학교생활, 나의 생각과 행동, 우리 부모님은, 나의 친구는, 나와 나의 가족 등
통계 간행물명	간행물 한국복지패널조사보고서(익년2월)

주 : 통계분류 : 일반통계-조사통계
조사범위 : 전국